

나라다운 나라 튼튼한 지방정부

성장·변화·공정·평화의 나라

더불어민주당

나라다운 나라 튼튼한 지방정부

성장·변화·공정·평화의 나라

더불어민주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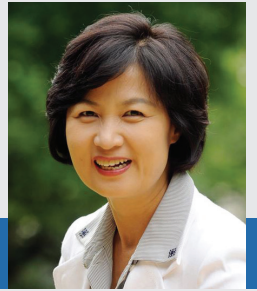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성장, 변화, 공정, 평화의 나라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입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5월입니다. 5월은 우리에게 아주 각별한 달입니다. 1년 전 박근혜 전 정부의 국정농단에 맞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든 5.9 대선이 있었고, 또 전두환 군사독재에 저항한 1980년 5.18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되돌리면 이 땅에 최초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한 국민정치참여가 실현된 1948년 5.10선거가 있었습니다. 5월은 역사의 굴곡 속에 민주주의를 이룩한 달이었습니다.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 속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 국민과 역사 앞에 소명과 사명으로 쉽 없이 달려왔습니다. 지난 1년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웠고, 핵과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 ‘나라다운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 국민’이라는 자긍심을 국민께 안겨주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 덕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

국민 여러분, 5월의 감동과 환희는 6월에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부패의 시기를 지나 민주주의를 재건한 대한민국은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문재인 정부의 여정에 함께 해주십시오. 집권 2년 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요구와 바람에 충실히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지방정부 구성이 필요 합니다.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를 힘차게 밀고 나갈 힘을 보태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약속을 지키는 정당입니다. 지난 1년 국정성과가 그 증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청년에게 희망을,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나라, 생활안전, 혁신성장, 한반도 평화를 약속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름으로 출마하는 전국의 후보자들이 이 공약집을 들고 국민 속으로 나아가길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더불어민주당의 손을 꼭 잡아주신다면 대한민국은 더 행복하고 더 안전하고 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8. 5.

추미애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를 완성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태년 의원입니다.

2016년 촛불시민혁명으로 문재인정부가 탄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촛불의 염원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변화는 시작되었고, 나라를 나라답게, 대한민국은 혁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7일에 있었던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의 시대'를 선언하는 역사적 쾌거입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나라다운 나라'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역할 속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이 국민들의 삶 전반에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앞장서 지역주민의 이해와 요구에 맞게 국정운영에 함께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과 철학을 가장 잘 아는 민주당 소속의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원들이 지역정치의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은 중앙과 지역이 함께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 성장·변화·공정·평화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번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4대 비전, 15대 정책과제와 5대 핵심약속을 제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태년

4대 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불어 잘사는 나라'. 일자리를 만들고,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고 희망찬 민생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 국민 개인들의 삶이 발전적으로 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는 나라'. 주민자치를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며 균형발전을 달성하겠습니다.

'평화로운 국민의 나라'. 촛불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평화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5대 핵심약속'에는 우리 사회 절체절명의 핵심적 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청년 행복, 미세먼지 해결, 국민생활안전, 일자리 중심의 혁신성장, 한반도 평화를 선정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6.13 선거를 통해 문재인정부, 민주당 정부의 완성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민주당은 국민들께 한 약속을 흔들림 없이 실천하며,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만 믿고,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8. 5.

김태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4대 비전

더불어
잘사는 나라

1. 일자리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
2. 상생하는 공정경제
3. 모두가 희망찬 민생경제
4.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

5. 보육과 교육,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6.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7. 성평등 사회와 가족행복 실현
8. 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강국
9. 어르신, 장애인에게 힘이 되는 나라
10. 집 걱정 없는 사회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는 나라

11.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12.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평화로운
국민의 나라

13. 촛불민주주의 실현
14.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15.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실현

15대 정책과제

5대 핵심약속



축사	002
발간사	004
4대 비전, 5대 핵심약속, 15대 정책과제	006

5대 핵심 약속 010

● 성장의 나라

더불어 잘사는 나라



01 일자리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	058
02 상생하는 공정경제	085
03 모두가 희망찬 민생경제	093
04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111

● 변화의 나라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



05 보육과 교육,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123
06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139
07 성평등 사회와 가족행복 실현	161
08 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강국	171
09 어르신, 장애인에게 힘이 되는 나라	183
10 집 걱정 없는 사회	189

● 공정의 나라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는 나라



11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199
12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209

● 평화의 나라

평화로운 국민의 나라



13 촛불민주주의 실현	237
14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245
15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실현	253

지역공약

264

더불어
민주당

5대 핵심약속

- 1 청년행복
- 2 미세먼지 해결
- 3 국민생활안전
- 4 일자리 중심의 혁신성장
- 5 한반도 평화

1

청년행복

청년 고용위기와
주거복지 문제,
특단의 대책으로
극복하겠습니다



청년고용확대 지원 강화

01 기업과 청년에 대한 고용인센티브 강화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업종 및 금액 대폭 확대

- 현행 3인 고용 시 1인 지원을 기업규모에 따라 30인 미만은 1인 고용 시부터, 30~99인은 2인 고용 시부터 지원 확대
- 현행 성장유망업종 지원에서 전체 업종(5인 이상)으로 확대
- 지원 금액은 1인당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

■ 중소·중견기업취업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다양화

- 신규취업청년 현행 2년형(1,600만원)에 생애최초취업자 3년형(3,000만원 자산형성)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
- 기존취업재직자 대상 5년형 내일채움공제에 정부 지원 신설(최대 3,000만원 자산형성)

■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비율 상향(현행 3%→5%)

- 경영평가 비중 확대 활성화

02 청년이 일하고 싶은 혁신산업단지 조성

❑ 벤처·창업기업, 문화·편의시설 등을 갖춘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조성

❑ 산업단지를 창업과 신산업창출이 이루어지는 활력 있는 창업생태계로 조성

- IT·바이오 등 첨단 신산업 유치, 창업공간 확충을 위해 지식산업센터(舊아파트형 공장)를 대폭 확대
-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을 통한 저렴한 임대공장 제공 추진
- 산학융합지구를 확대하여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과 청년고용 제고

❑ 산업단지별 특성과 수요에 맞춰 근로·정주환경 개선 추진

- 각종 편의시설 확대(휴식, 여가시설 등), 접근성 향상(출·퇴근 편의제고),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 직장형 어린이집 확대(일·가정 양립) 등을 통해 산단 근로자들의 삶의 질 증진

❑ 작업환경 개선과 생산기반 혁신 지원을 위해 스마트공장 집중 보급

- 제조공정에 정보통신기술(CT)을 접목한 스마트공장을 거점국가산단에 집중 보급하여 기업 경쟁력을 향상 지원

❑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에 대한 정부출연금 매칭 상향 조정

03 청년의 해외취업 확대 지원

❑ 청년들의 해외 일자리 취업 확대

- 국내·현지 연계 맞춤형 교육 제공 등 해외취업지원(K-Move) 내실화
- 한상기업들 청년채용 인턴십 채용 확대
- 국제기구 초급 전문가(JPO) 파견인원 확대
- 워킹홀리데이 신규협정 체결 및 기 체결국 쿼터 확대를 통해 우리 청년들의 해외 진출 기반 확대

❑ 해외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공공외교활동에 청년들의 기여 확대

- 청년 공공외교단,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제도를 확대 및 내실화하여 우리 청년들의 국제화 역량 강화
- 청년 예술가들의 해외 문화예술 프로젝트 적극 지원

❑ 해외봉사단원들이 지역전문가나 국제개발협력분야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해외봉사단원→관리요원→개발협력전문가로 이어질 수 있는 경력사다리 프로그램의 내실화
- 해외 국제개발협력 관련 기관들을 지역별로 통합하는 네트워크 구축 및 동 분야 청년의 해외 취·창업 지원을 위한 컨설팅 제공
- 한국국제협력단(KOICA) 내 개발협력커리어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여 해외 봉사단 귀국단원들에 대한 취업교육 및 매칭 서비스 제공

청년일자리, 공정한 출발 · 과정 지원 및 고용안전망 강화

01 청년고용의 공정한 출발 지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 청년의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지원(현행: 3개월 30만원 → '19년: 6개월 50만원)

▣ 청년취업지원 전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청년센터(Youth Space) 신설

▣ 투명채용(채용에 있어 평등한 기회 보장 및 공정한 채용기회) 확산 및 공공부문 채용비리 엄단 및 채용비리 제재 규정 신설

02 일과 생활의 균형 지원

▣ 청년여성 ‘(가칭)내 일 찾기 센터’ 운영

– 지역 대학, 여성인력개발센터, 취업지원기관 등에 위탁

– 청년여성의 좋은 일자리로의 구직의사 제고, 취 · 창업 연계 및 경력유지 지원

▣ 일 · 가정 양립 지원 확대

– 임신 상태에서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 육아휴직 급여 인상, 출산 첫 3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50%로 확대

–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현행 3일) 10일로 단계적 확대

▣ 중소기업 · 비정규직노동자 등의 일 · 가정 양립을 위한 거점형 공공어린이집 대폭 확대 설치

03 청년, 스스로 권리 찾기 지원

▣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청년을 참여주체로 보장

▣ 거점형 ‘한국형 노동회의소(미조직노동자 지원조직)’ 설립하여 청년 ‘스스로 권리 찾기’ 지원

04 청년일자리 고용안전망 강화

▣ 실업급여 지급기간의 연령별(청년층) 차등화 폐지

– 현 30세 미만 90~180일, 30~50세 미만 90~210일 → 50세 미만
120~240일로 일원화

▣ 자발적 이직자 중 장기 실직자부터 단계적 수급자격 인정 추진

▣ 초단시간 · 단기간 근로자 수급요건 완화(18개월 180일→24개월 180일)

▣ 청년 · 여성 등 근로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노동자 · 영세사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ETC) 확대 등 서민 · 중산층 세제지원 강화 등

– 가구 유형별로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단독가구의 연령요건을 폐지

청년창업활성화 환경 조성

01 청년고용의 공정한 출발 지원

- 창업투자 재원, 민관공동창업프로그램(TIPS) 운영사 및 보육 인프라 등이 갖추어진 지방을 중심으로 TIPS 타운을 확산
 - 지자체가 부지·건물·운영비 등을 확보하고 TIPS 운영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면 정부가 매칭 지원
- 지방소재 액셀레이터 및 창업팀 발굴·육성을 위한 Pre-TIPS 시범 사업 추진
 - TIPS 운영사 단독 또는 TIPS 운영사·액셀레이터 컨소시엄이 추천한 지방 소재 창업팀에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

* TIPS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성공벤처인 등 민간(운영사)을 활용하여 창업팀 선별, 민간투자-정부R&D를 연계하여 기술인력의 창업을 촉진

02 실패해도 재기 가능한 재창업걸림돌 허파

- 정책금융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보유 중인 창업 실패에 따른 부실채권에 대해 적극적인 조정 정리로 채무부담을 완화
 - 감면대상 채무 확대(이자→원리금) 및 채무 상환순서 변경(이자부터 상환→원금부터 상환)
 - 회수 가능성이 낮은 상각채권을 캠프에 매각

- 중소기업인의 조세특례 적용 일몰기한('18.12월)을 3년 연장 (~'21.12월)하여 재기중소기업인의 조세부담을 완화
- 현행 융자중심 창업지원제도를 투자중심 지원으로 전환하여 실패로 인한 재기부담을 원천적으로 해소

03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통한 청년 창업활성화

-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통한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
 - 창업공간, 청년임대주택, 각종 공공서비스 지원센터 등이 연계된 복합 앵커시설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조성
 - 지역의 건축가 및 설비·시공 기술자 등을 「터 새로이 사업자」로 지정하고 창업공간 임대, 초기사업비 지원을 통해 육성
 - 도시 내 국·공유지,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공간에 저렴한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을 조성하여 시세 50% 이하로 저렴하게 제공
- 전통시장 복합청년몰 조성확대('18년 10곳→'22년 40곳) 및 가업승계 청년상인 대상 컨설팅 및 신메뉴·신제품 개발 등 지원

04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을 통한 청년창업 활성화
기반 조성

■ 사회적경제 전문 인력 양성과 청년중심의 창업활성화 기반 조성

- 대학 내 사회적기업 리더 과정 및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확대 등 대학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과 분야별 전문 인력 양성
- 사회적기업가 및 소셜벤처 육성 등 청년 중심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성장을 지원

■ 퇴직 중장년의 기술과 경험이 창업영역에서 새롭게 활용되도록 지원

- 자금·공간 등 사업화 패키지 지원을 중장년과 청년이 공동으로 창업하는 세대융합형 창업팀을 20년까지 520팀 육성
- 대기업 등 퇴직 시니어가 보유한 기술·네트워크를 청년창업기업에 전수할 수 있도록 인턴·멘토 파견제도(장년인재 서포터즈)를 확대

청년 직업능력개발

01

4차 산업혁명 등 산업수요 반영 청년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 맞춤형 평생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중장기전략 수립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합동 직업교육 훈련 마스터플랜 마련
- 직업교육훈련제도간 연계 강화 및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 개편 등 추진

■ 청년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 청년들의 직업능력개발기회 확대를 위해 실업자 훈련 확대 운영
- 폴리텍에서 운영하는 신직종 하이테크 과정('18년 20개, 545명) 확대 등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 확대
- 디지털 세대를 타깃으로 한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구축

02 고졸 인력 양성 및 고졸재직자의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 일반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다양화 등을 통해 진로탐색 기회 및 기초직업교육 확대

* 일반고 재학생 등 대상 진로체험 기회 제공 사례

- 고교 1, 2학년 대상 기초직업교육 실시 : ('17년) 4개 교육청 1,170여명 참여
- * 개설 과정 : (대구)전문대 연계 일반고 기초직업교육, (광주)푸른꿈창작학교(대안형 직업교육 위탁 기관), (경기)방과후 기술교육 프로그램(특성화고 연계), (전북)일반고-전문대 연계 주말 강좌 등
- 전문대학 등 연계 2학년 위탁직업교육 실시 : ('17년) 7개 교육청 및 24개 전문대학 48개 과정 1,028여명 참여

▣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산·관·학 협력을 통해 일반고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의 진로개발 역량 강화

* 오산시 사례

- 운영 방식 : 산·관·학 협력을 통해 일반고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 * 프로그램 구성 : 이론, 체험, 일반교양
- 운영 형태 : 분야별 거점학교에서 진로진학프로그램 운영
- 운영 분야 : 진로탐색 10개 분야, 진로설계 2개반 운영
- * IT & 기계, 미디어, 관광, 보건 의료, 경찰행정, 건축융합, 실용음악, 뷰티, 유아교육, 요리 등

▣ 4차산업혁명 선도 고졸 인력 양성

- 특성화고에 스마트제조 등 4개 미래유망분야 교육과정 개발 지원

▣ 고졸재직자 선취업 후진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후진학자 학자금(희망사다리장학금 II 유형)을 신설·지원

- 현장경험이 있는 고졸인력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후진학 시 학자금 지원

▣ 선취업 후진학 친화적 학습환경 구축

- 후진학자 전담 과정 운영 대학에 지원 확대 및 권역별 우수 대학에 인센티브 부여
- 학습경험인정제도를 활용하는 우수대학에 대해 후진학자 전담과정 운영대학 지원 시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청년 맞춤형 주거 대책

▣ 5년 간 공적임대주택 25만실 공급 및 기숙사 5만명 지원

▣ 청년을 위한 금융지원 및 주거정보 제공 강화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도입,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에게 전세자금 대출 지원, 월세대출 한도 상향
- 청년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교육 등 주거정보 제공 강화

▣ 1-2인 가구 맞춤형 주거 공급 확대

- * 1인가구 : 540만, 2인가구 : 507만, 총 1,047만가구가 1-2인가구

▣ 청년 및 대학생을 위한 공공 셰어하우스 공급 확대

2

미세먼지 해결

미세먼지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01 미세먼지 원인 규명

미세먼지 원인 규명 및 예보 정확도 제고

- 빅데이터 · 인공지능활용 대기질 예보시스템 구축으로 고농도 시 정확한 예보 실현
- 다목적 관측을 위한 환경위성 운영으로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도 산정
- 미세먼지 원인 정밀 규명을 위한 과기부, 환경부 공동 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

02 미세먼지 원인물질 저감

발전 · 산업부문 배출량 획기적 감축

- 석탄화력 발전소 신규 승인 불허
- 기존 석탄화력발전소 대기배출기준 대폭 강화
- 시멘트 철강 등 다량배출사업장 대기배출허용기준 2배 강화
- 5년마다 대형발전소 등 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후 재허가
- 굴뚝원격감시체계(TMS)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물질 이중 감시체계 구축 추진
- '18년부터 「수도권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먼지총량제' 시행
- '19년 하반기 부터 질소산화물에 대한 대기배출부과금 적용

경유차 · 비산먼지 등 배출원 관리 강화

-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충전인프라 구축 강화
- '22년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촉진을 통해 경유차 적극 감축
- 운행경유차에 대한 매연 저감장치 부착, LPG엔진 개조, 미세먼지 · 질소산화물 (PM · 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 추진
- 노후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 도로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청소차 보급 확대
- 비상저감조치 법적 근거 마련 및 적용 확대
-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도 및 친환경차협력금제도 도입 추진
- LPG 차량 사용제한 조기 폐지
- 주택가 운행 중인 생활형 노후 경유화물차 LPG 전환 추진
- 이동형 미세먼지 집진기 설치 차량 운행 시범사업 추진

충보호어르신 · 영유아 등 건강 취약계층 보호

노인복지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등 환기 · 공기정화 시설 · 장비 설치 단계적 지원

-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및 아동 우선 지원

미세먼지 및 환경호르몬 정화 기능이 뛰어난 식물 보급 지원

- 정화 기능이 입증된 식물을 노인복지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 보급 지원
- 지역 농가 지원 정책과 연계 검토

미세먼지 정보 발령시 노인복지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등 이용자 마스크 지급

- * 노인복지시설 : 요양원,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 아동복지시설 : 보육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04 학교미세먼지 관리 강화

유치원, 초 · 중등학교, 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에코환경 조성 등을 통해 교실 미세먼지 걱정 해소

실내체육공간을 확충하고,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체육수업 운영

저소득계층 자녀에게 마스크를 지급해 건강관리 및 가계부담 경감

05 폐 질환 조기진단과 치료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폐 기능 검사' 추가하여 조기진단체계 구축

- 폐 기능 검사의 활성화를 통해 미세먼지 등으로 발생한 호흡기 질환의 진단율을 높이고, 적극적인 치료로 이어지도록 유도

06 환경 조성 및 국제협력 강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조성 및 산림관리 강화

- 오염원 발생 및 대기 정체구역에 미세먼지 저감숲 · 바람길숲 조성
- 주요 미세먼지 유입 길목에 미세먼지 차단벨트로 방진수림대 조성
- 적극적인 숲 관리로 산림의 미세먼지 여과 능력 최대화
- 가드너 등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일반 가정에 식물관리 프로그램 제공
- 실내공기질관리대상기관에 미세먼지 저감효과 식물 보급사업 추진

한 · 중(동북아) 협력 강화

- 미세먼지 한 · 중 정상급 의제화 등 협력체계 강화
- 미세먼지 이동 관련 정보공유, 공동연구 강화
-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NEACAP) 출범 추진
- 중국 북부지역 대기질 연구 한 · 중 공동관측 「청천 프로젝트」 수행

3

국민생활안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01 유해성 있는 생활화학제품 유통 사전차단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전과정 안전관리체계 구축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인정범위 및 지원 확대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및 살생물제 사전 승인제도 시행
- 화학물질제품으로 인한 피해구제제도 마련 및 환경피해조사부터 피해구제까지 유기적 연계·통합 방안 마련

■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및 유해정보 알권리 강화

-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등록 의무화 및 관리기반 강화
- 국내 화학물질 시험·분석기관 육성 및 흡입독성 시험시설 확충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유도
- 스마트폰으로 제품성분 및 리콜정보 확인, 불법·불량 의심제품 신고가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 확대
- 어린이 활동공간(학원, 체육시설 등) 및 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법제화

■ 발암물질 배출량 저감 추진

- 화학사고 및 화학물질 알권리 보장을 위한 지역 비상대비계획 수립 및 민관거버넌스 구축
-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마련

* 살생물제(Biocide)

Biocide란 사람과 동물을 제외한 모든 유해한 생물제거에 사용되는 물질을 의미함. 비농업용으로 사용되는 살충제, 살균제, 소독제, 보존제, 방부제, 향균제 등이 여기에 속함.

02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

- ▣ 지역별 먹거리위원회와 먹거리종합지원센터 설립으로 생산·유통·소비·환경·안전 전과정을 지역 내에서 선순환하는 지역 푸드플랜 수립 지원
- ▣ 지자체의 축산물 안전검사 장비 및 전문인력, 도축장 검사관 등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 계란 등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
- ▣ 초등학생에게 과일간식 제공
- ▣ 취약계층에게 농식품바우처(식품구입비)를 지급하여 적정 영양섭취 보장
- ▣ 소비자가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사용여부를 알 수 있게 표시제 개편

* EU는 GMO 완전표시제를 1997년부터 도입하여 시행 중

03 안전한 수산물 관리체계 강화

- ▣ 원산지 표시제 의무화 및 단속 강화
 - 가공품의 식염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위한 「원산지 표시법 시행령」 개정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내륙지원 신설 및 원산지 표시 단속 인력 확충
- ▣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추진
 - 수산물의 안전한 유통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생산부터 판매까지 유통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추진
- ▣ 분석장비 확충으로 수산물 안전성 검사율 제고
 - 생산·저장·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단계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성 검사 물량을 확대하고, 지자체 분석 장비 확충으로 안전성 조사기관 확대

04 교통사고 사망자수 절반 감축

- ▣ 대형교통사고 예방 로드맵 구축
 - 사고다발지점, 위험도로, 사고 잦은 곳 등 교통사고 취약부분 집중 개선
 - 도로안전설비 완비
- ▣ 보행자 중심으로 속도 관리체계를 전환
 - 도시부 제한속도를 60km/h→50km/h로 하향 조정(시범 실시 후 '19년 전국 확산)
 - 저속 제한구간 다양화, 차량 속도 저감 유도시설 설치 등으로 차량 속도저감 유도
- ▣ 운전자 중심 안전도로 환경 조성
 -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인프라 조기 구축
 - 졸음쉼터 추가설치 등을 통해 안전 고속도로 환경 조성
 - 마을주민보호구역인 빌리지 존의 확대 추진
- ▣ 차량, 신호시스템, 인프라에 대한 첨단기술 고도화, 상용화
 - 노후차량 차령제도 도입, 고령 화물 운전자 자격관리 강화
 - 버스·화물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 대형버스 비상제동장치 장착 지원
 - 교통량 분석을 통한 신호주기 개선 및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
- ▣ 운수 노동자 휴식 보장 및 처우 개선
 -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버스준공영제 확대
 - 버스운수업 실 운전시간 단축

*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 컨트롤 타워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
교통안전에 효과적일 뿐 아니라 불의의 상황에서도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 교통혼잡에서 오는 통행 속도,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음

05 재난·사고 전담 대응센터 설치 등 재난 신속 대응

- ▣ 지자체에 '재난·사고 전담 대응센터'를 설치
 - 지자체 컨트롤타워-중앙정부 지원의 체계화
 - 지자체 '재난전문인력' 확충·양성 및 위기관리 전문화
- ▣ 각 지역의 재해·사고 특성(예: 경주·포항 지진, 원전 주변지역 등)에 기반한 재난·사고 대응 매뉴얼 수립
- ▣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 지진대피소 설치·지정 확대 및 지진대비 교육·훈련 강화
 -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내진보강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 지진 조기경보 발표시간을 단축하는 등 조기경보 체계를 개선하고 지자체 등 상황 전파 시스템을 연계한 지진정보 전달체계 구축
- ▣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지진해일 분석·예측·전달 체계 고도화 등을 통한 대국민 재난정보체계 개선

06 초고층건축물 안전관리기준 및 다중이용업소 피난시설 설치기준 강화

- ▣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을 적극 추진하고, 기존 건축물의 보강을 촉진하여 재난·재해에 적극 대응
- ▣ 필로티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가연성 자재 사용을 억제
- ▣ 화재피난시설 의무설치 건축물 확대 및 소방시설기준 강화
- ▣ 초고층건축물의 안전관리기준 개선을 통해 재난안전사고 예방시스템 마련
 - 피난안전구역에 심장충격기, 방독면 또는 화생방 마스크 등 피난 설비 비치 의무화
- ▣ 다중이용업소 피난시설 설치기준 강화
 -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업소에 내부피난통로, 피난유도선 설치 의무화
 -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피난기구의 종류 확대

07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 ▣ **내항여객선, 낚시어선 및 연근해 어선 등 선종별로 안전대책을 추진하여 연안해상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등 최소화**
 - 여객선 및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안전 검사 단축 및 선장자격 조건(승선경력) 강화
- ▣ **어선 출입항신고, 위치보고, 조업제한, 안전조업을 위한 지원 및 벌칙 등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사고를 예방하고자 제도개선**
 - 어선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항로표지시설 확충 등 안전관리 체계 개선 추진
- ▣ **긴급신고전화 접수기능을 지방해경청으로 통합하고, 공청시스템 도입·운영하여 상황관리 체계 및 즉시출동태세 강화**
 - 해경 즉시 출동 태세 확립 및 구조역량 강화 등 구조체계 내실화
 - 구조거점 파출소를 지정(12개소)하여 초기 구조에 즉시 대응
 - 출동시간 목표제 및 도착시간 관리제를 통해 최단 현장 도착 시간 설정 등 출동태세 개선
- ▣ **해양안전 체험 프로그램 운영 추진**
 - 해양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기초안전수칙 숙지 교육 등을 통한 생활밀착형 안전체험관 개설 확대 추진
- ▣ **학교·관광서에서 기초해양안전체험관 설치·운영 시 안전비품, 교육 등 지원**
 - 수영장 등 일반시설 활용을 통한 '찾아가는 해양안전 체험교육' 확대 시행
 - 시범사업으로 물놀이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에 청소년 등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양안전 체험시설 구축·운영

08 주민밀착형 치안강화를 통한 범죄 예방

- ▣ **경찰 증원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범죄예방정책 추진**
 - 주민 의견에 따라 순찰 희망 장소를 수렴하여 탄력적으로 순찰 실시
 - 관할 구역 넓고 인구 급증 지역 등에 파출소 증설, 112 출동 시간 단축
- ▣ **범죄예방 디자인(CPTED)을 통해 취약구조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환경 구축**
 - 고화질 CCTV 설치 확대, LED 보안등 등 치안기본 장치 확충

* 범죄예방디자인(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도시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법으로 인적이 드문 공원이나 지하주차장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거나 밝은 계통으로 거리를 도색하고 어두운 골목길의 조명을 확대하는 것

09 119 구급서비스 확대

- ▣ **농어촌 지역에 119구급대를 추가 배치하고 구급인력 확충**
 - 3인의 전문 구급대의 응급처치를 통하여 예방가능 사망률을 감소

[농어촌지역에 119구급대 인력 및 차량 추가 배치]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인력(711명)	177	177	178	179
차량(95대)	23	23	24	25

10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수 절반 감축 및
건설 현장 안전관리 강화

■ '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수 절반으로 감축

- 산재사고로 사망하는 사망자수 연간 천여명('16년 969명)을 '22년까지 절반으로 감축
-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특수형태근로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
- 상시적으로 행해지는 유해·위험 작업의 사내(재)하도급 엄격히 제한, 중대재해와 산재다발 사업장에 대한 민·형사책임 강화 등
- 산업재해 발생 시 노동자 작업중지 요청 등 긴급대피권 강화

■ 일하다 다치면 모두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상제도 대상과 기준 확대

- 업무상질병 인정 기준 확대 및 판정과정의 전문성·공정성 제고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영업비밀정보 사전심사제도 도입
- 산재노동자 경제적 부담 해소 지원 방안 마련
-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의무적용 및 적용확대

■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 발주자의 단계별 책임을 명확히 하고 중대 재해발생시 입찰불이익을 주는 등 발주자·수급인의 책임을 강화
- '20년까지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구축 등 안전점검 관리체계 강화
- 타워크레인의 허위연식 전수 조사 등 건설기계 안전 강화
- 건설자동화, 스마트 건설안전 로드맵 마련 등 건설안전에 첨단기술 적극 활용

11

원전 안전 기준과 원전 주변지역 주민보호
대책 강화

■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승인제도 도입

- 가동중인 원전의 안전성을 10년 단위로 종합적으로 평가

■ 지진에 대한 원전부지 안전성 및 내진설계 기준 등을 최신 경주지역 지진상황을 반영하여 재검토

- 경주지진 원인단층 조사가 장기간 진행됨을 고려하여 안전기준 강화할 수 있는 것 우선 진행

■ 원자력 사고발생 시 사업자의 손해배상액 한도를 무제한 책임으로 하는 제도 도입

■ 원전 주변 주민, 방사능 종사자에 대한 기존역학조사방법을 개선한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추진

- 주민 전체 대상(기존 암환자, 소아·청소년 포함)으로 피폭선량 평가 실시, 기존 의료정보 연계 등으로 개인별 특성 반영

■ 사고 유형별 시나리오 개발 및 최적의 주민보호조치 마련을 위한 R&D를 통해 방사능방재체계 실효적 개선

■ 원자력안전정보 공개와 소통 강화

- 원자력안전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정

12 능동적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 온실가스 감축 강화

- 온실가스 감축(37%) 로드맵(해외감축분 12%→ 국내감축분 전환) 수정 및 보완
- 탄소포인트제 자동차로 확대('19년)
-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추진
- 저탄소 제품을 녹색제품으로 지정해서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추진

■ 이상기후 예방 대처능력 강화

- 지자체별 취약성 평가 및 적응을 위한 위험지도 구축
- 폭염 피해 대피소 지정·설치 및 지원 추진
- 취약계층이용 경로당, 공부방 등 공공시설에 쿨루프 페인트 등 지원
- 빗물마을 프로그램 확대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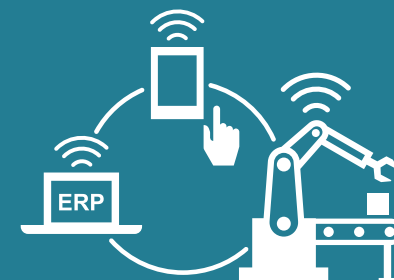
* 탄소포인트제도

가정, 사업,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가스 등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현금, 상품권, 그린카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파트 관리비 차감제도 운영 중

4

일자리 중심의 혁신성장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혁신성장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01

과학기술 혁신

예산·세제·제도 등 정부·민간의 R&D 투자 지원 강화

- ▣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 R&D 투자를 확대하고, 기초연구 지원 강화
 - AI·빅데이터·컴퓨팅 등 핵심 기술 고도화, 공공·산업분야 융합기술 개발 지원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확대, 연구자의 연구 몰입을 위한 R&D 평가·행정업무 간소화 추진
 - 대학의 기초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이공학술연구 R&D 확대
- ▣ 중소기업의 신성장 동력 R&D 세액공제 적용 대상 기술 범위를 확대하는 등 민간의 R&D 투자 촉진
 - 인공지능, 로봇, 드론 등 11개 분야 기술중 적용대상 범위 확대

02

혁신 창업

투자자금 증대·투자 선순환체계 구축, 신서비스 활성화 및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 ▣ 기술혁신형 창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및 인프라 조성
 - '사내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고,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를 연내 65개소 구축 완료·운영

*정부와 모기업이 공동으로 200억원의 재원을 조성하여, 혁신성·성장성이 높은 사내벤처 및 분사 창업을 지원

- ▣ 신규 벤처투자 펀드를 조성·투자 추진
 - 1.8조원의 벤처펀드를 결성하고, 청년창업·4차산업혁명 등 분야 집중 투자
 -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단계적 조성
 - 혁신기업에 대한 20조원 규모의 연계 대출 프로그램 마련

- ▣ 민간주도로 벤처확인 제도를 개편

- ▣ 코스닥·M&A 등 회수시장 활성화 등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

- ▣ 기술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프라 간 연계 체계 마련
 - 기술금융, 기술거래플랫폼 등 기술거래 및 평가에 필요한 인프라를 융합하여 기술 거래시장 선도

- ▣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주요 서비스 분야별 경쟁력 강화 추진
 - 신기술과 서비스의 결합 및 업종간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촉진
 -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 ▣ R&D, 해외진출, 세제·자금 지원 등을 통해 성장기반 강화

03

사람 혁신

교육방식 및 직업능력 개발체계 혁신을 통한 창의인재 육성

- ▣ 문제해결형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혁신 지원 확대
 -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지원사업 등 대학의 혁신적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융합 전공 도입 등 학사제도 개편
 -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통한 대학의 자율적 발전기반 조성, 기초학문 지원 강화, 학사제도 유연화, 산학협력 강화 등 취·창업 역량 제고
- ▣ 기술·직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등직업교육체제 혁신
 - 대학생·재직자 등 대상으로 직무능력 인증,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한 교육 현장성 강화
 - 전문대학 혁신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 및 인프라 구축, 현장중심 교육과정 개발·운영지원, 고등직업교육 실용연구 신설 등

- ▣ 대학원 특화형 창업 선도대학 운영, 대학 창업 펀드 확대
- ▣ 대학 내 유헴 공간을 지역기업과 연구소에 개방하여, 자금과 연구 역량이 부족한 성장단계 기업과 벤처 창업 활성화 지원
- ▣ 미래유망 분야 직업계 고등학교 학과 개편 및 4차 산업혁명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여 우수 고졸인재 양성
 - 취업 연계 프로그램, 일자리 매칭 지원 등을 통해 고교 졸업생의 취업지원 및 지역 사회에 필요한 인력 제공

04

사회제도 혁신

혁신성장 토대 마련을 위한 규제개선 본격 추진,
공공 조달을 통해 기업의 기술경쟁 유도 및
통해 기업혁신성장지원유도 및 혁신성장 지원

- ▣ 핀테크 · 드론 · 자율협력 주행차 등 혁신성장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 선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대 마련
- ▣ 혁신성장 옴부즈만 · 혁신성장 지원단 등을 통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 하고, 이해갈등 과제는 관련 전문가 · 이해관계자 등이 모여 규제혁신 방안을 집중 논의하는 등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 강구
- ▣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 제품 · 서비스의 개발 및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기술개발단계부터 긴밀히 소통하는 경쟁적 대화방식의 입찰제도 도입
- ▣ 신기술 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초기시장으로 활용 · 성장할 수 있도록 우수 R&D 결과물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 완화
- ▣ 창업 · 벤처기업 제품 집중구매제도 도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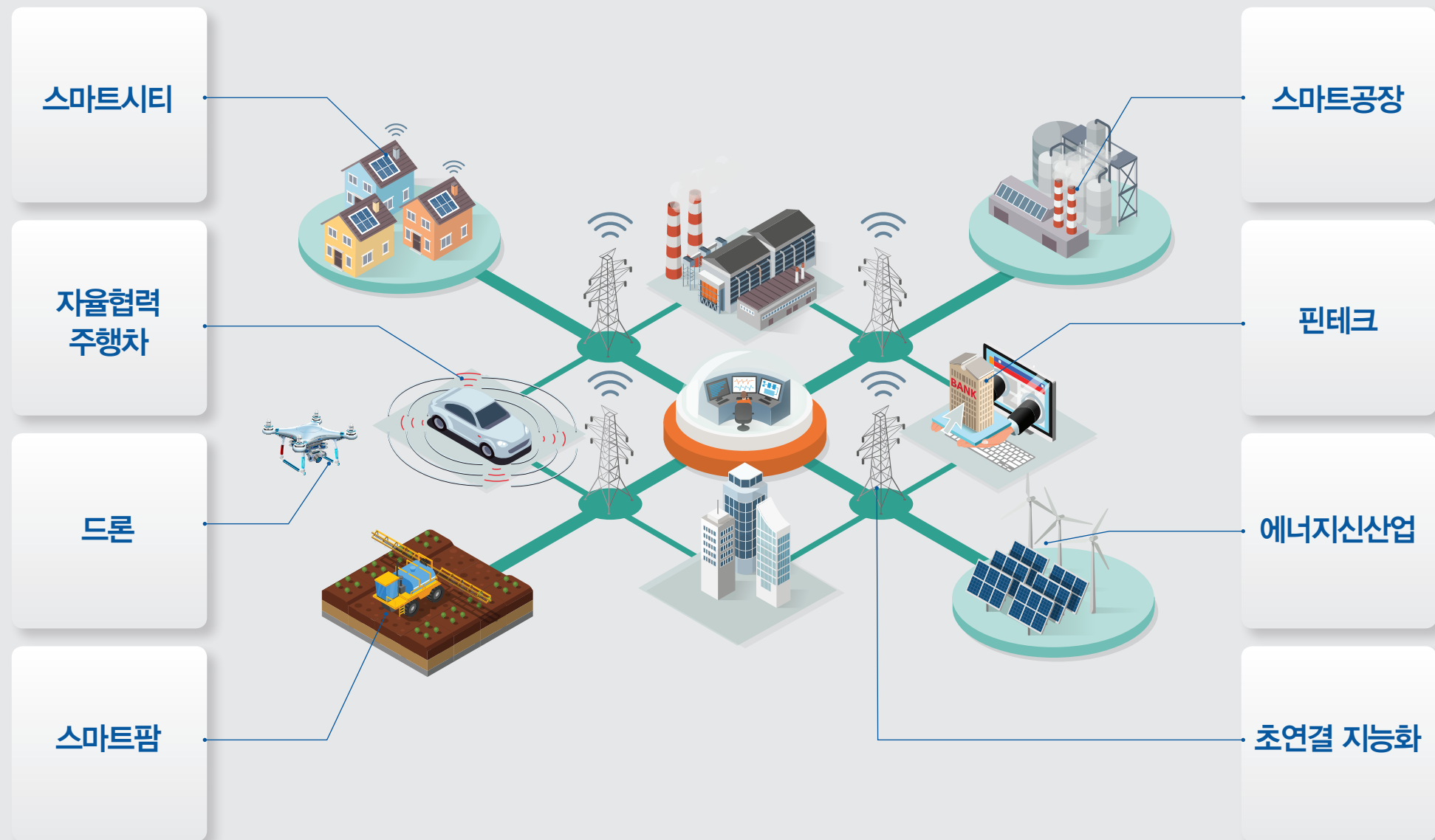
05

규제혁신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신산업·신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

- ▣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여 혁신적 사업시도를 장려함으로써, 지역의 신산업 육성과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추진
 - (규제 신속확인) 융합 신제품 · 서비스에 대해 규제의 존재 여부, 인허가 필요성 등 문의 시 신속한 확인답변 의무화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새로운 제품 · 서비스에 대하여, 제품의 안전성 등을 시험 · 검증하기 위해 제한된 구역 · 기간 · 규모 안에서 테스트를 허용하는 규제특례 신설
 - (임시허가) 안전성이 입증된 새로운 융합 신제품 · 서비스에 대하여 법령 정비 전에 임시로 허가를 부여하여 조기 시장출시 허용
 - * 관계 행정기관은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융합 신제품 · 서비스의 근거 법령정비에 착수하여야 함
-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혁신특구'를 신설하여 지역의 자발적 성장 기반 조성 등 지역혁신성장 견인
- ▣ 규제특례 신제품 · 서비스로부터 발생한 손해 배상 지원방안 마련
 - 규제특례로 인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 공제 가입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혁신적인 신제품 · 서비스 출시 지원
- ▣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하여 규제혁신 5법 입법 추진
 - 행정규제기본법, 산업융합법,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법, 지역혁신특구법('18년 3.15 발의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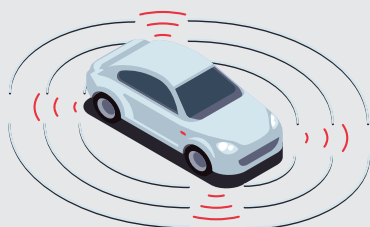
혁신성장 8대 선도 산업 육성 방안





스마트시티

- 군산, 창원 등 산업도시 등에 특성화된 스마트시티 확산 및 4차 산업혁명 테스트 베드 구축
- 스마트 시티에서 자율차 운행, 드론 물품수송 등의 포괄적 허용을 위한 규제 개혁
- 금년 중 1단계 시범도시를 선정하고, '22년까지 시범도시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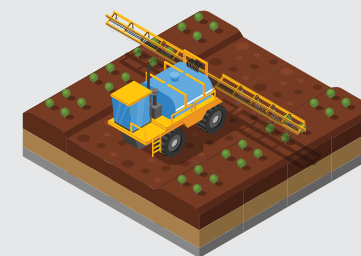
자율협력주행차

- '20년 자율협력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반 마련
 - 경기 화성에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협력주행차 테스트베드 구축(K-City)
- 자율협력주행 지원 스마트인프라(스마트도로 · 정밀도로지도)를 전국에 구축하고, 자율협력주행 대중교통(버스)을 시범운영



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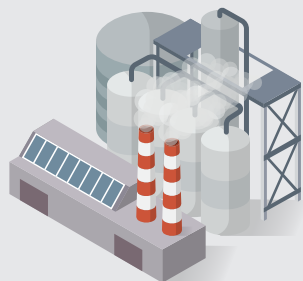
- 공공분야 드론수요기반 선도모델 발굴 · 확산
- 드론 시범 · 실증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드론 비행시험장 순차적 조성
- 스타트업 기업 등에 시제품 제작, 인증 · 특허,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는 기업지원 허브 운영
- 초정밀 GPS 기술, 무인항공기 안전기준, 미래형 자율비행 개인항공기 및 원격 · 자율 비행이 가능한 교통관리체계(K드론 시스템) 등 R&D 투자 확대



스마트팜

- 청년창업 보육사업을 신설해 '22년까지 전문인력 양성
-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으로 초기 창업 지원
- 실증단지를 조성
 - 기지재 · 식품기업 · 연구기관 · 농업인 공동 연구 · 실증으로 新품목 · 기술 개발 지원, 제품화 · 수출까지 연계체계 구축
- 스마트팜 혁신 거점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 올해 사업대상 시 · 도 선정, 거점별 핵심시설인 청년창업 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를 구축

스마트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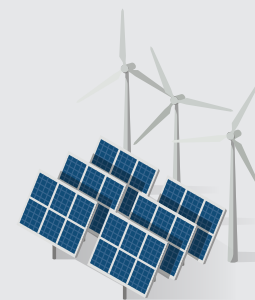
-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스마트공장 확산 거점 구축 ('18년, 6개 산업단지 → '22년, 10개)
-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업종별·규모별 시범 스마트공장 확대 ('18년, 6개 → '22년, 50개)
-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추진
 - * 정부와 대기업 공동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정부 : 대기업 : 중소기업 = 3 : 3 : 4)
- 스마트공장 운영 전문인력 양성('18년, 1만명 → '22년, 5만명)



핀테크

- * 핀테크(Fintech) : IT와 금융의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금융서비스 또는 상품을 창출하는 것
- 핀테크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민관 합동펀드 조성·운영
 - 펀드재산 일부를 핀테크기업에 투자토록 의무화하고, 초과달성시 펀드 운용사에 성과보수 등 인센티브 제공
 - 핀테크지원센터의 기능을 '상담·홍보 위주에서 스타트업 발굴·육성 및 사업화 지원, 전문인력 훈련·양성' 등으로 확대

에너지신산업



-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한 에너지신산업 육성
 -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확대, 소규모 사업 활성화, 농촌 태양광 확대, 분산전원 확대를 위한 전력중개시장, ESS, 연료전지 등 육성
- ICT 기술 기반 에너지공급 효율화 및 신서비스 시장 창출
 - 빅데이터 기반 에너지관리 서비스, 수요자원 거래시장(DR) 활성화, 태양광·풍력 기술개발, 신재생 파생서비스 산업(유지보수·발전량 예측 등) 활성화
-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제도 도입·운영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 개발이익을 지자체와 공유하는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여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가 지역발전과 연계될 수 있는 환경 조성
-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고려한 대규모 프로젝트 단계적 추진
- 미래기술을 집적한 스마트시티를 에너지신산업 육성 기회로 활용



초연결 지능화

- 데이터 구축 → 개방 → 유통·활용 순과정에 걸친 실제 데이터 기반 영역별(의료·교통 등) 국가 빅데이터 지원체계 마련
-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10기가 인터넷망 상용화를 통해 실시간 반응과 대용량 정보 전송이 가능한 네트워크 실현

5

한반도 평화

‘판문점 선언’ 이행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01

‘판문점 선언’ 이행으로 북핵문제 해결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 2018 남북 정상회담 합의사항인 판문점 선언 이행
- ▣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위험 해소
 -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 서해 평화수역 조성, 안전어로 보장
 - 군사문제 협의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장관회담,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 ▣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
 -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 · 북 · 미 3자 또는 남 · 북 · 미 · 중 4자회담 개최 추진
- ▣ 미 · 중 · 일 · 러 등과의 정상외교를 통해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확보
- ▣ 기존 남북합의를 존중하면서 새로운 남북관계에 맞는 기본협정 체결 추진
- ▣ 남북 고위급회담, 남북 국회회담 등 다양한 회담 추진
- ▣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추진
- ▣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02

북핵문제 진전 상황에 따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이행으로 남북 공동 번영 달성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 재개 추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이행

〈환동해권 경제벨트〉

- 경원선 철도 연결
 - 남측구간 복원사업(백마고지역~월정리역 9.3km) 재개
- 나진-하산 물류사업 재개
 - 나진항 현대화, 나진-하산 물류사업 확대 등
- 두만강(나선) 지역 남·북·중·러 공동개발, 단천 자원개발 협력 추진
- 남-북-러 에너지 산업협력 및 해양자원 공동이용
 - 가스, 전력, 석유 에너지 관련 협력을 통한 '동북아 슈퍼 그리드(super-grid) 구축
- 남북한-일본 환경 및 관광 관련 제조업 벨트 조성 추진
- 「서울-백두산」 남북 직항로 개설, 백두산-개마고원 연계 관광코스 개발

〈환서해권 경제벨트〉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해주-개성권, 남포-평양권, 신의주권 등 권역 개발 추진
 - 해주-개성권은 개성공단과 개성관광지구 개발 등과 연계하여 인천~연평도~해주~개성 개발
 - 남포-평양권은 평양과 남포 인근지역에 경제특구를 건설하고 한국의 수도권 및 기존 개성공단과 연결되는 부품산업벨트의 구축 추진
 - 신의주권은 신의주 시가지에 경제특구를 건설하고 중국 단둥과 연계한 부품산업 벨트의 구축 추진
- 한반도·동북아 고속 교통물류망 건설사업
 - 경의선 개보수, 한반도 철도 연결사업 단계별 추진 및 동북아 철도(TOR/TSR) 연결
 -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건설로 동북아 1일 생활권 구축
 - 新경의선 고속도로 신설 및 아시아안 하이웨이 H1 노선(부산~베이징~터키) 연결

- 한반도 통합철도망 협의체 구성 및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등 국제기구와의 동북아 운송협력 강화

〈DMZ 환경·관광벨트〉

- 남북 접경 지역에 생태·환경·관광의 3축 협력 사업
- 남북 공동의 수자원 관리와 인도적 차원의 초국경 방역·방재(홍수) 사업 추진
 - 콜레라, 조류독감 등 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공동 방역 사업 등
 - 백두산 화산 폭발 대비 공동 연구조사, 남북 공유하천 자연재해 대비 사업,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북한 하천관리 인력 양성
- 녹색한반도 사업
 - 북한 산림복구 기반 구축, 북한 황폐지 조림청정개발체제(CDM) 사업과 연계 추진
- 한강 하구 생태, 역사 관광벨트 조성 및 공동시장 개발

남북 접경지역 발전

- 통일경제특구 지정,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추진 등

3대 경제벨트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금강산, 원산, 단천, 청진, 나선을 남북이 공동개발 후 우리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

수도권, 개성공단, 평양·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경제벨트 건설

DMZ 환경·관광벨트

설악산,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잇는 관광 벨트 구축 및 DMZ를 생태·평화안보 관광 지구로 개발

03 남북 교류 다양화·활성화로 상생의 남북관계 형성

▣ 당국 간 협의, 민간교류 협력 보장을 위해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 역사·문화·종교·산림·환경·재해재난 등 다양한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 추진

– 여성·청소년·청년·노동계·방송계 등 다양한 부문·계층의 남북 교류협력 추진

▣ 국제체육대회, 학술회의 등 국제행사 계기 접촉 확대

– 2018년 아시안게임 남북 단일팀 추진 등 남북협력 강화

–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 남북 공동 유치 등을 지원

▣ 6.15 등 의미 있는 날을 계기로 민족공동행사 추진

▣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

–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자율성 확대

▣ 지자체 남북교류 본격적 추진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경평축구, 제주도 감귤지원 등 지역 특화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 지역 특화 산업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연계 추진 검토

– 남 제주도-북 양강도 등 남북 지자체별 자매 결연 추진

▣ 남북한 방송 협력 활성화 추진

– 남북간 정보통신기술(CT) 상생환경 조성

– 북한의 정보통신기술 격차 해소 지원

– 북한 내 지상파방송 외에 케이블, 위성, 인터넷TV(IPTV) 등 다양한 방송 플랫폼 설치 및 N스크린 등 방송통신 융합형 매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 남북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및 중계차량 등 장비 지원을 통한 교류 활성화

– 지속적이고 긴밀한 남북간 정보통신기술, 방송 등 미디어 교류 활성화를 위한 상시 전담창구 마련

04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 인도적 문제 해결

▣ 이산가족 상봉 상시 정례화 추진

– 8.15 계기 이산가족, 친척 상봉을 성공적으로 진행

–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면회소, 제2, 제3 면회소 설립 등을 통한 대규모 상시 상봉 추진

– 화상 상봉, 서신 교환, 고향 방문 등을 추진

▣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 추진

– 국군포로·납북자 생사 확인 및 상봉 성사를 위한 노력 지속, 당사자 의사에 따른 해결책 추진

▣ 북한주민의 삶의 질과 인권개선을 위한 종합적 접근

– 대북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등을 통한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 지원

–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통한 정부-민간-국제기구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체계 구축

– 탈북민 특화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한 삶의 질 개선 추진

– 탈북민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 지속 추진

– 탈북민 지원 거버넌스 강화: 하나재단 역할 강화 및 지역적응센터를 지역통일센터로 전환 추진

05 통일공감대 확산으로 평화 · 통일인지 고양

▣ 대북정책 · 통일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인 ‘통일국민협약’(통일 약속) 체결 추진

▣ 지역통일센터 확대 설치를 통해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지역 거점 구축

- 평화 · 통일문제 공론화, 통일교육, 탈북민 정착지원 등 지역사회의 통일 관련 기관 · 단체간 협력 거버넌스 체계화
- 인천에 설치된 지역통일센터를 조속히 광역 시 · 도에 확대 설치

▣ 균형 있는 평화 · 통일교육 확대 · 강화

- 평화 · 통일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공감대 확산
- 청소년 대상 평화 · 통일교육 확대 · 강화
- 통일 관련 전문인력 양성 추진 및 국제사회 한반도문제 신진 전문가 양성, 재외동포 2 · 3세 통일교육 강화 등

06 한반도 평화구축을 기반으로 신남방, 신북방 정책을 연계하여 동북아를 넘어서는 평화, 번영 외교 추진

▣ 한반도 신경제지도 추진을 통해 한반도를 동북아 평화경제협력의 허브로 발전시키고, 신남방, 신북방정책을 연계하여 대륙과 해양을 포괄하는 동아시아로 우리의 평화번영정책의 외연을 확대

▣ 동북아 다자협력을 주도하여 공동번영을 향한 지속가능한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노력 추진



I 더불어 잘사는 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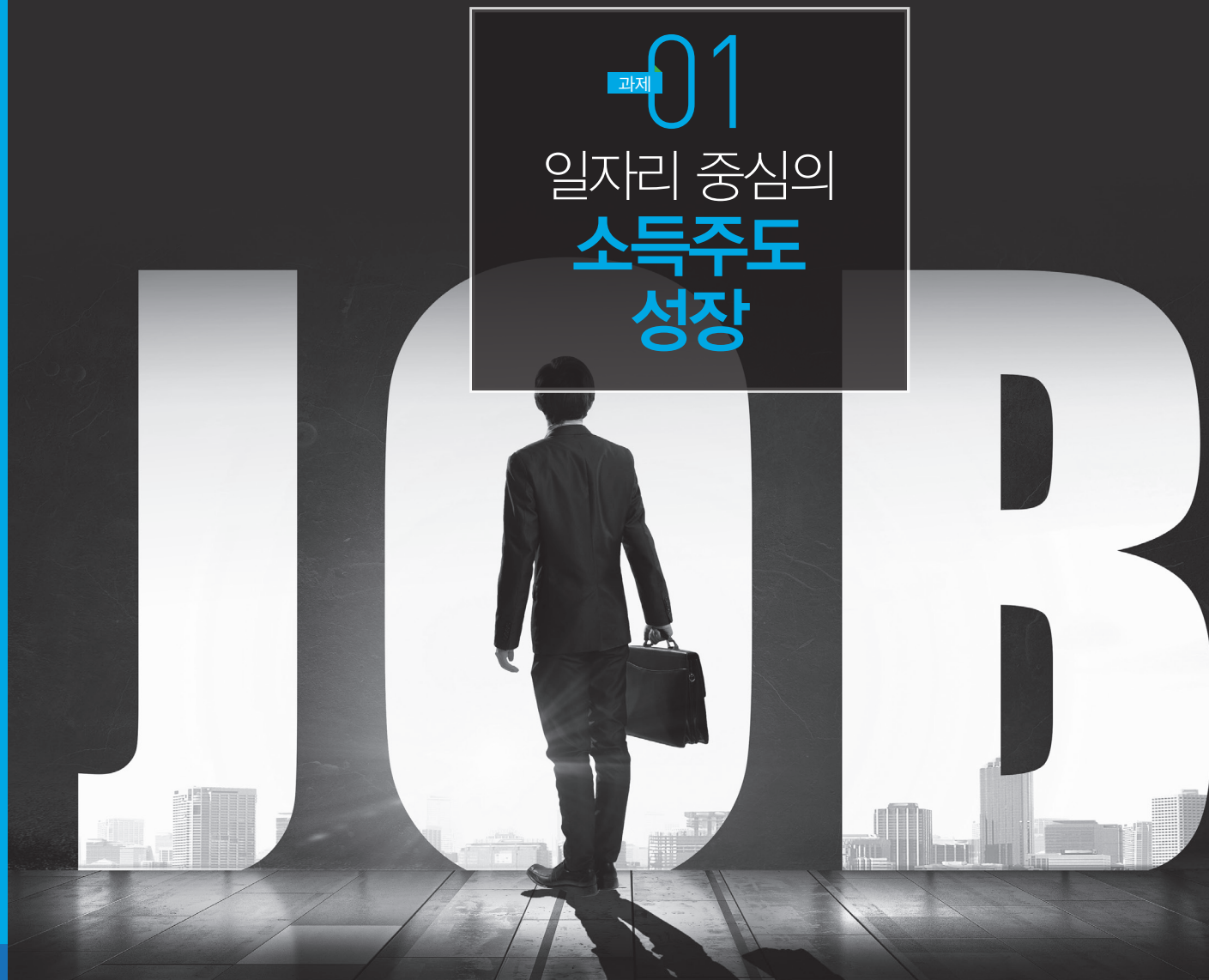
- 한국경제는 저성장 고착화와 함께 양극화와 저출산 심화, 인구 구조의 고령화, 가계부채의 급증 등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음. 문재인 정부는 한국경제가 직면한 현안을 극복하기 위하여 소득 주도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경쟁, 혁신성장을 추진 중임.
-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한 민주당의 약속 역시 일자리 중심의 소득주도성장, 상생하는 공정경제, 모두가 희망찬 민생경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요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사람중심 경제’ 지향성을 명확히 하여 한국경제가 직면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것임.
- 일자리 중심의 소득주도성장은 중견기업육성 및 창업 등으로 지역·성·연령별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향상이 소비·투자·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어 낼 것임.
-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지원 및 보호제도를 정비하여 열심히 일하는 경제주체 모두가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따뜻한 민생경제를 만들어 갈 것임.
- 혁신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기술 혁신, 혁신 창업, 사람 혁신, 사회제도 혁신 등을 적극 추진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 및 제도를 개선할 것임.

더불어 잘사는 나라

- 01 일자리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
- 02 상생하는 공정경제
- 03 모두가 희망찬 민생경제
- 04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과제 01

일자리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노동·일자리 전담부서’를 설치하겠습니다

□ 지자체 단위 ‘독립된’ 노동·일자리 전담부서 설치·운영

- 노동정책 분야 관련 조례 제정 및 예산 확충
-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 체결 확대를 통한 지자체 노동관련 업무권한 확대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확대

- 광주형일자리 등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 전국 확산
- 고용영향평가 등과 연계하여 지역·산업 중심의 고용정책 수립

□ 지역 내 지속가능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시

- 지자체 단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조례’ 제·개정을 통해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청년이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벤처·창업기업, 문화·편의시설 등을 갖춘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조성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 산업단지를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루어지는 활력 있는 창업생태계로 조성

- IT·바이오 등 첨단 신산업 유치, 창업공간 확충을 위해 지식산업센터(舊아파트형 공장)를 대폭 확대
-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을 통한 저렴한 임대공장 제공 추진
- 산학융합지구를 확대하여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과 청년고용 제고

□ 산업단지별 특성과 수요에 맞춘 근로·정주환경 개선 추진

- 각종 편의시설 확대(휴식, 여가시설 등), 접근성 향상(출·퇴근 편의 제고),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 직장형 어린이집 확대(일·가정 양립) 등을 통해 산단 근로자들의 삶의 질 증진

□ 작업환경 개선과 생산기반 혁신 지원을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

- 제조공정에 정보통신기술(CT)을 접목한 스마트공장을 거점국가산단에 보급하여 기업 경쟁력 향상 지원

□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에 대한 정부출연금 매칭 상향 조정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으로 우리경제의 허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월드챔프 1조 클럽 80개('22년)까지 육성

* 월드챔프 1조클럽 : 매출액 1조원 이상이며 혁신역량이 우수한 중견기업

❑ 글로벌 혁신 역량 강화로 중견기업 수를 5,500여개('22년)로 확대

- 중견기업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사업간 연계 강화
- 신사업 진출, M&A 등을 지원하는 중견기업 혁신성장 펀드 조성
- 자동차·전자 등 업종별 핵심 R&D 사업에 중견기업 참여 활성화
- 바이오헬스·ICT융합 등 신산업 중심 월드클래스300 2단계 사업 추진
- 중견기업 전용 성과지향 R&D를 통한 기술 사업화 촉진

❑ 해외마케팅, 기술혁신지원으로 수출 중견기업 비중을 50% 이상 ('22년)으로 제고

- 수출도약 중견기업 500개를 선정하여 수출메뉴판 제공 등 패키지 지원
- 초기, 내수·전속형 중견기업의 맞춤형 해외시장 개척 지원
- 유망 중견·예비중견기업 정책자금 및 무역보험 지원 확대

❑ 지방 소재의 우수 중견기업을 지역 산업 생태계의 핵심으로 육성

- 지역대표 중견기업 50개를 선정하여 R&D·해외마케팅 등 집중 지원
- 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석·박사급 고급 연구인력 채용 지원

지역 창업 붐이 일어나도록 민관공동창업프로그램(TIPS)을 확산시키겠습니다

❑ 창업투자 자원, TIPS 운영사 및 보육 인프라 등이 갖추어진 지방을 중심으로 TIPS 타운을 확산

- 지자체가 부지·건물·운영비 등을 확보하고 TIPS 운영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면 정부가 매칭 지원

❑ 지방소재 액셀러레이터 및 창업팀 발굴·육성을 위한 Pre-TIPS 시범 사업 추진

- TIPS 운영사 단독 또는 TIPS 운영사·액셀러레이터컨소시엄이 추천한 지방 소재 창업팀에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

* TIPS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성공벤처인 등 민간(운영사)을 활용하여 창업팀 선별, 민간투자-정부R&D를 연계하여 기술인력의 창업을 촉진

실패해도 재기가 가능하도록 재창업의 걸림돌을 과감히 걷어내겠습니다

- ❑ 정책금융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보유 중인 부실채권에 대해 적극적인 조정 정리로 채무부담을 완화
 - 감면대상 채무 확대(이자→원리금) 및 채무 상환순서 변경(이자부터 상환→원금부터 상환)
 - 회수 가능성이 낮은 상각채권을 캠프에 매각
- ❑ 중소 재기기업인의 조세특례 적용 일몰기한(18.12월)을 3년 연장(~'21.12월) 하여 재기중소기업인의 조세부담을 완화
- ❑ 현행 융자중심 창업지원제도를 투자중심 지원으로 전환하여 실패로 인한 재기부담을 원천적으로 해소

창업 초기 단계 혁신형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 제품 납품 기회 부여를 통해 창업기업 및 혁신형 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도입
 - '18년에 한국전력, NH, 한국도로공사 등 6개 기관과 430억 규모로 시범구매 추진 예정
- ❑ 시범구매제도 참여 대상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창업기업 등이 기술개발 신제품의 시범 구매를 신청하면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매가능 여부를 판정한 후 공공기관이 중기부와 약정한 금액만큼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제도

지역 산업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 지역 산업위기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패키지형 지원체계 구축

- (단기 긴급지원) 근로자 · 실직자 생계안정, 전직 및 재취업 지원, 지역 중소 · 중견 기업 경영안정 지원, 지역 소상공인 · 자영업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등
- (지역산업 중장기 발전 지원) 지역의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기업 유치 등 경제적 기반 확충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등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시 지역고용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

- 지역산업 위기대응 및 산업 구조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고용충격에 체계적 대응
- 산업 및 고용 전문가 공동현장실사를 통해 위기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분석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종합적인 위기극복 프로그램 수립 지원

■ 지역의 산업기반, 입지조건, 인력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역별로 특화된 대체 · 보완산업 육성방안 마련

■ 갑자기 발생하는 지역산업 구조조정과 지역 고용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미래 투자를 위한 재원조달 근거 마련

특단의 ‘청년일자리 대책’으로 청년고용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 기업과 청년에 대한 고용인센티브 강화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업종 및 금액 대폭 확대
 - 현행 3인 고용 시 1인 지원을 기업규모에 따라 30인 미만은 1인 고용 시 부터, 30~99인은 2인 고용 시 부터 지원 확대
 - 현행 성장유망업종 지원에서 전체 업종(5인 이상)으로 확대
 - 지원금액은 1인당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
- 중소 · 중견기업취업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다양화
 - 신규취업청년 현행 2년형(1,600만원 자산형성)에 생애최초취업자 3년형(3,000만원 자산형성)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
 - 기존취업재직자 대상 5년형 내일채움공제에 정부 지원 신설(최대 3,000만원 자산형성)
-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비율 상향(현행 3%→5%)과 경영평가 비중 확대

■ 청년고용의 공정한 출발 지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 청년의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 지원
(현행 3개월 30만원 → '19년 6개월 50만원)
- 청년취업지원 전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청년센터(Youth Space) 신설
- 투명채용(채용에 있어 평등한 기회 보장 및 공정한 채용기회) 확산 및 공공부문 채용비리 엄단 및 채용비리 제재 규정 신설

❑ 4차 산업혁명 등 산업수요 반영 청년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 청년들의 직업능력개발기회 확대를 위해 실업자 훈련 확대 운영
- 폴리텍에서 운영하는 신직종 하이테크 과정 ('18년 20개, 545명) 확대 등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 확대
- 디지털 세대를 타깃으로 한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구축

❑ 직장문화 개선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 · 감독 강화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성희롱 방지 종합방안 마련 및 시행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해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고졸재직자의 선취업 후진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맞춤형 평생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중장기전략 수립

- 4차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합동 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 마련
- 직업교육훈련제도 간 연계 강화 및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 개편 등 추진

❑ 일반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다양화 등을 통해 진로탐색 기회 및 기초직업교육 확대

* 일반고 재학생 등 대상 진로체험 기회 제공 사례

- 고교 1, 2학년 대상 기초직업교육 실시: ('17년) 4개 교육청 1,170여명 참여
- * 개설 과정: (대구)전문대 연계 일반고 기초직업교육, (광주)푸른꿈창작학교(대안형 직업교육 위탁기관), (경기)방과후 기술교육 프로그램(특성화고 연계), (전북)일반고-전문대 연계 주말 강좌 등
- 전문대학 등 연계 2학년 위탁직업교육 실시: ('17년) 7개 교육청 및 24개 전문대학 48개 과정 1,028여명 참여

❑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산 · 관 · 학 협력을 통해 일반고 진로 · 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의 진로개발 역량 강화

* 오산시 사례

- 운영 방식 : 산 · 관 · 학 협력을 통해 일반고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 * 프로그램 구성 : 이론, 체험, 일반교양
- 운영 형태 : 분야별 거점학교에서 진로진학프로그램 운영
- 운영 분야 : 진로탐색 10개 분야, 진로설계 2개반 운영
- * IT & 기계, 미디어, 관광, 보건 의료, 경찰행정, 건축융합, 실용음악, 뷰티, 유아교육, 요리 등

❑ 4차 산업혁명 선도 고졸 인력 양성

- 특성화고에 스마트제조 등 4개 미래유망분야 교육과정 개발 지원

❑ 고졸재직자 선취업 후진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후진학자 학자금(희망사다리장학금 II 유형)을 신설 · 지원

- 현장경험이 있는 고졸인력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후진학 시 학자금 지원

❑ 선취업 후진학 친화적 학습환경 구축

- 후진학자 전담 과정 운영 대학에 지원 확대 및 권역별 우수 대학에 인센티브 부여
- 학습경험인정제도를 활용하는 우수대학에 대해 후진학자 전담과정 운영대학 지원 시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건강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0

❑ 청년여성 ‘(가칭)내 일 찾기 센터’ 운영

- 지역 대학, 여성인력개발센터, 취업지원기관 등에 위탁
- 청년여성의 좋은 일자리로의 구직의사 제고, 취 · 창업 연계 및 경력유지 지원

❑ 경력단절여성 지원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충

- 경력단절여성 인턴 채용 후 정규직 전환 기업의 취업장려금 지원 확대
- 양질의 일자리 연계를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충 및 기능 강화
- 지역 새일센터 '21년까지 매년 5개소 신규 지정('18년 155개소 → '21년 175개소 확대)

❑ 지역의 일하는 여성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 지역거점기관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여성인재아카데미 교육 실시 및 네트워크 구축

❑ 일 · 가정 양립 지원 확대

- 임신 상태에서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 육아휴직 급여인상, 출산 첫 3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50%로 확대
-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현행 3일) 10일로 단계적 확대

11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로 일 · 가정 양립을 지원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 비정규직노동자 등의 일 · 가정 양립을 위한 거점형 공공어린이집 대폭 확대 설치

-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통한 영세 중소기업, 저소득 · 맞벌이 노동자의 육아부담 완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저출산 문제 극복

* '18년 '노동자 친화형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3개소 시범운영

국가와 자치단체가 중소기업 노동자 및 비정규직노동자 등의 보육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밀집지역 인근 '거주지 또는 교통요지'에 설립하여 야간 및 휴일 또는 일시보육 등 노동자 친화적 '시간 · 장소 · 서비스방식' 등으로 운영

12

신중년, 인생이모작 설계를 지원하겠습니다

■ 지자체 내 신중년 전용공간인 신중년 센터 설치

- 지자체 청사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 공공기관 유휴공간 활용
- 센터 내 동아리방 및 사랑방을 설치하여 자유롭게 취미 및 여가활동을 하며 정보를 교환하도록 지원
- 노후준비 서비스 등 인생이모작 설계에 필요한 공공서비스 연계 제공
- 교육 및 직업훈련 수요자와 평생교육시설 및 폴리텍대학 등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필요 시 광역단위 서비스 제공기관 확충), 지역사회 일자리 및 구인 업체 등 정보 제공

■ 신중년을 위한 (가칭)생애전환문화예술학교와 연계하여 문화예술 활동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제공

■ 퇴직 중장년의 기술과 경험이 창업영역에서 새롭게 활용되도록 지원

- 자금 · 공간 등 사업화 패키지 지원을 통한 중장년과 청년이 공동으로 창업하는 세대 융합형 창업팀을 '20년까지 520팀 육성
- 대기업 등 퇴직 시니어가 보유한 기술 · 네트워크를 청년창업기업에 전수할 수 있도록 인턴 · 멘토 파견제도(장년인재 서포터즈)를 확대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으로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2017.7.20.)대로 추진

- (1단계)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기간제('18년 상반기 중 정규직 전환결정 완료) 파견·용역 비정규직(~2020년) 정규직 전환
- (2단계)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553개), 공공기관 자회사(41개), 지방공기업 자회사(6개) 등 총 600개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18년 .6월~)
- (3단계) 민간위탁기관 실태조사 후 추진('18년~)

▣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여 정규직 채용원칙 확립

- 기간제법·파견법의 기간제한(최대 2년) 방식을 사용사유제한 방식으로 개편 : 상시·지속적 업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는 기간제·파견노동자 사용 원칙적 금지
- 기업의 정규직 채용 분위기 조성·확산 : 대기업·상장기업의 고용형태공시제·기업공시제 공시범위 확대, 정규직 채용 우수기업에 대한 공공입찰시 가점 부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유도를 위한 재정·세제지원 확대

▣ '비정규직 차별 ZERO화' 실현

-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 비교대상 노동자를 동종업무까지 확대, 차별의 합리적 사유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직업경력이 고려 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적용, 노동조합 등에 차별시정 신청권 확대 및 임금 등 관련 정보제공 청구권 신설
- 1년 미만 근속 노동자(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 퇴직급여 보장

▣ 도급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 등 법적 보호 강화

- 사내하도급노동자 보호 : 원·하청 노동자간 불합리한 임금격차 완화 및 사내하도급노동자 고용승계방안 마련, 하청노동자 임금체불·적정임금·안전관리 등 원청 책임 강화, 도급·파견 구별기준을 재정립하고 근로감독관 증원하여 불법파견 감독 강화
- 특수고용노동자 보호 :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조법 개정 등 제도적 보호방안 마련, 산재보험 적용 직종 확대 및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 고용보험 의무적용 추진

▣ 비정규직 '스스로 권리찾기' 지원

- 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대표'에 비정규직 대표 참여 및 활동보장 제도화
- 초기업단위 노조활동 지원 : 노사자율로 초기업단위 교섭관행을 형성해 나가도록 컨설팅 등 각종 지원방안 마련, 원·하청 등 복수사용자에 대한 교섭단위를 통합하여 초기업단위 교섭을 결정하는 방안 마련, 거점형 '한국형 노동회의소(미조직노동자 지원조직)' 설립·지원

‘체불임금 ZERO 시대’ 실현하겠습니다

14

▣ ‘일자리 최소기준 준수’를 위한 현장 감독 강화

- 근로감독행정당국 전방위적 체불감독 및 상습체불 중점감독 지원
- 원청 책임 강화: 임금체불 건설업 불법하도급 업체 영업정지 등 제재 강화, 1차 도급 시에도 도급인 임금지급 연대책임 인정

▣ 재직자 체당금 제도 신설 및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제 적용

- 재직 중인 노동자를 위한 ‘재직자 체당금’제도 신설
- 퇴직노동자만 적용되던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 재직근로자에게 적용

▣ 지급절차 간소화로 체당금 수령기간 대폭 단축(7개월 → 2개월)

- 체불사실 확인 후 사업주가 일정기한 내 자율적으로 청산하지 않으면 바로 체당금을 지급(지급 소요기간 현행 7개월 → 2개월), 도산 등 사실인정 및 법원 확정판결 절차 폐지

▣ 체불청산 전담기구 신설

- 현재 분산되어 있는 체불청산·추심업무의 일원화, 체불청산 원스톱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가칭) ‘임금채권보장기구’ 신설 추진

▣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 체당금 지급 시 체불지급액에 대해 부가금 제도 도입(체당금 지급횟수에 따라 100~300%)
-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등 처벌 강화
-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현행 3년 → 5년) 검토

* 체당금

기업에서 퇴사한 노동자가 임금 혹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추후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노동자에게 먼저 지급하는 금품

노동시간 단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5

▣ 노동시간 단축입법(1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 시행에 따른 신규채용 및 임금보전 지원 강화

-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개편하여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신규채용 인건비 및 기존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 지원 강화
- 기업의 신규채용 시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과 함께 청년·중장년·여성 등 현 고용창출 지원제도 추가 연계 지원
-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평균임금 감소 시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추진으로 퇴직급여 손실 방지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의 제외업종에 대한 특화 지원·관리

- 노선버스업, 건설업, ICT서비스·SW업, 콘텐츠·방송산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등 특례제외업종별 특성에 맞는 노·사·정 및 중앙정부·지방정부 협력·지원방안 마련
-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보조교사 등 재정지원일자리의 교대제 개선에 따른 인력 충원 등 지원방안 마련

▣ 법정 시행일 이전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우대 지원

- 조달계약 낙찰자 결정 시 가점 부여 등 공공조달 우대 추진
- 국책은행의 일자리 금융상품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금리·용자 한도 등 우대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기업 선정 시 우선 심사대상에 추가 등 정책자금 지원

- 조기단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게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 사업* 지원 대상 선정 시 우대, 제조업 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자금 우선 용자
 - * 사업주 설비투자비 총 금액의 2/3 이내로 최대 50억원 지원,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이율: 1~2%
- 제조업 등 50인 미만 기업에 법정시행일까지 산재보험요율 10% 경감
- 고용허가제에 따른 신규 외국인 노동자 배정 시 가점 부여
-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및 가족친화기업 인증 심사시 가점 부여
 - *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에 대해 인증패 수여, 금융·정책자금 지원, 세액공제, 세무조사 유예 등 행·재정적 지원

▣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구인난 완화를 위한 지원

- 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확대 등 중소기업 재직자 직업훈련 지원 강화 및 인력수요가 많은 직종을 중심으로 지역산업맞춤형 훈련 확대
-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을 '일자리 발굴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여 구인 관련 애로사항 신속 해소 및 일자리 매칭 인프라 강화

▣ 생산성 향상 및 일하는 방식 개선

- 장시간 노동개선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지원 규모 확대하고, 노동시간 개선이 시급한 특례 제외 업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표준 모델 개발
- 현장 핵심기술 체계화 사업(K-앱시스트)* 참여 기업 선정 시, 노동시간 단축 중소기업 우선 지원
 - * 디지털 기술(VR, AR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을 내부 인력에 전수할 수 있도록 현장진단 및 기술체계화(매뉴얼화) 지원
- 스마트공장 구축 등을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에 우선 지원, 스마트공장 제조핵심 기술 개발 등 지원 및 전문 연구·기술 인력 양성 확대
-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도입 등 자발적으로 근무혁신을 실천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도입 추진 및 유연근무 활성화 지원

16

관공서 공휴일 확대 적용 등 국민의 휴식 및 휴게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확대 추진

- 5인 이상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확대 추진

▣ 연차휴가 2주 연속의무사용제 도입

▣ 근로시간 외 업무지시 금지(SNS 등)

- 근로시간 외 전화(휴대전화 포함), 문자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한 노동자의 사생활의 자유 침해 금지(불가피한 이용시 근로 시간 인정 방안 마련)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여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수급기간 상향으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 지급수준 10%p(현행 평균임금의 50%→60%) 인상 및 지급기간 30일 이상(현행 90~240일→120~270일) 연장 이후 단계적 확대('19년~)
- 지급기간의 연령별(청년층) 차등화 폐지 : 현행 30세 미만 90~180일, 30~50세 미만 90~210일 → 50세미만 일원화
- 자발적 이직자 · 장기 실직자부터 단계적 수급자격 인정 추진
- 초단시간 · 단기간 근로자 수급요건 완화(현행 18개월 180일→24개월 180일)
- 반복적 부정수급, 공모형 부정수급 등 악성 부정수급 가중처벌 신설('18년~)

■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로 고용형태 다양화에 대응

- 65세 이상(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에 대한 단계적 실업급여 확대
-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직종부터 고용보험 적용 후 단계적 확대
- 고용보험 사각지대 예술인 임의 가입 허용
- 자영업자 가입요건 · 피보험자격 유지요건 완화를 통한 가입 확대

■ 중소기업 노동자의 퇴직연금에 대한 공적퇴직연금 도입

- 50인 이하 사업장, 최저임금 120%미만 사업장 저소득노동자를 위한 공적 자산운용 서비스 제공 및 수수료 등 재정 지원

■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저소득 구직자 소득지원) 도입('20년 하반기)

- 근로능력과 근로의사가 있는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구직자(18~64세) 대상 구직촉진수당 지급(50만명 대상, 상담25만원×1개월, 50만원×6개월)

사회적 대화 활성화로 노동 존중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노동존중 사회 기본계획' 수립

- 청년 · 여성 ·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 · 소상공인 등으로 참여주체 확대 및 논의의제 확대 등으로 노사정위원회 전면 개편
-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노사민정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회의 정례화, 사무국 운영, 분과위원회 설치 · 운영 등) 및 노사상생형 일자리 확산 지원
- 각 지방자치단체별 '노동존중 사회 기본계획' 수립(예: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을 위한 7대 약속, '노동과 함께하는 행복한 충남 : 한 방울의 땀, 가정을 지켜주는 희망' 등)
- 현재 10%에 불과한 노조가입율과 단체협약 적용률을 더욱 높이기 위한 법 · 제도 개선 추진
- 「헌법」 상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각종 노동관계법령 재정비

■ 국제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ILO 핵심협약 비준 및 국내법 개정



과제 02
상생하는
공정경제



재벌총수일가의 전횡 방지 및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및 부당내부거래 근절

-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 사익편취 규제대상 지분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 공익법인, 우회출자, 금융계열사 등을 통한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차단
-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제 강화
- 대기업집단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

❑ 총수일가의 전횡 방지를 위한 법적 기반 구축

-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도입, 다중장부열람권 도입과 대표소송제도 개선 등 추진
- 재벌 총수일가 등의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 대기업과 거래 과정에서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

- 중기조합의 공동사업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에 대한 담합규정 적용 배제 추진
- 최저임금 변동 등 공급원가 변동 시 납품업자가 납품대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보급 확산

❑ 하도급 분야에서 공정 거래 기반 조성

- 수급사업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전속거래 구조 개선 추진
-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합리적 개선 및 보급 확산
- 2차협력사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과 1차협력사 간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추진
- 기술탈취 및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 유통분야에서 공정 거래 기반 조성

- 아웃렛 등 상품판매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임대업자를 법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보호받는 사업자 확대
- 납품업체에 대한 거래현황·거래조건 공시 의무화
- 온라인쇼핑몰에서 납품업체에 대한 비용전가 방지 방안 마련
-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사원 지원받을 경우 비용 부담 의무화

가맹분야에서 공정 거래 기반 조성

-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신고제 도입
- 판촉행사에 대한 사전 동의 의무화 추진
- 가맹본부의 위법·부도덕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부여

대리점분야에서 공정 거래 기반 조성

- 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 보급 확대
- 대리점사업자의 단체구성권 및 단체활동을 이유로 한 보복조치 금지 명문화
- 대리점에 대한 보복조치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및 피해구제 강화

- 공정거래조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담센터(가칭)' 설치
- 분쟁조정협의회의 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납품단가 적정가격 보장으로 공정한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공공조달시장 납품단가 현실화

- 공공조달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를 현행 연 1회(12월)에서 연 2회(5월, 12월)로 확대실시하고 임금실태조사 결과를 즉시 반영(금년도는 5월 조사·발표 후 즉시 반영)
- 단순 노무 용역과 같은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분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 급격한 인건비 변동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다수공급자 계약(MAS)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명시

민간하도급시장 납품단가 현실화

- 표준 하도급계약서에 '최저임금 인상 등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내용을 반영하고 보급·활용을 추진
- 기존에 하도급 관계에만 적용되던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를 수·위탁 기업 간 공급원가 변동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 개정
 - * 조정협의제도 대상 : (현행)하도급거래 → (개선)수·위탁 기업간 공급원가 변동
- 납품단가 조정협의신청 보복금지 조항 신설 등 제재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를 확대하고, 공정거래 감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 제조물책임·담합 등 소액·다수 소비자 피해 다발 분야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 소비자단체소송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집단분쟁조정제도 개선
- 소비자피해구제 지원 등 권익증진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재원 조성 추진
- 오픈마켓 사업자의 법적책임 강화 등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 여행·상조서비스·대부거래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불공정약관의 시정 및 표준 약관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정 추진

■ 공정위와 지자체 간 협업체계 강화

- 하도급·가맹·대리점·유통 분야에서의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시·도별 분쟁조정기구 설치 추진
- 행정수요가 많고 불공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맹분야 등에 대한 공정위와 지자체 간의 조사·처분권 분담 추진
- 가맹·유통·대리점 등 법집행 수요가 많은 분야에 대한 공정위의 법 집행역량 강화 추진

■ 공정위의 법집행체계 개선

- 전속고발제도 개편,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징벌적배상제 확대, 과징금 상향 등 추진
- 공정경제 확립과 4차 산업혁명 등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공정거래법제 전면 개편 추진

‘구매협동조합’설립 지원을 통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이익을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참여하는 ‘구매협동조합’ 설립 지원

-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구매협동조합 설립 지원을 통해 가맹 본부와 가맹점 간의 상생사례 육성 및 공정거래 정착
- 소상공인협동조합 사업을 통해 구매협동조합 지원(최대 5억원)
- *지원내용: IT 시스템 구축, 공동장비 구입, 브랜드 마케팅, 네트워킹 등

공정과세를 실현하여 정의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 공평 과세 및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는 세제개편 추진

- 청년·여성 등 근로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근로자·영세사업자에 대한 근로장려금제도 확대* 등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강화

* 가구 유형별로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단독가구의 연령요건을 폐지

▣ 탈루소득 과세 강화

- 대기업·대자산가 탈세 근절을 위해 기업 자금의 불법유출 및 사적사용 등 악의적 탈세행위 발견 시 세금 추징 및 고발조치 강화
- 수출입 거래 단속 강화를 위해 기획단속 등 확대 추진하고, 관세탈루 관리를 강화
-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를 차단하고 역외세원관리 강화 등을 통해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다국적 기업의 역외탈세를 근절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운영

과제

03

모두가 희망찬
민생경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없도록 지원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차질없는 지원과 사업주 및 노동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원칙(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 예외 인정 30인 이상 지원)으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비과세 연장근로수당 포함 시 최대 월 보수액 210만원 한도 지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노동자 부담분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의 지원을 대폭 확대(지원대상 월 140원 미만→월 190만원 미만, 지원수준 신규가입자 60%→90% 등)
- 안정자금 지원대상이면서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업주·노동자 부담분 건강보험 보험료를 50% 경감
- '18.1.1. 현재 재직 중인 최저임금 100~120% 수준의 노동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 공제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을 대폭 완화

- 온라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 적용범위 확대, 핀테크 활용 계좌기반 간편결제 도입 확산 등

공공임대사가 공급 및 상권 내몰림 방지를 위한 보증금 임대료 인상을 상한 인하 및 환산보증금 상향 조정

- 주민, 영세상인이 내몰리지 않고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공공임대사가 공급
-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현행 5년→10년), 상가 재건축·철거 시 퇴거 보상,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영세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등록· 영업규제를 강화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를 도입

최저임금제도 개선 및 근로장려세제(ETC) 전면 개편

- 최저임금 산입범위 합리적 개선 등 추진
- 근로장려세제(ETC)전면 개편 : 가구 유형별 지급대상 확대 및 단독가구의 연령 요건 폐지 등

지자체 '생활임금제' 확산, 공공기관 시중노임단가 적용 확대 등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관련 노동자의 생활임금제도 전면화

* (2017년 7월 기준) 102개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제 관련 조례 제정, 현재 88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

- 지자체 생활임금 시행의 법적 근거 마련, 자치단체 생활임금제 확대 지원
- 적용대상을 지자체의 간접고용, 민간위탁, 국비보조사업 등 단계적 확산

□ 공공기관 시중노임단가(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 적용 대상 확대

- 청소·경비·시설관리·생활폐기물 수집운반으로 한정되어 있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주차장 관리 등 단순노무직종과 민간위탁에 단계적 적용 확대

□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보증제도 도입 및 적정임금 지급

- 건설노동자에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직종별·기능수준별 기준 마련 및 단계적 시행
-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 도급 시 수급인 임금지급 보증 수수료 보증기관에 납부, 임금체불 시 보증기관이 건설노동자에 임금 대신 지급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영업 보장**과 상가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상가 임차인 보호】

□ 권리금 보호대상 확대

- 전통시장 임차상인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

□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에 한해서는 15년 연장 및 임대료 인상을 상한에 관한 특례 적용 추진

□ 상가건물 철거·재건축 시 임차상인 보상방안 마련

- 계약갱신 거부 시 이전비용 보상청구권 도입, 새 건물에 우선 입주권 부여 등

* (지역상생구역) 임대료 상승상권 대상 상생협력 기반 사후적 상권내몰림 방지

* (자율상권구역) 쇠퇴상권 대상 활성화 지원 및 사전적 상권내몰림 방지

【상권 보호】

▣ **상생협약(임대료 인상 자제 등)을 체결한 지역상생구역 또는 자율 상권구역을 지정하여 상권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권 활성화 도모**

- 대규모점포 · 준대규모점포 · 대형가맹사업 등 진입 제한
- 시설개선, 기반시설설치 등 상권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민생과 직결된 영세 소상공인 분야의 경영 활성화 도모

▣ **대 · 중소 유통업간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복합쇼핑몰에 대한 입지 · 영업 규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확충하여 소상공인 · 전통시장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전통시장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전용예산을 '18년 2.1조에서 '22년까지 4조원 규모로 조성**

▣ **저금리 정책자금을 3조원까지 확대, 업체당 대출한도도 상향하여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조사업도 1조원 운영

서민상권의 근간인 전통시장이 활기가 돌고, 안전한 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하여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매출 확대 (’17년, 1.1조원 → ’18년, 1.5조원)

- 각종 복지수당 등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확대
- 소비자와 상인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도입

전통시장 복합청년몰 조성 확대(’18년 10곳→’22년 40곳) 및 가업승계 청년상인 대상 컨설팅 및 신메뉴·신제품 개발 등 지원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 전통시장 상점가에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빈점포 매입
활용사업 등을 통해 공공상생상가 공급 확대

전통시장에 대한 철저한 화재안전점검 실시 및 화재발생에 대비한 화재공제 활성화

- 화재 위험도가 높은 곳부터 ’18~’20년까지 매년 100곳 이상의 노출전선 정비 및
자동화재소독설비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점포를 전체 점포의 30%까지 확대(’18.4월 현재 8,701
점포→’20년까지 6만 곳)
- 운영초기 충분한 피해보장 등을 위해 손실보전준비금 정부 출연 추진

온라인 영세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크게 낮추고, 새로운 결제시스템을 도입 하여 **결제수수료를 제로화**하겠습니다

온라인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를 오프라인 영세 및 중소 가맹점 수준으로 인하

[온·오프라인 카드가맹점 수수료 비교]

오프라인 가맹점 수수료		온라인 가맹점 수수료		
영세가맹점 (연매출 3억 이하)	0.8%	약 3.5% 내외	카드 수수료*	2.1~2.3%
			호스팅 수수료	0.9%
중소가맹점 (연매출 3~5억 이하)	1.3%		PG 수수료	0.2~0.4%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 적용범위를 확대

- (예시) 편의점, 주유소는 매출액에 세금(담배소비세, 유류세)이 포함되어 구조적으로
평균매출액이 큼

* 적용범위 : 영세가맹점(3억~5억원), 중소가맹점(5억~10억원)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를 부담 제로화를 위해 핀테크 활용 간편결제 도입

- 계좌기반 간편결제 도입 확산으로 기존 신용카드 위주의 고비용 지급결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

혁신형 소상공인 발굴·육성을 통해 성공모델을 확산하고 자생력을 제고하겠습니다

▣ '22년까지 1.5만개*의 혁신형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여 소상공인 전반의 자생력 및 경쟁력 제고

- 대상별 특화된 혁신형 소상공인**을 선정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맞춤형으로 연계

▣ 선정된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공노하우 전수(강사 활용, 네트워크 구성 등) 및 성공사례 전파(홍보, 박람회, 포상 등)를 통해 성과 확산

* ('18년) 1,000개 → ('19년) 2,500개 → ('20년) 3,500개 → ('21년) 4,000개 → ('22년) 4,000개

** (백년가게) 특례보증 신설, 맞춤형 홍보 및 체인화, 교육·컨설팅 등
(명문소공인) 전용자금 마련,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및 기술개발

소비자 우선의 포용적 금융을 실현하겠습니다

▣ 이자부담 완화 등 금융소비자의 가계부담 경감

- 법정 최고금리(24%) 단계적으로 20%로 인하
-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집값만큼만 상환하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확대
- '죽은 채권 부활 금지법'을 마련하여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매각 금지 법제화 추진
- 담보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를 무시하고 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
- 불법 사금융 관리 강화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동일기능-동일규제 체계 도입,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금융위원회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여 소비자 보호 역할 강화
-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 분리·독립 추진

▣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서민 정책금융의 안정적 공급 추진

▣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

- 사회적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 사회적 금융 활성화 추진
- 금융권의 자발적인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강화

중소기업에 힘이 되는 정책금융이 되겠습니다

▣ 금융 조달 구조를 용자 위주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

- 민간자본 중심의 투자생태계 조성을 위한 '벤처투자촉진법' 제정
- 모태펀드를 통해 스타트업 및 고용 창출기업에 대한 투자자본을 '22년까지 5조원 공급

▣ 정책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재기의 걸림돌도 제거

- 융자 및 신용보증 등 정책자금을 '18년 10.9조원에서 '22년까지 총 560조원 공급
- 기업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 은행에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연대보증 폐지 확산

▣ 약속어음의 단계적 폐지로 선의의 중소기업에게 공정한 경영환경 제공

- 관리가 어려운 종이어음은 점차 축소, 폐지하고 전자어음으로 일원화하여 어음의 발행, 유통 관리체계를 확립

▣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 등이 동산자산을 활용하여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접근성 제고

- 지역 내 중소기업 등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재투자' 제도 도입

금융 혁신으로 생산적 금융을 실현하겠습니다

▣ 금융혁신 인프라 구축

-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출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 수수료 부담은 줄이고, 이용은 더욱 편리하게 하는 모바일 결제 등 다양한 핀테크 사업자 출현 지원
- 금융업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인가절차 개선 등으로 새로운 금융사업자 출현 촉진
- 금융기관 해외진출 지원 등 전통적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 금융회사의 임원 선출절차의 투명성 제고 및 보수 책임성 강화
- 금융권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

11

사회적가치 실현 및 일자리 창출의 대안인 사회적경제의 성장 인프라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 3법(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법) 제정으로 사회적경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형성

-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비중을 강화하여 정부·지자체 및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 강화
- 사회적경제 성장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가·지역차원의 민·관의 협력 체계 구축
- 국가·지자체의 공공조달체계를 사회적경제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 사회적책임조달 촉진

▣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가치기금을 조성하고 공공·민간 분야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여 사회적경제의 성장기반 구축

▣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과 청년중심의 창업활성화 기반 조성

-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 교육기반을 마련하고 지역학습 공동체 지원 등 사회적경제 평생 학습기반 구축
- 대학 내 사회적기업 리더 과정 및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확대 등 대학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과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 사회적기업가 및 소셜벤처 육성 등 청년 중심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성장을 지원

12

농업인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보장하고 국민에게 편안한 씬터, 좋은 일터로 농촌을 재생시키겠습니다

▣ 기준소득금액 상향으로 농업인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 농지 감정평가를 상향(80%→90%)으로 농지연금 지급액 확대

▣ 전문적인 농부증 예방과 치료를 위한 기반 마련

- 지방대학병원, 농촌지역 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농부증 조사·연구 강화 및 예방과 치료 프로그램 보급·교육과 의로서비스 지원
- * 농부증 : 농업인에게 많이 나타나는 근골격계 질환, 농약중독, 자외선 피해, 호흡곤란, 어지럼증, 복부팽만감 등 주요증상을 의미함

▣ 전국단위 100원 택시사업 대폭 확대,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확대로 농촌 어디서나 불편 없는 3·6·5 생활권 구현

- * (30분) 소매·보건·보육 등 기초생활 서비스 / (60분) 문화·교육·의료·창업 등 복합 서비스 / (5분) 응급벨·무선방송 등 긴급 연락체계

▣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 개량 및 농촌노후주택 개량, 농촌공공임대주택 보급 등 농촌주거여건 획기적 개선

- ❑ 친환경농업 육성, 첨단 환경친화 축산단지 조성, 산지상태축산 활성화 등으로 쾌적하고 냄새 없는 친환경 생태 농축산업으로 전환
- ❑ 도시청년이 이주하여 지역 필요 활동을 하는 농촌 청년활력단 양성
- ❑ 농어촌 지역에 119구급대를 추가 배치하고 구급인력을 확충
- 3인의 전문 구급대의 응급처치를 통하여 예방가능 사망률을 감소

[농어촌지역에 119구급대 인력 및 차량 추가 배치]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인력(711명)	177	177	178	179
차량(95대)	23	23	24	25

일·주·월 패스 등 교통요금제를 다양화하여 소비자선택권을 강화하고,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서민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 1회용 티켓 외에 다회 이용 쿠폰 발행, 일·주·월·시간제 패스 등 다양한 교통상품을 공급하여 시민의 선택권 강화 및 교통비 절감
- ❑ 버스준공영제를 강화하고, (시간, 노선) 네트워크 통합을 추진하여 교통비 절감 및 출퇴근시간 교통불편을 최소화
- ❑ 외곽순환도로 및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단계적 인하
- ❑ 택시, 버스, 트럭 등에 수소차, 전기차, LPG하이브리드 등 도입, 지원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건강한 생명국가를 만들겠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보호 전담기구 설치 추진
- ▣ 동물병원 치료비 표준진료제 도입 등 반려동물 소유자의 부담완화 추진
- ▣ 반려동물 복합문화센터와 놀이터, 공공동물화장장 등 공공인프라 확충
- ▣ 유기동물, 전시동물, 실험동물 등의 보호 및 복지 향상(관련 법령개정)
- ▣ 건강검진, 중성화 수술, 예방접종, 사회화 교육 등 지원을 통해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
- ▣ 지자체의 길고양이 급식소와 중성화(TNR)사업 확대 지원
- ▣ 동물복지형으로 축산 사육환경 개선과 축산물 사육환경 표시제 도입, 친환경 축산 직불제를 동물복지 직불제로 개편하여 동물복지농장 확대

친환경축산 직불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 상태를 최대한 보전하면서 축산을 경영하는 농가의 소득감소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연생태계 유지, 환경보전, 농촌경관 유지 등을 위해 '09년부터 시행

동물복지 직불제

동물 본래의 습성, 환경 등이 유지되도록 사육하는 농가의 소득감소분을 보전하는 제도로, '17년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친환경축산을 넘어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이 촉진되도록 '19년부터 시행할 계획



과제

04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4차 산업혁명을 혁신성장의 기회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 과학기술 혁신 : 예산·세제·제도 등 정부·민간의 R&D투자 지원 강화
- ▣ 혁신 창업 : 투자자금 증대·투자 선순환 구축, 신서비스 활성화 및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 ▣ 사람 혁신 : 교육방식 및 직업능력 개발체계 혁신을 통한 창의인재 육성
- ▣ 사회제도 혁신 : 혁신성장 토대 마련을 위한 규제개선 본격 추진, 공공조달을 통해 기업의 기술경쟁 유도 및 혁신성장 지원
- ▣ 규제 혁신 :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여 혁신적 사업시도를 장려함으로써, 지역의 신산업 육성과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추진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 세계 최초로 5G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고, IoT 전용망을 확충하며, 10기가 인터넷망 상용화 및 전국 확산 추진
-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필수설비·시설의 선도적 개방을 통해 전국에서 고품질의 초연결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기반 조성

▣ 데이터 생산·공유 기반 강화

- 금융·교통 등 중점산업별 빅데이터 전문센터를 육성 및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로 민간·공공 데이터 구축(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형태로 개방)
- 국내·외에서의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의 균형을 위한 제도 마련

▣ 국민생활 밀착형 규제개선 추진

- 액티브X 제거, 공인인증제 폐지로 다양한 인증 수단 도입, 각종 고지서의 메신저 고지 등 추진

4차 산업혁명의 성장동력인 미래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지능화 기술 경쟁력 확보

- 기초기술(산업수학 · 뇌과학 등)을 활용, 지능화 기술(AI · 컴퓨팅 · 데이터 등)을 고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융합기술(SW, VR · AR, 센서 · IoT, 블록체인 등)이 확산 되는 선순환 구축

혁신성장동력 연계 · 육성

- 4차 산업혁명의 지능화 혁신 분야 중 핵심기술은 성장동력 과제로 반영하여 맞춤형 으로 집중 육성
- 13대 미래성장동력(빅데이터, 차세대통신서비스, 인공지능, 자율협력주행차, 드론 (무인기),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 증강현실(VR/AR), 지능형로봇, 지능형 반도체, 첨단소재,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집중 지원

R&D 체계 혁신

- 우수 연구자가 창의 · 자율성을 바탕으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연구자 중심으로 프로세스(기획-선정-평가-보상) 개편
- 개방형 혁신을 위한 연구데이터 공유 · 활용 제도화, 패키지형 R&D 플랫폼 개발, 연구소기업 창업 활성화로 R&D 성과 제고

지능화기술과의 전면적 융합으로 산업 ·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 의료기관 간 진단 · 투약 · 영상정보 등을 온라인으로 교류하는 진료정보 전자교류의 전국 확대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AI 기반 후보물질 예측, 임상시험 설계 효율화 등 신약 개발 플랫폼 구축

- ▣ 디지털 제조업 탈바꿈 추진 및 제조기업의 생산기술 혁신 지원을 위해 '3D프린팅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등 추진

- ▣ 6대 공통원천기술* 및 차세대 플랫폼 개발을 위한 원천기술개발 추진과 9대 핵심부품*, 자율주행 SW, 통신 및 보안 등 자율협력주행차 핵심 기술 개발

- ▣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핀테크 기술 · 서비스 개발 지원, 생체인식 인증 · 챗봇 등 기술 테스트베드 운영 등을 통한 혁신적 금융서비스 개발

* 3D프린팅 제조혁신지원센터

3D 프린팅 공정을 체계적인 생산 공정으로 발전시켜 주력 및 신산업 제조분야에서의 설계, 생산, 실용화 등 통합적 기술서비스 제공

* 6대 공통원천기술

탐지 및 인식, 통신, 자율 지능, 동력원 및 이동, 인간~이동체 간 인터페이스, 시스템 통합

* 9대 핵심부품

레이더, LIDAR 센서, 영상센서 모듈, 데이터 저장 장치(ADR), 통신모듈, 정밀 디지털 맵, 복합측위 모듈, 운전자-차량 인터페이스 모듈, 자율주행 제어장치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미래사회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핵심인재 성장 지원

- SW · AI · 빅데이터 등 지능화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스마트공장 · 드론 등 新산업 · 주력산업 분야 전문인력 교육 확대
- 인공지능 등 부족한 분야의 해외 우수 신진연구자, 고급과학자의 전략적 유치 및 산학연 연구경쟁력과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 미래 교육체계 혁신

- 창의 ·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초 · 중등 STEA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and Mathematics) 교육 확산
- 학교 디지털 인프라 확충, SW교육 전문인력 공급 및 재교육 강화, 디지털교과서 보급 확대, 초 · 중학교 무선인프라 확충 등 디지털 교육혁신 추진

■ 일자리 안전망 확충

- IoT · 로봇 등 신기술 훈련과정 개설, 스마트 제조분야 직무전환 교육 실시, 맞춤형 취업정보 제공 등 지원 강화
-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 확대, 이직자의 실업급여 강화 등 추진

■ 사이버 역기능 · 윤리 대응 강화

- 사이버위협 정보를 자동수집 · 분석하는 사이버위협 빅데이터센터 설립 등 AI 기반 사이버위협 탐지 · 대응체계 구축
- 블록체인 등 차세대 보안기술 투자 확대, 해킹을 원천 차단하는 고신뢰 양자암호통신 구축 · 확산
- AI 오작동 · 남용 등 역기능 예방을 위해 기술 윤리헌장 제정

과학기술분야의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 국가연구개발과제 선정 및 성과 평가 시 청년과학자 일자리 창출 효과 고려 강화 등 R&D지원 체계 마련

- 일정규모 이상 R&D지원사업의 경우 청년과학기술인력 채용의무화
- 청년과학기술인력 채용 시 사업화 단계 기술료 감면
- 청년채용 인건비를 현물출자 시 민간매칭자금으로 인정
- 중소기업 연구개발 분야에 취업하는 청년과학기술인에 대한 연금지원 확대

■ 실험실 과학자 연구성과의 사업화 연계 강화를 위한 시장 및 타깃 분석 지원, 마케팅 전략 수립 지원, 멘토링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미취업 학석사의 기업연구과제 참여지원

■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전용 연구개발 자금 조성

사회·공공분야의 지능화 혁신으로 복지사회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 ❑ 첨단 스마트시티에 신기술 테스트베드와 시민체감형 서비스 등을 발굴·반영하고 지능형 스마트홈을 '22년까지 300만 가구 보급
- ❑ 자율협력주행차와의 실시간 쌍방향통신이 가능한 교통정보 제공기술 개발
- ❑ 노인·장애인 보조 돌보미 로봇(이동·배변 등 지원)을 개발하고, 치매 조기에측·진단을 위한 뇌영상분석, 웨어러블기기 활용 맞춤형 운동·재활 등 개발·실증
- ❑ 실종아동·용의자 신원확인 지능형 CCTV, 인공지능 기반 범죄분석, 드론 기반 자율순찰·추적 등 개발, VR·AR 및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소방지휘 및 소방대원 대응능력 향상

공공위기대응 의약품과 혁신신약에 대한 '신속허가·심사제(Fast Track)' 도입으로 제약산업의 공공성과 혁신성장을 이끌겠습니다

- ❑ 공공위기대응 의약품의 허가·심사 절차에 Fast Track 도입
 -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공공보건위기대응 의약품에 새로운 임상시험 기준을 마련하여 자급기반을 구축하고 환자치료지원사업으로 의약품 접근성을 대폭 향상
- ❑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촉진체계 구축
 -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에 대해서는 허가·심사 절차에 Fast Track을 도입하여 신속한 허가를 통한 사업화를 촉진하여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

II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



- 민주당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제기되는 육아와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저출산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임. 또한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맞춤형 사회보장체계를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의료보장체계를 확립할 것임.
-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안전 대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임.
-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 실현 방안과 젠더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안정적인 삶과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임.

-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를 이끌어 휴식이 있는 삶을 구현하고,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보장함과 동시에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를 조성하여 문화강국의 면모를 구체화할 것임.
-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일자리 확충 및 사회참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임. 장애인들이 차별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확대하며 탈 시설 등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 환경을 적극 조성할 것임.
- 계층맞춤형 주거지원과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집 걱정없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임.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맞춤형 주택공급정책을 통해 주거 부담을 완화할 것임.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

- 05 보육과 교육,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 06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 07 성평등 사회와 가족행복 실현
- 08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강국
- 09 어르신, 장애인에게 힘이 되는 나라
- 10 집 걱정 없는 사회

과제 05

보육과 교육,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1 국공립 유치원 확대, 교사 처우 개선을 통해 유아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 ▣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안정적으로 전액 국고 지원
- ▣ 국공립유치원 취학률을 '17년 25%(17.2만명)에서 '22년까지 40%(22.4만명)로 확대
 - '18년부터 '22년까지 매년 500개 이상의 국공립유치원 학급 확대
- ▣ 사립유치원 교원의 기본급을 인상해 공립유치원 교사와 사립유치원 교사 간 기본급 격차 완화
 - '18년부터 향후 5년 간 단계적으로 올려 사립유치원 교원의 기본급을 공립유치원 교원 수준으로 인상

2 우리 아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 0~5세 보육료를 현실화함으로써 보육인력 처우 개선 및 보육서비스 질 제고 추진
 - 표준보육비용 계측에 맞추어 보육료 현실화 추진
- ▣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체의 40%(취원 아동수 기준)까지 단계적으로 확충
 - 기존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매입하거나 장기임대하는 방식으로 우선 확충
 - 농어촌 등 기존 어린이집이 부족한 지역에 공공시설 유휴 공간 및 공공부지, 아파트 관리동 등을 활용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설치 추진

초등 돌봄 확대로

아이는 행복하고 엄마는 맘 편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3

학교 초등돌봄을 대폭 확대해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향상

현 재	향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만명 대상 돌봄 1~2학년 중심, 17시까지 운영 * 일부 학교는 22시까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34만명 대상 돌봄 * 초등돌봄교실 확대 : 3,500실, 7만명 추가 * 교실활용 (+지자체) : 1,500실, 3만명 추가 * 대상 및 운영시간 단계적 확대

- (돌봄교실 확대) 초등 저학년에 집중, 돌봄공간 증축, 겸용교실 리모델링 및 신설 학교의 돌봄교실 설치 의무화 등 추진
- (교실활용) 활용가능교실을 지역사회에 개방,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안전한 학교 내에서 돌봄 제공

보건복지부, 지자체, 교육청 간 협력을 통해 마을 돌봄을 확대

현 재	향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9만명 취약계층 중심 돌봄 *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만명 대상 돌봄 * 다함께돌봄사업 확대 : 1,817개소, 9만명 추가 * 지역아동센터 등 : 1만명 추가 * 보편적 돌봄지원체계 구축

- (다함께 돌봄) 지역 내 공공시설 공간(도서관, 주민센터 등)을 활용, 지자체와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협력을 통해 지역돌봄 수요 대응
- (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에서 벗어나 일반아동 이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 사회 통합적 돌봄 제공

고교무상교육으로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취약계층 교육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4

고교무상교육을 '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22년 완성

- 고교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지원

저소득층 초·중·고 자녀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을 '19년부터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지원

- 지원 내역: 초·중·고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고교 교과서·입학금·수업료
- * '18년 지원 현황: 초·중·고 부교재비는 최저교육비의 50% 수준, 초·중·고 학용품비는 최저교육비의 70% 수준 지원

학업 의지가 높고 잠재력을 가진 취약계층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꿈사다리장학금을 '18년부터 매년 300명씩 확대 지원

- * '18년지원 현황: 중학교 1학년 학생 300명 선발, 중2~고3까지 5년 간 지원

다문화 학생 지원 강화

-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정부-시도교육청의 책임성 강화
-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다문화 가정 아동 대상으로 학교적응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 도입
- 다문화 학생 학습을 지원하는 대학생 멘토링 확대
- 중도 입국·외국인 학생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반학교 안에 상시적인 한국어 학급(예비학교)을 확대하고 전담교원 배치

국가장학금을 확대해 등록금 부담을 확 낮추겠습니다

■ 등록금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수혜 대상을 확대하여 '19년에는 중산층 이하 가정의 대학생까지 실질적 반값등록금 지원

* 반값등록금 수혜 인원 추계: ('17년)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약 52만명 → ('18년) 중위소득 120% 이하 60만명 → ('19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약 69만명 추정

〈'17년, '18년 소득분위(구간)별 I 유형 연간 지원 금액〉

(단위: 만원)

구분	기초 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2017년	520	520	520	390	286	168	120	67.5	67.5
2018년	520	520	520	520	390	368	368	120	67.5

■ '20년 중위소득 150~200% 이하(8구간) 학생들의 등록금 지원 단가 인상

* '18년 중위소득 150~200% 이하 학생 등록금 지원단가 67.5만원

■ 저소득층 대학생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교외 교육근로 장학금을 확대하고 교외근로 시급단가 현실화

지자체가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마을이 함께 아이들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마을에 민·관·학이 함께 운영하는 '마을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마을교육프로그램을 확대

– 자치구마다 지역과 주민을 연결하는 마을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는 마을학교, 마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 자유학기제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진로체험지원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지역사회가 지역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해 지원

– 초·중등학교에서 자유학기제,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등의 내실화를 위해 지자체가 진로·직업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지원
– 지자체가 우리 마을 진로직업체험장을 발굴하고 체험장 내 직업인 멘토 교육을 실시
– 지자체가 학부모 진로 코치단을 운영해 학교부담도 덜고 학부모들의 일 경험 확대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을 통해 마을생태계를 복원하고 마을방과후학교, 방학 캠프 활성화

– 아이들이 학교와 마을에서 지역 자원을 활용해 문예체육교육, 외국어 교육, 각종 진로 체험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사례

– 마을-학교가 함께하는 학교교육과정 운영
– 지자체-학교가 협력하는 마을방과후학교 운영
–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방과후돌봄 등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학교미세먼지 관리

- 유치원, 초·중등학교, 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에코환경 조성 등을 통해 교실 미세먼지 걱정 해소
- 학교 실내체육공간을 확충하고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체육수업을 운영
- 저소득계층 자녀에게 마스크를 지급해 건강관리 및 가계부담을 경감

▣ 학교석면 관리

- '17년부터 석면제거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 학교석면제거에 만전
- 학교석면해체 작업 이후 석면 잔재물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 석면농도기준의 엄격한 관리, 석면농도기준 위반 석면해체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제 마련 및 부실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

▣ 학교내진보강 관리

- 지진위험지역*은 '18년부터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조기에 내진보강 완료하고, 경주·포항은 '18년 안에 내진보강 완료
 - *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지역
- 그 외 지역은 순차적으로 내진보강 완료

▣ 쾌적한 학교환경 개선

- 낡은 재래식 화장실, 노후 기자재, 분필칠판, 노후 책걸상 교체 등을 위해 연차별 계획 추진
- 노후 냉난방기 교체 및 이중창 설치를 통해 찜통·냉골 교실 환경 개선 연차별 추진

▣ 안전교육 강화

-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 교원 안전 교육 내실화를 통해 안전사고 대응력 제고
- 생존수영 교육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단계적 확대·운영

확일화된 학교 공간을 상상력이 자라는 스마트 미래형 학교로 바꾸겠습니다

교육부 · 지방자치단체 ·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넓고 확일적인 학교교실을 다양한 교육이 가능한 미래형 교실로 교체

- 교과특성 및 다양한 학습방식에 최적화, 학생 다용도 공간 조성, 학습지원 및 교사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공간 조성, 학교 내 · 외부 공간을 활용한 체험 · 학습 · 놀이 · 운동 공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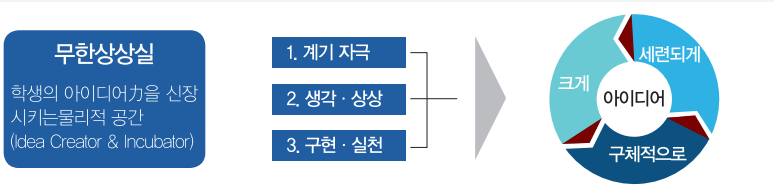
건축기준과 시설기준을 바꿔 신설학교의 경우 스마트 미래형 학교로 건축

교육부 · 지방자치단체 · 시도교육청이 협력하여 학교에 무한상상실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을 구축하고 학생들의 프로젝트 학습 지원

- 3D프린터, 레이저 커팅기, 기타 목공 장비(스카치톱)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학교 내 무한상상실 운영 인력 및 콘텐츠 지원

학교 무한상상실 (메이커스페이스)의 개념

학교에 설치되는 창의적인 공간으로 학생의 창의성, 상상력,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실험 · 제작을 하거나 UCC 제작 · 스토리 창작 등을 할 수 있는 공간



보육·어르신 돌봄 등 사회서비스 시설을 지자체가 직영하고, 복지종사자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국공립 사회서비스 시설을 지자체가 직영하는 체계 구축, 국공립 시설 운동을 전담하는 사회서비스공단 광역지자체별 설립

- 공단소속 직원으로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재활사 등 복지종사자를 채용하여 각 시설에 배치
- 공단은 복지종사자 채용 및 자격관리, 일선 시설 배치, 보수교육, 업무평가관리 등 역할 담당

복지종사자 임금 인상 및 임금 가이드라인 확대 적용, 사회복지직 1일 8시간 근무 및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보 추진

문재인 케어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문재인 케어) 차질 없는 추진

- 어린이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대폭 인하, 재난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확대
- 선택진료비 완전 폐지,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전면 확대
- 보험적용이 되지 않던 비급여를 급여화하여 보장성 대폭 강화

■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보

- 공정한 부과체계 개편을 통한 보험료 수입 기반 확충, 적정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사후정산 및 정부지원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 재원 확보
- 누적적립금(21조원) 적정 활용 및 재정누수 방지대책 강화

■ 의료전달체계와 건강보험 심사체계의 합리적 개편

- 대형병원은 중증·입원환자 중심, 동네의원은 경증·외래환자 중심으로 기능을 재정립하여 환자쏠림과 의료양극화 해소
- 심사·수가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심사체계 개편을 통해 진료의 자율성과 가입자의 보장성 동시 확대

MRI·초음파 등 고가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병원비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11

■ MRI·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 '18년 하반기 뇌·혈관 MRI를 시작으로 '21년까지 모든 의학적 비급여 MRI 검사비에 대한 보험 적용 추진
- '18.4월 상복부 초음파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하반기 하복부 초음파(전체 비급여 중 복부 비중 18%)로 확대하고, '21년까지 모든 의학적 비급여 초음파에 대한 보험 적용

■ 뇌·혈관 등 MRI 검사비와 상복부 등 초음파 검사비에 대한 보험적용 확대로 환자 의료비 부담은 기존 대비 30%(의원급)~50%(상급종합) 수준으로 완화

12

12세 이하 어린이 충치치료 및 선천성 기형 교정치료도 건강보험으로 해결하겠습니다

12세 이하 어린이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 구강질환의 의료비 부담이 큰 12세 이하 어린이들의 영구치에 대하여 우선 건강보험을 적용

선천성 기형 치과 교정치료 건강보험 적용

- 선천성 악안면기형(구순구개열)의 구순비 교정술, 치아교정 치과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

13

무료 독감 예방접종, 중·고생과 임산부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무료 독감예방접종(국가예방접종) 중고생과 임산부까지 확대

- 2018년부터 만6세 및 초등학교 대상 시행
- 2019년부터 임산부 및 중학생 대상 확대 시행
- 2020년부터 고등학교 대상 확대 시행

‘학교 밖 청소년’도 학령기 청소년 무료 독감예방접종 대상에 포함

-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올해부터 6세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에 대해 독감 무료접종(NIP)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집단생활을 하는 중고생들은 물론 태아의 건강증진 효과가 큰 임산부에 대해서는 아직 미시행
- 중·고생의 경우는 독감백신 접종률이 4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청소년들의 독감 발병률이 2016년 기준으로 외래환자 1000명당 153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청소년 건강에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작용
 - 또한 항바이러스제 투약에 따른 건보재정의 부담은 물론 폐렴 등 합병증을 발생시켜 추가적인 의료비 부담을 야기하는 문제도 발생
- 임산부에 대한 독감예방접종은 단순히 산모의 건강뿐만 아니라 태아의 건강증진에도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용대상 확대 필요

산모와 신생아의 출산 이후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방문 건강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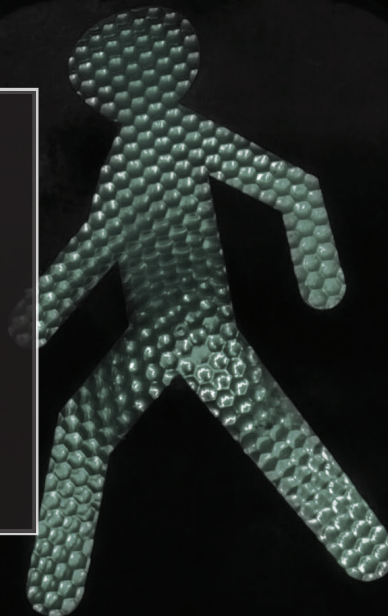
14

- ❑ 출산 초기 산부인과에서 1주 정도 머물면서 출산 관련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퇴원 후에는 가정방문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전 계층 지원, 지역사회 의료자원 연계)
- ❑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아도 최소 비용으로 산부인과나 가정 등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 개편

과제

06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겠습니다

1

미세먼지 원인 규명 및 예보 정확도 제고

- 빅데이터 · 인공지능활용 대기질 예보시스템 구축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정확한 예보 실현
- 다각적 관측을 위한 환경위성 운영으로 미세먼지 오염원 기여도 산정(중국, 국내, 1차오염물질 등)

발전 · 산업부문 배출량 획기적 감축

- 석탄화력 발전소 신규 승인 불허, 기존 석탄화력발전소 대기배출기준 강화
- 시멘트 철강 등 다량배출사업장 대기배출허용기준 2배 강화

경유차 · 비산먼지 등 배출원 관리 강화

-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충전인프라 구축 강화
- '22년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촉진을 통해 경유차 적극 감축
- LPG 차량 사용제한 조기 폐지
- 주택가 주변 운행중인 소형 경유 화물차 LPG 전환 추진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폐 질환 조기 진단과 치료를 위해 국가건강검진에 폐 기능검사를 신설하겠습니다

2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폐 기능 검사' 추가하여 조기진단체계 구축

- 폐 기능 검사의 활성화를 통해 미세먼지 등으로 발생한 호흡기 질환의 진단율을 높이고, 적극적인 치료로 이어지도록 유도

- 미세먼지로 인한 폐질환 환자는 늘어나고 있음에도 정확한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지침과 지원이 없는 상황
 - 적극적인 관리 및 치료를 위해서는 진단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폐기능 검사는 호흡기 질환 진단의 기초
 - 우리나라 폐기능 검사 시행율은 미비한 수준 (천식 환자의 28%, COPD(만성 폐쇄성 폐질환)환자의 68만 폐기능 검사 시행)

어르신, 영유아 등 건강취약계층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등 환기·공기정화 시설·장비 설치 단계적 지원

-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및 아동 우선 지원

미세먼지 및 환경호르몬 정화 기능이 뛰어난 식물 보급 지원

- 정화 기능이 입증된 식물의 노인복지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등 보급 지원
- 지역 농가 지원 정책과 연계 검토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노인복지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등 이용자 마스크 지급

* 노인복지시설 : 요양원,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 아동복지시설 : 보육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대형교통사고 예방 로드맵 구축

- 사고다발지점, 위험도로, 사고 잦은 곳 등 교통사고 취약부분 집중 개선
- 도로안전설비 완비

보행자 중심으로 속도 관리체계를 전환

- 도시부 제한속도를 60km/h→50km/h로 하향 조정(시범 실시 후 '19년 전국 확산)
- 저속 제한구간 다양화, 차량 속도 저감 유도시설 설치 등으로 차량 속도저감 유도

운전자 중심 안전도로 환경 조성

-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인프라 조기 구축
- 졸음쉼터 추가설치 등을 통해 안전 고속도로 환경 조성
- 마을주민보호구역인 '빌리지 존'의 확대 추진

차량, 신호시스템, 인프라에 대한 첨단기술 고도화, 상용화

- 노후차량 차령제도 도입, 고령 화물운전자 자격관리 강화
- 버스·화물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 대형버스 비상제동장치 장착 지원
- 교통량 분석을 통한 신호주기 개선 및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

■ 운수 노동자 휴식 보장 및 처우 개선

-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버스준공영제 확대
- 버스운수업 실 운전시간 단축

*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 컨트롤 타워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 교통안전에 효과적일 뿐 아니라 불의의 상황에서도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 교통혼잡에서 오는 통행 속도,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음

‘어린이안전사고제로’ 운동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모든 학교 앞 적색 점멸등 도입

■ 모든 유형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 조례 제정 추진

■ 어린이안전체험교육장 조성

- 부모와 함께하는 안전체험 프로그램 확대
- 교통사고, 물놀이, 질식, 중독, 낙상, 전기, 가스, 화재, 지진 등 빈발한 사고유형을 직접 체험하는 학습장 조성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및 청소년 해양안전 체험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 내항여객선, 낚시어선 및 연근해 어선 등 선종별로 안전대책을 추진하여 연안해상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등 최소화

- 여객선 및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안전 검사 단축 및 선장자격 조건(승선경력) 강화

▣ 어선 출입항신고, 위치보고, 조업제한, 안전조업을 위한 지원 및 벌칙 등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사고를 예방하고자 제도개선

- 어선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항로표지시설 확충 등 안전 관리 체계 개선 추진

▣ 긴급신고전화 접수기능을 지방해경청으로 통합하고, 공청시스템 도입· 운영하여 상황관리 체계 및 즉시출동태세 강화

- 해경 즉시 출동 태세 확립 및 구조역량 강화 등 구조체계 내실화
- 구조거점 파출소를 지정·확대하여 초기 구조에 즉시 대응
- 출동시간 목표제 및 도착시간 관리제를 통해 최단 현장 도착 시간 설정 등 출동 태세 개선

* 공청시스템

해상사고 최초 접수 시 상황실·지방청·VTS 간 정보공유를 통한 초기대응 시스템

▣ 해양안전 체험 프로그램 운영 추진

- 해양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기초안전수칙 숙지 교육 등을 통한 생활밀착형 안전체험관 개설 확대 추진

▣ 학교·관공서에서 기초해양안전체험관 설치·운영 시 안전비품, 교육 등 지원

- 수영장 등 일반시설 활용을 통한 “찾아가는 해양안전 체험교육” 확대 시행
- 시범사업으로 물놀이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에 청소년 등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양안전 체험시설 구축·운영

유해성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질 전과정 안전관리체계 구축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인정범위 및 지원 확대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및 살생물제 사전 승인제도 시행
- 화학물질제품으로 인한 피해구제제도 마련 및 환경피해조사부터 피해구제까지 유기적 연계·통합 방안 마련

■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및 유해정보 알권리 강화

-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등록 의무화 및 관리기반 강화
- 국내 화학물질 시험·분석기관 육성 및 흡입독성 시험시설 확충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유도
- 스마트 폰으로 제품성분 및 리콜정보 확인, 불법·불량 의심제품 신고가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하는 정보제공 시스템 개선
- 어린이 활동공간(학원, 체육시설 등) 및 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법제화

■ 발암물질 배출량 저감 추진

- 화학사고 및 화학물질 알권리 보장을 위한 지역 비상대비계획 수립 및 민관거버넌스 구축
-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마련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으로 국민건강과 도농상생을 함께 실현하겠습니다

■ 지역별 먹거리위원회와 먹거리종합지원센터 설립으로 생산·유통·소비·환경·안전 전과정을 지역 내에서 선순환하는 지역 푸드플랜 수립 지원

■ 지자체의 축산물 안전검사 장비 및 전문인력, 도축장 검사관 등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 계란 등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

■ 초등학생에게 과일간식 제공

■ 취약계층에게 농식품바우처(식품구입비)를 지급하여 적정 영양섭취 보장

■ 소비자가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사용여부를 알 수 있게 표시제 개편

* EU는 GMO 완전표시제를 1997년부터 도입하여 시행 중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안전한 수산물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원산지 표시제 의무화 및 단속 강화

- 가공품의 식염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위한 「원산지 표시법 시행령」 개정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내륙지원 신설 및 원산지 표시 단속 인력 확충

❑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추진

- 수산물의 안전한 유통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생산부터 판매까지 유통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추진

❑ 분석장비 확충으로 수산물 안전성 검사율 제고

- 생산·저장·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단계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성 검사 물량을 확대하고, 지자체 분석 장비 확충으로 안전성 조사기관 확대

주민밀착형 치안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범죄를 예방하겠습니다

❑ 경찰 증원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범죄예방정책 추진

- 주민 의견에 따라 순찰 희망 장소를 수렴하여 탄력적으로 순찰 실시
- 관할 구역이 넓고 인구 급증 지역 등에 파출소 증설, 112 출동 시간 단축

❑ 범죄예방 디자인을 통하여 취약구조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환경 구축

- 고화질 CCTV 설치 확대, LED 보안등 등 치안기본 장치 확충

* 범죄예방디자인(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도시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법으로 인적이 드문 공원이나 지하주차장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거나 밝은 계통으로 거리를 도색하고 어두운 골목길의 조명을 확대하는 것

11

‘재난·사고 전담대응센터’ 설치 등을 통하여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 지자체에 ‘재난·사고 전담대응센터’를 설치

- 지자체 컨트롤타워-중앙정부 지원의 체계화
- 지자체 ‘재난전문인력’ 확충·양성 및 위기관리 전문화

▣ 각 지역의 재해·사고 특성(예: 경주·포항 지진, 원전 주변지역 등)에 기반한 재난·사고 대응 매뉴얼 수립

▣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 지진대피소 설치·지정 확대 및 지진대비 교육·훈련 강화
-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내진보강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 지진 조기경보 발표시간을 단축하는 등 조기경보 체계를 개선하고 지자체 등 상황 전파 시스템을 연계한 지진정보 전달체계 구축

▣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지진해일 분석·예측·전달 체계 고도화 등을 통한 대국민 재난정보체계 개선

12

초고층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습니다

▣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을 적극 추진하고, 기존 건축물의 보강을 촉진 하여 재난·재해에 적극 대응

▣ 필로티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가연성 자재사용을 억제

▣ 화재피난시설 의무설치 건축물 확대 및 소방시설기준 강화

▣ 초고층건축물의 안전관리기준 개선을 통해 재난안전사고 예방시스템 마련

- 피난안전구역에 심장충격기, 방독면 또는 화생방 마스크 등 피난 설비 비치 의무화

▣ 다중이용업소 피난시설 설치기준 강화

-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업소에 내부피난통로, 피난유도선 설치 의무화
-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피난기구의 종류 확대

13

'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 '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수 절반으로 감축

- 산재사고로 사망하는 사망자수 연간 천여명('16년 969명)을 2022년까지 절반으로 감축
-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특수형태근로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
- 상시적으로 행해지는 유해·위험 작업의 사내(제)하도급 엄격히 제한, 중대재해와 산재다발 사업장에 대한 민·형사책임 강화 등
- 산업재해 발생 시 노동자 작업중지 요청 등 긴급대피권 강화

▣ 일하다 다치면 모두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상제도 대상과 기준 확대

-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확대 및 판정과정의 전문성·공정성 제고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영업비밀정보 사전심사제도 도입
- 산재노동자 경제적 부담 해소 지원 방안 마련
-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의무적용 및 적용확대

▣ 근로자건강센터 역할 확대 및 서비스 질 제고 방안 마련

- "도심형 근로자건강센터"(트라우마 전문상담 포함) 추가 신설
- 소규모 사업장·고위험 업종 근로자 건강보호 지원 확대 및 안전보건관리자 지원 방안 마련
- 전자산업·서비스산업 안전보건센터 설치 등 지역별·업종별 산업안전보건역량 강화

14

건설 현장 안전 및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 발주자의 단계별 책임을 명확히 하고 중대 재해발생 시 입찰불이익을 주는 등 발주자·수급인의 책임을 강화
- '20년까지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구축 등 안전점검 관리체계 강화
- 타워크레인의 허위연식 전수 조사 등 건설기계 안전 강화
- 건설자동화, 스마트 건설안전 로드맵 마련 등 건설안전에 첨단기술 적극 활용

▣ 건설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

- 사물인터넷 유지관리*, 건설자동화사업, 거대고층구조물사업 등 건설 R&D사업 중점 육성
- 고부가가치 건설관리 활성화
-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 해외건설산업정보시스템 구축, '글로벌 인프라펀드' 규모 확대 등 건설산업의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

▣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대북 건설분야 교류, 협력 강화

*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유지관리

가전장치 등에 센서를 부착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모으고, 사물들끼리 정보를 주고 받아 사람 없이 사물이 알아서 판단하는 것. 건물유지관리에 이용하면 에너지 사용패턴을 분석한 에너지 절약, 보안 및 안전 등에 사용할 수 있음

원전 사고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승인제도 도입

– 가동중인 원전의 안전성을 10년 단위로 종합적으로 평가

■ 지진에 대한 원전부지 안전성 및 내진설계 기준 등에 최신 경주지역 지진상황을 반영하여 재검토

– 경주지진 원인단층 조사가 장기간 진행됨을 고려하여 안전기준 강화할 수 있는 것 우선 진행

■ 원자력 사고발생 시 사업자의 손해배상액 한도를 무제한 책임으로 하는 제도 도입

원전 주변지역 주민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원전 주변 주민, 방사능 종사자에 대한 기존역학조사방법을 개선한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추진

– 주민 전체 대상(기존 암환자, 소아·청소년 포함)으로 피폭선량 평가 실시, 기존 의료정보 연계 등으로 개인별 특성 반영

■ 사고 유형별 시나리오 개발 및 최적의 주민보호조치 마련을 위한 R&D를 통해 방사능방재체계 실효적 개선

■ 원자력안전정보 공개와 소통 강화

– 원자력안전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정

페비닐 등 재활용자원이 제대로 순환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지자체의 재활용품 수거를 위한 기반시설 추가확보와 관리권 강화

- 공동주택 등의 재활용품 처리현황 분기별 지자체 보고 및 처리체계 변동 시 지자체에 사전 보고 하는 등 지자체 관리권한 강화
- 지자체의 생활자원회수센터 추가 확보(현재 177곳)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재활용품 수거 긴급 상황발생 사전에 선제적 대응조치 실시

■ 재활용 시장 안정화 조치 추진

- 재활용품 분리·선별 업체 잔재물 처리비용 저감 추진
- 영세재활용업체 지원 확대 및 리사이클 산업 발전 방안 마련
- 비닐, PET 등 재활용이 원활하지 않은 품목부터 공공구매 추진 및 농촌페비닐은 기존 민간관리 → 공공관리로 유도 추진

■ 재활용품 발생량 저감 대책 마련

- 야구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분리수거 관리 강화 및 위반 시 과태료 신설 추진
- 제품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제도 개선 (EPR*분담금 증액 및 현실화)
- 택배포장 등 과대포장 줄이기 가이드라인 및 방지제도 마련
- 재활용품 분리배출 세부지침 보급 추진

■ 1회용품 무사용 점포 인증제 추진 및 인센티브 제공

* 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

온실가스를 감축해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8

온실가스 감축 강화

- 온실가스 감축(37%) 로드맵(해외감축분 12%→ 국내감축분 전환) 수정 및 보완
- 탄소포인트제* 자동차로 확대('19년)
-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추진
- 저탄소 제품을 녹색제품으로 지정해서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추진

이상기후 예방 대처능력 강화

- 지자체별 취약성 평가 및 적응을 위한 위험지도 구축
- 폭염 피해 대피소 지정·설치 및 지원 확대 추진
- 취약계층이용 경로당, 공부방 등 공공시설에 쿨루프 페인트 등 지원
- 빗물마을 프로그램 확대 추진

* 탄소포인트제도

가정, 사업,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가스 등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현금, 상품권, 그린카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파트 관리비 차감제도 운영 중



과제

07

성평등 사회와
가족행복 실현

1 성평등 사회 완성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 성평등위원회 설치

-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와 함께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 병합형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구축, 성주류화 추진을 위한 제도적 실효성 제고
- 성평등·성인지 예산 관련 정책 총괄·조정·심의 컨트롤타워 역할

▣ 각 부처 성평등 관련 정책을 포괄하는 성평등 정책 기본계획('18~'22년) 수립

▣ 정부·지자체 정책의 성주류화를 위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 성평등정책 전문 전담인력 별도 배치
-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 기준 개선 및 심층평가 방식 도입

▣ 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

- 올바른 성지식과 성의식 정립을 위한 초·중·고 성평등 공교육 강화
- 사회 각 부문별 성평등 교육 확대
- 성평등 콘텐츠 확산 및 대국민 성평등 문화 확산 운동 전개

2 사회 각 분야의 여성참여 및 여성대표성을 높이겠습니다

▣ 공공부문 여성임용 확대를 위한 목표제 10·20·40 실현('22년)

- (10%)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에 따라 여성 비율 10% 확대 실현 및 상향화
- (20%) 공공기관 임원 여성 비율 20% 확대 추진
- (40%) 정부위원회 여성 위원 40% 지속적 달성 노력

▣ 각종 선출직 선거에 있어서 여성 정치참여 확대 지속 추진

▣ 군 간부 및 여성경찰 확대, 국·공립대 여성교수 비율을 사립대 수준으로 확대

젠더폭력을 근절하고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 스토킹, 온라인 성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젠더폭력 처벌 강화

- 리벤지 포르노(헤어진 후 보복성 성적 사진·영상 유포) 근절을 위한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운영 강화 및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 스토킹 처벌법 제정 추진
- 몰래카메라 촬영, 촬영물 유포·협박, 유통사이트 운영자 처벌 강화

■ 성폭력 범죄 처벌규정 및 수사지침 재정비

- 형법 및 성폭력 관련 특별법으로 분산된 처벌규정 통합·재정비
- ‘피해자 성(性)이력 증거 채택 금지’ 조항 마련
- 성폭력 수사매뉴얼 개편, 2차피해 방지를 위한 수사지침·절차 연구

■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설 확대

■ 젠더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및 일반국민 대상 예방교육 확대

- 공공기관 예방교육 점검 결과 보고, 전문강사 역량 강화
-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강화(도서벽지, 산간오지 및 여성안전취약지역 등)

인권·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겠습니다

■ 성범죄 교육 공무원 퇴출로 학교 내 성폭력·성희롱 근절

■ 학교 내 인권·성평등 교육 강화,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에 성폭력 예방교육 필수화

■ 학교 성폭력 근절을 위해 초·중등학교장 및 대학의 장의 기관 내 성범죄에 대한 책무성 강화

- 기관장은 성폭력사건 인지 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 및 해당사건 은폐 축소행위 금지

■ 교원징계위원회 실효성 강화를 위해 민간위원 및 여성위원 비율 확대

■ 대학 내에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 인권센터 설치를 통해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위기청소년의 새로운 출발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확대 및 맞춤형 지원 강화

-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확대, 검정고시 등 학력취득 교육비 지원, 건강검진 사업 지원

▣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확대 및 실질화
- 청소년 '전화상담 1388', '문자상담 #1388', 사이버 상담 등 접근성 강화

▣ 청소년복지시설 확대 및 지원 인프라 확충

- 청소년 쉼터 및 소년범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 청소년의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확충
- 청소년 쉼터 퇴소 후 갈 곳 없는 청소년을 지원하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신설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전문상담 및 치유지원 강화

▣ 청소년 근로권익침해 해결 지원 전담 '청소년 근로보호지킴이 및 근로 보호 현장도우미' 단계적 확대

*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위생용품 바우처제도 도입 등을 통해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인권과 건강권 보호

-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위생용품 지원 근거 마련

▣ 현물 지원 및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한 위생용품 지원 추진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 만 11~18세 여성 청소년 지원
- 여성청소년이 정서적 어려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카드를 발급
- 개인의 선호를 반영한 위생용품을 온·오프라인 구매 가능

▣ 여성의 생식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인권·건강권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양육비 지원 강화 등을 통해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설치 확대

- 지역적 서비스 수혜 차별 해소 및 양육비 이행률 제고
-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인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제공
- 자발적인 양육비이행을 위한 면접교섭서비스 확대

▣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강화

- 소송 등 재판 지원, 판결 선고 후에도 채무자의 불이행 지속 시 채권 추심 및 강제 집행 절차 지원

▣ 양육 한부모에 대한 양육비 이행 지원 강화

-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소득·재산자료 확보를 위한 조사권한 강화

▣ 아동의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 및 양육비 이행지원 단계적 확대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확대
- 국가가 양육비 선지급 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대지급 제도 도입

▣ 양육비 이행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강화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협의 성립 지원
- 지속적인 양육비이행 상황 모니터링

▣ 미혼모·부의 자립 지원 강화

- 생활설계 및 지원 안내를 통해 미혼모·부 자립지원
-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직업교육기간 및 경제활동 초기 양육지원 강화
- 상담·심리치료 및 미혼모·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위기지원

* 한부모 가정

- 배우자 없이 자녀(18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 별거, 유기, 미혼모(비혼모) 등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8

❑ 다문화가족의 정착 및 자립 지원 강화

- 결혼이민자 자립지원 패키지·자녀성장지원사업 등 프로그램 확대
- 선배 결혼이민자와의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 온·오프라인 한국어교육 병행, 운전면허 교실, 외국인 도움센터 등 확대

❑ 이중언어 인재 풀 확충을 통한 일자리 연계 강화

❑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역사회 돌봄, 학습 및 이중언어 역량 개발 지원

❑ 지자체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개소 설치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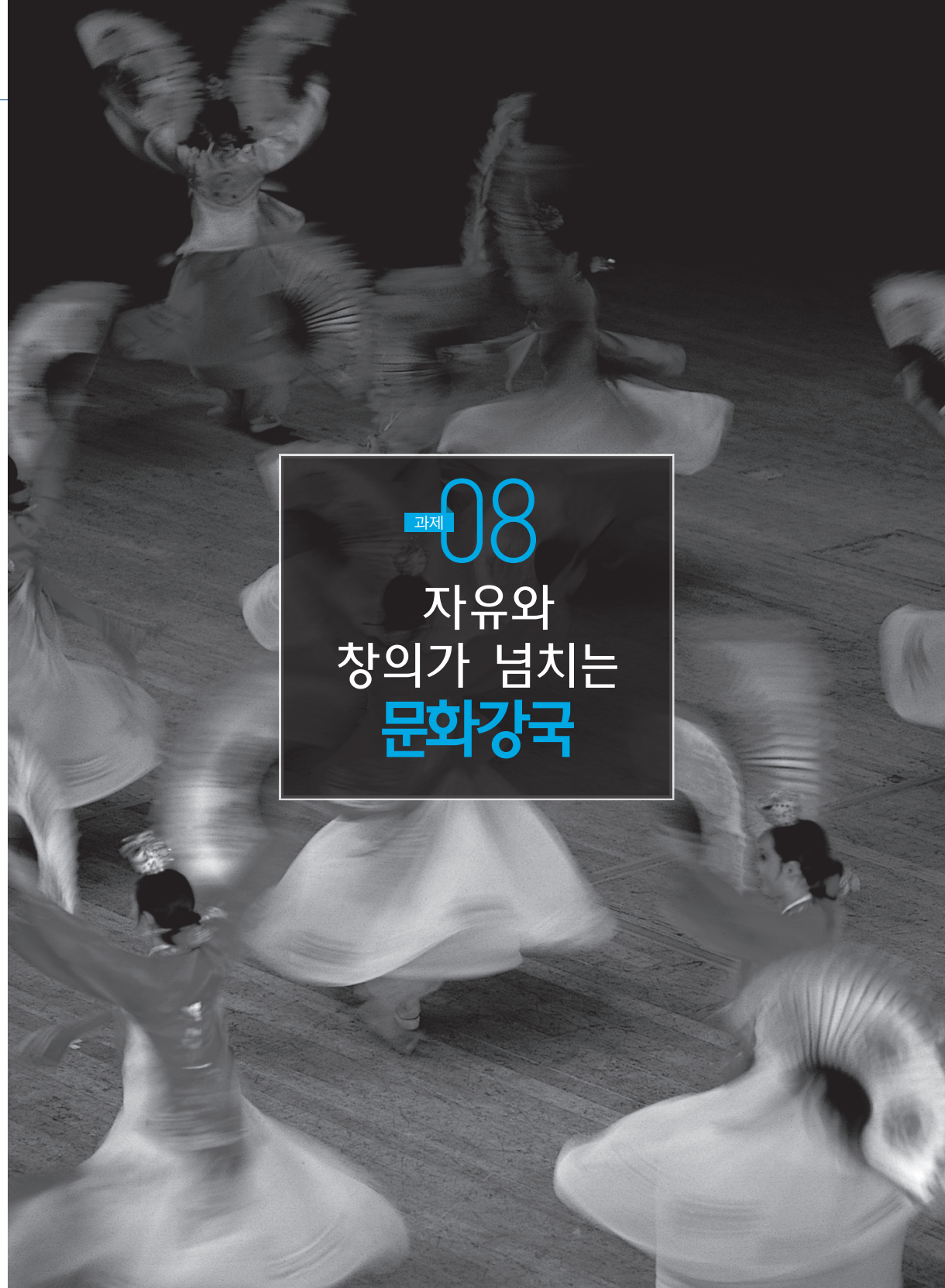
❑ 다누리배움터 운영 내실화를 통해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 및 인식 개선

❑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국어(13개국어) 상담전화 다누리콜센터 서비스 강화

- 24시간 주말·야간에도 상담 및 긴급지원서비스 제공

❑ 이주여성 농어민 후견인제 등 다문화 가정 지원 확대

과제 08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강국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문화의 생활화를 실현하겠습니다

1

국민의 기초적 문화 향유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확대

- 현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서 단계적 소득순위 수혜자 확대
- 소외지역 초·중·고 학생까지 수혜 확대 추진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약256만명 수혜

'22년까지 단계적 확대

- 소득순위 수혜 확대 약 500만명
- 소외지역 초중고 약 194만명

문화예술교육의 내실화

- '창의예술교육 랩' 운영
 - 지역 문화예술시설·예술전공 재학생 연계 연구·기획·콘텐츠 개발 및 시범 프로젝트 지원('19년 신규 개소 ⇒ '22년 17개 광역단위 개소)
- 초중고 1년 1공연 이상 관람 지원 및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주중 확대

50·60대 이상 생애전환 문화학교 운영(가족과 함께 프로그램 운영)

- '19년 광역단위 시범개소 ⇒ '22년 기초단체까지 확산

문화강국으로의 도약, 문화콘텐츠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2

지역 콘텐츠 기업 육성

- 콘텐츠코리아 랩(CKL) 및 기업육성 센터 확충

◦ CKL10개(인천,경기,충북,충남,대구,전북,전남,광주,경북,부산)
지역육성센터 2개(전북,전남)

'22년까지 확충

◦ CKL 14개지역(제주,강원,대전,경남(울산) 지역 추가)
지역육성센터 8개(호남권2개,충청권2개,강원도1개,제주도 1개 지역 추가)

- 지역 콘텐츠 원천의 관광자원화
 - ※ 콘텐츠 생산물 ⇒ 지역 전시·판매·공연 공간 조성

문화콘텐츠 시장 활성화

- 규제정책 개선 및 표준계약서 확대, 계약·수익배분의 공정거래 형성

문화콘텐츠산업 정책금융제도 활성화

- 완성보증제도 출연자본 및 콘텐츠공제조합 자원 확대

국가 신성장동력 산업의 문화콘텐츠분야 지정 확대 및 콘텐츠 R&D 분야 세제지원

역사문화 조성 콘텐츠 중심의 문화유산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개인·민간사업자 등의 문화재 조사·발굴 비용의 단계적 지원 확대

문화유산 교육 강화 및 보존을 위한 인력양성

- 문화유산 아카데미 신설,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활용 확대
- 초·중·고 문화유산 견학 교육 확대 및 전문 강사 파견 과정 개설
-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 지원 확대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강화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확대

- 실태 및 유통조사 지속 추진으로 환수 기반 마련

문화유산 콘텐츠의 관광자원화 육성

- 전통문화의 육성과 관광자원화 원천 콘텐츠 개발 확대
- 근·현대 문화유산 활용 지역역사문화 재생사업 지원

남북 문화유산 교류사업 재개

-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재개
- 평양 고구려 고분 남북 공동조사 실시
- 남북 문화유산 발굴 유물 순회 전시 공동 주최

문화예술인의 생활복지와 자유로운 창작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신진·영세 문화예술인 자립을 위한 공공쇼핑몰(창작 유통 쇼핑몰) 조성

- 신진작가 등의 작품 판매로 지속가능한 창작환경 조성 및 자립형 일자리 창출

구분	주요내용
정부/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쇼핑몰 운영정책 입안 및 예산 계획 수립 · 운영 총괄 관리 및 지원
운영기관(공공 또는 민간합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쇼핑몰 구축 및 운영 실무 · 입점 예술인 발굴 및 고객 확보
예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제작 및 등록, 판매로 지속가능한 창작환경 조성 및 예술 문화 자립형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인의 기초적 생활보장 사업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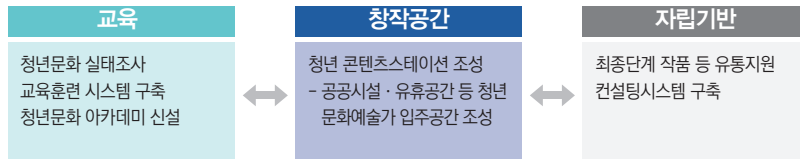
- 프리랜서 활동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지원 및 사회보험 보장 확대
- 예술인 복지금고를 마련, 세부단위의 문화예술인 긴급지원시스템 구축

문화예술산업계의 생산적 활동 지원

- 문화예술분야 고용촉진 및 인력사업 지원(협업체 구성)
- 표준계약서 의무화, 표준보수지급기준 마련 등 불공정 관행 개선

청년문화활동 성장지원 확대

-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청년문화 분야 할당제 추진
- 청년문화예술인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단계적 지원 체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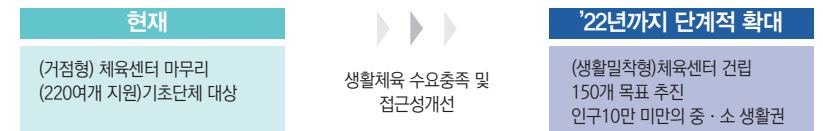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인프라 지속 확충

- 생활밀착형 공공 국민체육센터 확대



- 기초자치단체까지 장애인형 국립체육센터 건립 확대



- 학교체육시설 활용 확대

생활스포츠 프로그램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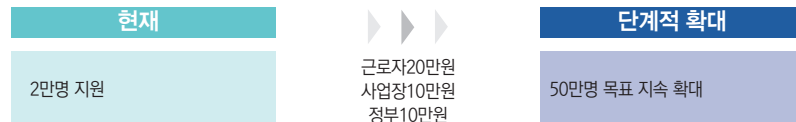
- 초·중·고 대상 돌봄교실에 스포츠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 확대
- 전국 직장인스포츠클럽 리그 확대를 통한 직장스포츠 활성화
- 유청소년 스포츠체험센터(현재 1개소) 광역자치단체로 확대 설치

공정 스포츠 생태계 조성

- 체육단체 비리, 성폭력, 인권침해 등의 근절을 위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기능 강화

국민복지 관광 실현 및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 근로자 휴가지원제(한국형 체크바캉스제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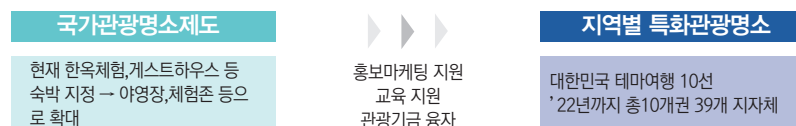


■ 국민 행복관광 지원

- 청소년 : 교과 연계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경로층 : 평생교육기관 등 연계 '실버여행학교' 지원
- 가족 : 공정여행을 위한 상품개발 지원 및 인증제 실시·확대

■ 관광자원 활용하여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 국가관광명소제도 도입 및 지역별 특화관광명소 육성



- 지역 공동 관광사업체(관광두레) 창업·경영지원으로 관광상품 개발 촉진
- 문화예술·전통문화·생태·한류 등 문화특화지역 집중 육성

■ 방한 외래관광객 활성화와 고부가가치화

- 방한 관광객 지방 분산을 위한 지역 콘텐츠 확충 및 시스템 구축
 - 지역 테마파크형 VR·AR 콘텐츠 구축 및 지원
 - 주요 관광시설 공용와이파이 구축 확대
- 저가단체관광 근절: 면세점 리베이트 관행 철폐 및 무자격가이드 근절 강화
- 외국관광객 불편신고 신속 대응반 운영, 피해사례에 대한 정부 추심제도 실시 추진
- MICE, 쇼핑, 미용 등을 연계한 고부가가치 체험상품 지원

글로벌 방송영상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혁신하겠습니다

■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의 활성화와 공정 거래질서 확립

- 전문편성 PP(Program Provider)제작, 온라인 동영상 및 개인 방송 등의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장르의 방송영상콘텐츠 진흥
- 지역방송 및 지역 소재 외주·독립제작사의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
- 방송사와 콘텐츠 외주·독립 제작사 간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규정한 방송콘텐츠 제작 표준계약서 적용의 법적 의무화 추진
- 외주제작사의 비정규 인력과 영세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표준제작비 규정 마련

■ 매체간 균형발전과 상생환경 조성

-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PP의 비대칭적 규제의 정상화
- 정당한 콘텐츠 대가가 제작에 재투자되는 콘텐츠시장 선순환 구조 개선
- 다양한 영상콘텐츠사업 창업 및 관련 산업 지원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 스마트미디어시대에 걸맞는 다분야의 1인 미디어, OTT(Over The Top),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nage), 실감미디어, MCN(Multi Channel Network) 등의 활성화와 합리적 규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

■ 방송광고시장 합리화를 통한 미디어 공공성 확보

- 자본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대·중·소 방송사 간 상생을 위한 방송광고 판매제도의 합리적 재정비
- 정부·공공기관의 정책 또는 사업 및 민간기업 홍보 등 광고주와 결탁된 홍보성 방송광고 거래 근절 방안 마련
- 정부광고의 합리적 배분 및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수행기관의 합리적 개선
- 공식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협찬·간접·가상광고의 고지(집행) 개선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8

■ 시청자 주권의 현실화

- 방송법 상 시청자 및 시청자주권 정의 규정 신설
- 공정한 시청자위원 선임제도 도입 및 시청자위원회 심의의견 방송 발표 의무화 등 시청자위원회 위상 강화
- 유료방송에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 시청자 참여 방송프로그램 편성 확대

-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 및 유료방송에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편성 의무화
-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독립적 심의위원회 운영 및 방송사의 자체심의를 면제하는 등 시민 참여 방송 활성화

■ 미디어교육의 활성화 지원

- 미디어교육 근거,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추진
- 미디어 교육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 미디어교육 활성화 종합 지원 방안 수립
-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가칭)미디어교육위원회' 설립

■ 공정하고 투명한 공영방송 수신료 관리의 체계화

- 시청자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가칭)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 설치로 수신료의 합리적 산정 및 배분 등 관리·감독
- 수신료 수입을 광고 수입과 분리·집행하는 회계분리제도 도입 및 수신료 집행의 투명성 강화

과제 09
어르신,
장애인에게
힘이 되는 나라



치매국가책임제를 강력히 추진하여 어르신과 가족의 고통을 덜어드리겠습니다

1

지역사회 치매 예방·진단·돌봄 체계 구축

- '18년 내 모든 기초지자체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치매(의심)환자 1:1 상담 및 치매 진단 지원, 환자·가족 대상 교육 및 정보제공, 필요 서비스 연계 실시
- 노인복지관을 통한 치매 고위험군 대상 인지활동서비스 제공, 국가건강검진 인지 기능검사 정밀화,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 등 치매 진단 및 지원 강화
- 국공립 장기요양시설 확충('18년부터 '22년까지 시설 이용 어르신의 30% 수준 확대), 치매전담 요양시설 확충,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이상행동증상 환자 단기 집중치료를 위한 치매안심요양병원 설립

요양 및 의료 서비스 지원 확대

- 치매어르신 모두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 확대('18년 경증치매등급 신설 추진)
- 장기요양비의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 대상 확대 및 경감 폭 확대
- 중증 치매환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인하(20~60% → 10%)하고 치매 진단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기저귀 등 복지용구와 시설의 식재료비에 대해서도 장기 요양급여 확대 추진

어르신 틀니에 이어 임플란트 본인부담금도 인하하여 노인 구강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2

어르신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 (50% → 30%)

- 임플란트(1개당) 본인부담액 약 62만원 → 약 37만원으로 인하

* 어르신 틀니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인하 기대효과

-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틀니 본인부담률(50%→30%, '17.11월 시행) 인하
- 틀니(1억당) 본인부담이 1인당 약 56~69만원 → 34~41만원(총 약 6,690억원 → 4,014억원)으로 경감되어 약 33만3천명이 약 2,676억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17년 지급분 기준)
- * 의료급여(1종·2종) 및 차상위(희귀난치성·만성 질환): 20~30% → 5~15%

*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인하기대효과

-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50%→30%, '18. 7월 시행 예정) 인하
- 치과 임플란트(1개당) 본인부담이 1인당 약 62만원 → 37만원(총 약 5,255억원 → 3,153억원)으로 경감되어 약 54만 8천명이 약 2,102억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17년 지급분 기준)
- * 의료급여(1종·2종) 및 차상위(희귀난치성·만성 질환): 20~30% → 10~20%

노인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여 어르신 노후 생계와 사회참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아동 등하교길 안전 지킴이, 우리 동네 환경 파수꾼, 택배 수령 대행 서비스, 급식도우미, 노-노(老-老) 케어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노인 일자리 확대

- 현재 47만개에서 '22년 80만개까지 연차적 확대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우선 배정(취약계층 어르신 일자리 할당제 도입 검토)

▣ 일자의 업무 종류 및 근로시간을 다양화하고 일자리 참여 수당 차등화 ('20년 참여 수당 최대 40만원까지 인상)

* 현재 노인 일자리는 (공익형 기준) 주 2~3일, 1일 2~3시간 근무에 월 27만원 수당 일괄 지급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장애등급제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을 통한 장애인 권리보장 강화
- 등급제는 '19년부터 '22년에 걸쳐 단계적 폐지

▣ 장애인 소득 및 의료, 사회참여 지원을 통한 자립생활 향상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20만원 → '18년 25만원, '21년 30만원) 및 부가급여 현실화
-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고용장려금 단가인상, 공공일자리 확대, 장애인 인식개선 의무화
- 주간활동 지원 등 장애인활동 지원 확대 및 장애인건강주치의제 시행 등 의료지원 확대
- 자립정착금 지원 등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생활 환경 조성

▣ 장애인 교육, 이동, 문화·여가·체육 접근권 강화

- 특수교사 법정정원 단계적 확보, 특수학교(급) 신·증설 및 장애학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평생교육 지원 강화
-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확충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확대
- 장애인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강화

■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강화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수신 장치 내장형 디지털TV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방송 수신기 보급 확대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은 뉴스, 선거관련 방송, 국가재난 등 긴급방송에 가장 우선적으로 100% 시행
- 주시청시간대와 어린이 시청시간대는 100% 자막방송 시행
- 수화 및 화면해설 비율을 현재보다 2배 이상 확대
- 장애인을 위한 지역미디어센터 공간 확보로 장애인 미디어 접근권 확대
- 장애인의 시청 및 프로그램 참여 활용이 가능한 방송장비 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과제 10

집 걱정 없는
사회

계층맞춤형 주거지원으로 선순환 주거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1

■ 임기 내 주거취약계층 전체로 주거지원 확대 · 선순환 주거복지 구현

- 취약계층: 주거빈곤층 맞춤형 응급주거 제공, 최저주거수준 미달가구 전체로 주거 급여 확대
- 임차가구: (준)공공임대 확대, 임대등록제 확대 실시,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전월세전환율 조정, 취약계층 우대금리, 임대차분쟁조정권 강화 등으로 임차인 주거권 강화
- 내집마련 가구: 생애최초내집마련 지원 확대, 신혼부부 주거지원제도 수혜 확대, 실수요자용 저가주택 공급 다변화 등으로 내집마련 지원
- 하우스푸어: 하우스푸어를 위한 1가구1주택에 대한 임의경매 제한, 장기고정금리 유도, 원리금 동시상환 시 이자경감 추진 등
- 다주택가구: 1가구 1주택기조 유지,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임대등록 추진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정책으로 주거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2

■ 토지의 공공성 강화

-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적극 반영

■ 소득주도성장에 맞는 부동산세제 개편

■ 직접규제 중심에서 부동산 불로소득 규제 중심으로 부동산정책 전환

■ 저렴한 택지공급 및 원가공개로 실수요자용 저가주택 공급 확대

■ 주거취약계층, 청년, 여성,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1-2인가구 등 맞춤형 주거 제공

■ 주택시장 선진화

- 공급 측면: 준공공임대 인센티브 강화, 공공임대 200만호 확보 등을 통한 공급 확대
- 수요 측면: 1가구 1주택기조 유지, 실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 다변화
- 시장 측면: 지자체별 주거지도 운영, 투기근절 및 불로소득 공평과세, 표준임대차 계약 의무화, 임대 · 임차인등록제 도입, 공공자가주택, 사회적임대 시범 도입

■ 공공임대 선진주택관리체계 구축

- 〈주택관리공단〉 기능 강화 및 전문화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비용절감, 투명 관리로 비리 척결
- 공공임대 유형을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대기자명부 제도 개선

청년 ·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정책으로 집걱정을 덜겠습니다

■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 5년 간 공적임대주택 25만실 공급 및 기숙사 5만명 지원
-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까지 임대 공급 확대

■ 청년을 위한 금융지원 및 주거정보 제공 강화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도입
-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에게 전세자금 대출 지원, 월세대출 한도 상향
-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찾아가는 상담 · 교육 등 주거정보 제공 강화

■ 1-2인 가구 맞춤형 주거 공급 확대

■ 청년 및 대학생을 위한 공공 셰어하우스 공급 확대

■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대상자는 시세의 70~85%로 거주 추진

장수명주택 · 녹색건축 확대 등으로 주거만족도를 향상하겠습니다

장수명주택 지원, 활성화

- 1기신도시 등 수직 · 수평증축 리모델링 활성화
- 빈집 매입임대 확대, 대형아파트 세대분할 추진

친환경 · 에너지절감주택(패시브하우스) 표준화 및 육성, 한국형 온돌 등 에너지절감 시스템 육성

공공임대에 친환경주택 우선 적용 및 주거취약계층에 우선 공급

지자체 그린리모델링 기금 조성 · 운영을 통한 노후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추진

다양한 형태의 대학기숙사를 확충해 대학생 주거비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기숙사 투자기준(건축목표량) 5만명 확충('22년까지 실입주 3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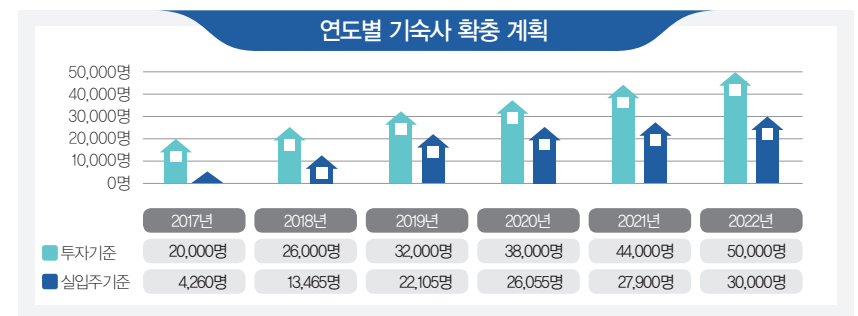
- 정부 및 지자체가 협력해 질 좋고 저렴한 다양한 유형의 대학생 기숙사를 제공해
대학생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 완화

* '17년 대학생 기숙사 수용률 : 21.2%(약 35만명 수용)

학교 밖 국 · 공유지 확보 등을 통한 연합기숙사 등 다양한 형태의 기숙사를 제공

- 연합기숙사 확충, 국립대 BTL 기숙사, 공공기금(주택도시기금 및 사학진흥기금)을
활용한 사립대 공공기숙사 확충 등

세금감면 및 공공요금 인하 등을 통해 공공기숙사 · 연합기숙사의 기숙사비 부담 완화 추진



Ⅲ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는 나라



- 수도권 인구편중과 경제력 집중으로 인해 지방 인구가 감소되고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음.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기 위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함.
- 풀뿌리 민주주의 확립은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량이 충분히 보장될 때 이루어질 수 있음. 제2국무회의(국가자치분권회의)를 제도화하여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함.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에 따른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별 감사 기능 강화, 공익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청정분권을 달성할 것임. 지방정부가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적극 나서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임.

-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균형발전이 핵심적 과제임. 혁신도시 시즌 2로 균형발전을 완성해 나갈 것임. 지역 특화 산업 발전 전략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룩할 것임.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시 활력 제고를 위해 원도심과 노후 주거지 등을 개선하는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임.
-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특성을 살려 스마트 혁신도시 선도 모델을 창출할 것임. 혁신도시 내 생활문화 시설을 확대하여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갈 것임.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역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활용할 것임. 지역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원의 30% 수준을 지역인재로 채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임.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는 나라

11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12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1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겠습니다

▣ 중앙과 지방의 소통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2국무회의(국가자치분권회의)제도 도입

– 대통령, 국무총리, 시도지사 및 행안부 등 관계부처 장관 참석

▣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속적으로 지방에 이양하여 지방의 권한을 확대

– 일자리 창출, 규제완화 등 지방파급 효과가 큰 기능중심 이양사무 발굴
–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통하여 중앙행정기관 권한 및 사무를 일괄적 이양

▣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선 및 자주재원 확충 등 재정분권 확대

– 지방소비세 확대 등을 중심으로 지방자주재원 확충하여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향후 6:4 수준까지 개선 추진
–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등 신 세원 발굴
–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 및 예산낭비사업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2 주민참여제도를 확대·개선하여 주민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예산편성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

▣ 주민투표 전에 주요 현안을 숙의·공유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 강화

▣ 주민소환 청구 및 개표 요건을 하향 조정하거나 지자체의 인구규모 등에 따라 차등화

▣ 주민소송을 위한 공공기관 정보 공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주민소송 과정에서 증거개시제도를 활성화

* 증거개시제도

소송 개시 전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관련 문서를 요구하면 관련 문서를 빠짐없이 내도록 하는 영미권의 소송증거수집 방법

청렴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청렴도 평가 상위 지자체에 재정인센티브 부여

-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정부합동평가 기준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특별교부세를 추가적으로 지원
- 주민·민원인 등 외부 평가를 강화하고 부정부패사건에 대한 처리 및 관리 점수를 부여하는 등 제도 내실화

지역 감사인력 전문성 강화 및 공익제보 활성화 등을 통한 청정분권을 실현하겠습니다

- ▣ 지자체 감사인력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인력에 대한 선임기준 확립 및 직렬제 등 도입
- ▣ 시민감사관 등 주민들의 감사기구 참여 확대를 제도화하여 주민들에 의한 객관적 외부 감독
- ▣ 광역지자체 별로 공익제보자 센터를 설립하여 권력형 비리 등 다양한 종류의 지역적폐를 해소
 - 독립된 지위를 가진 변호사, 세무사, 복지전문가 등 외부인사로 구성된 공익센터를 설치하여 담당 영역에 맞는 제보자 지원체계 구축
- ▣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 해결 시스템으로서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지원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해 주민 보호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 자치경찰권을 지자체에 귀속시켜 아동·여성 성범죄, 학교폭력 등 지역별 독특한 치안수요에 대응
 - 국가경찰은 정보, 보안, 수사, 테러 등 시국치안을 전담하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교통, 일반수사 등 민생치안에 주력해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
- ▣ 경찰에 집중된 권한을 제한하기 위하여 경찰위원회 권한 강화 및 위원 구성 다양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마을공동체기본법 제정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 ▣ 마을공동체기본법 제정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기반 구축
 - 공동체에 대한 국가·지자체 책무, 활성화 계획, 추진체계, 지원 등 규정
- ▣ 마을기업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마을 기업의 인식을 제고하고 판로 지원
 - 마을기업 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유통형 마을기업을 광역거점 단위로 설립하여 지역 마을기업의 안정적 판로 확보 지원

분권형 자치 농정을 실현하겠습니다

- ▣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다부처·다기능적 사안을 협의하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추진
- ▣ 지자체장 직속 자치농정위원회 설치 추진
- ▣ 현장 농업인의 의사 결집과 농정 참여의 가교역할을 하는 대의기구를 만드는 농업회의소 법적 근거 마련 및 활성화 추진
- ▣ 지자체별 농업농촌식품 발전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포괄지원과 사후 평가 체계구축으로 지역농정 활성화 뒷받침

지자체가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 ▣ 지자체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사업 지원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경평축구, 제주도 감귤지원 등 지역 특화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 ▣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DMZ환경관광벨트 및 통일경제특구 조성 추진
- ▣ 지역 특화 산업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연계 추진 검토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 로드맵에 지역 특화산업 발전 전략과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 ▣ 지역차원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역통일센터 설치 확대
- ▣ 남 제주도 – 북 양강도 등 남북 지자체별 자매 결연 추진
 - 지자체 차원 상시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 마련



과제 12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혁신도시 시즌2로 균형발전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1

■ 혁신도시 시즌2(스마트시티) 추진

- 이전기관의 특성을 살려 '스마트 혁신도시 선도모델' 조성
- 혁신도시 내 종합병원 유치, 문화·복지·체육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 고속철 운행 확대, 고속·시외버스 경유노선 확대 등 광역교통망 확충

■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의 성장거점으로 육성

- 이전 공공기관이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
- '22년까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목표 30% 달성
-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도 혁신도시 인근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혁신도시와 원도심 재생 연계
- '22년까지 혁신도시 입주기업 수 대폭 확대

도시재생뉴딜로 도시경쟁력 강화, 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을 이루겠습니다

2

■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에 선진국 수준의 생활인프라를 확충

- 마을도서관, 커뮤니티시설 등 생활인프라의 국가최저기준 마련
- 공적지원을 강화하여 자율주택 및 가로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통해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지역 기반의 일자리를 창출

- 창업공간, 청년임대주택, 각종 공공서비스 지원센터 등이 연계된 복합 앵커시설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조성
- 지역의 건축가 및 설비·시공 기술자 등을 「터 새로이 사업자」로 지정하고 창업공간 임대, 초기사업비 지원을 통해 육성
- 도시 내 국·공유지,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공간에 저렴한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을 조성하여 시세 50%이하로 저렴하게 제공

■ 지역이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

- 지역이 교육과정을 기획·시행하는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을 활성화
- 도시재생 현장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수 있는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확대
- 단계적으로 뉴딜사업 선정 및 관리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 주민·영세상인이 내몰리지 않고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공공임대사가 공급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역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3

■ 혁신도시, 인근 산업단지 등 지역의 핵심거점을 연계하여 시도별 맞춤형 국가혁신클러스터(국가혁신융복합단지) 조성

- 기존에 인프라가 갖추어진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시도별 자율적으로 국가혁신 클러스터 육성계획 수립
- 지역별 육성계획을 바탕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혁신클러스터 거점 확정

■ 지역기반 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세제·금융지원·규제특례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 지역의 산학연 혁신체계 구축

-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인근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기업 등이 공동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혁신프로젝트 발굴 등 추진

■ 국가혁신클러스터를 테스트베드로 하는 지역대표산업 실증프로젝트 지원

- 국가혁신클러스터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대표산업을 선정하고, 해당 산업의 육성을 지원할 실증프로젝트 지원

투자지원제도를 개편하여 국내기업, 외투기업, 유턴기업의 지방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4

■ 국내기업, 외투기업, 유턴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 지원 강화

- 지방 신증설기업, 경제특구 투자 국내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 유턴기업에 대한 입지지원 강화 및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부분복귀 시 조세감면 지원

■ 신기술·대규모 고용 수반 지방투자 시 지원 우대

- 신성장동력산업기술 및 업종별 대규모 고용투자 시, 세제 지원 우대 및 투자보조금 지원 확대

■ 경제특구가 지방투자의 거점이 되도록 개편

-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등 지역기반 경제특구를 4차 산업혁명 허브로 육성
- 외국인투자지역도 국내기업 투자가 가능하도록 개편하여 국내외 기업 차별 없이 지원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설비, 입지)을 지속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공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공공기관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유도

- 공기업 등이 소재한 지역에 재투자사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경영실적 평가에 활동 성과를 적극 반영
- 신규채용 인원의 30% 수준을 지역인재로 채용하여 공공기관 채용 기회 확대

▣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공공기관 경영목표 수립 시 반영

- 좋은 일자리 창출, 일·가정 양립 지원,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 기여를 경영목표 수립 시 반영하고 실천 성과를 평가에 반영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하여 지방재정에 기여하겠습니다

▣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 부여

- 현 거주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 기부하는 경우 10만원까지는 정치후원금과 함께 전액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반 기부금 세제 혜택 부여

▣ 고향기부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 제공을 허용하되, 과열경쟁 방지를 위해 상한선 설정

광역교통망 확충 등으로 대도시권 교통난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 ❑ 버스준공영제를 강화하고 (시간, 노선) 네트워크 통합을 추진하여 출퇴근시간 교통 불편을 최소화
- ❑ 광역급행버스(M버스) 확대
- ❑ 수도권 외곽지역과 서울도심 주요거점(서울역, 삼성역 등)을 20분대로 연결하는 고속 광역급행 철도망 구축
- ❑ 수도권 내 광역전철망 지속 확충
- ❑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으로 광역교통 혼잡, 안전문제 등 해결

식품산업을 지역거점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 ❑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복합 푸드 랜드마크 조성 및 국비지원 확대
- ❑ 전통발효식품과 전통주의 우수성을 규명하고 세계화 지원 방안 마련
- ❑ R&D 지원 확대, 창업 저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푸드테크산업 육성
- ❑ 지역별 음식문화거리 중 특색 있는 곳을 우수음식거리로 선정·육성

미래농업의 핵심주체를 육성하고 직불제를 농가단위의 공익형 위주로 개편하여 농가소득과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 능력 있는 신규 청년창업농 1만명 선발하여 영농창업 적극 지원

- 청년농업인 직불제 대상자 확대(1,200명→2,000명) 및 임대형 청년 경영실습농장 추가 설치(30개소→180개소)
- *청년농업인 직불제 : 최대 3년 간 월 최고 100만원 정착지원금 지원
- 청년농에게 정부 비축 농지 우선 임대
- 후계농자금 상환기간을 귀농귀촌인 수준으로 연장(3년 거치/7년 상환 → 5년 거치/10년 상환) 및 금리 인하(2% → 1%) 추진

■ 여성농업인 경제활동 지원을 통한 성평등 농정 추진

- 지자체의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 여성농업인센터 확대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연령기준(20~75세 이하)과 지원금액(20만/연) 확대
- 농협의 여성임원비율을 '22년까지 20%이상으로 확대('17년 6.1%)

■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 귀농귀촌인 실시간 상담센터 운영, 행복멘토 지정과 멘토링 데이 운영
- 마을공동체기본법과 사회적농업법 제정 등을 통해 농산촌형 사회적 일자리 제공, 단계별 맞춤형 교육·주거·자금 등 패키지 지원체계 마련

■ 농어업재해 지원기준 현실화 및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노지채소까지 확대

■ 밭농업 기계화율을 논농업수준으로 제고('17년: 58.3% → '22년: 75.0%)하고 논에 밭작물 재배를 위한 잠곡전문단지 조성 및 소규모 배수개선 지원

■ 직불제를 농지면적기준에서 최소소득을 보장하는 농가단위의 공익형 직불제 위주로 개편

■ 새로운 소득원으로 주민 출자형 농촌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숲을 일자리와 휴식 공간으로 재창조하겠습니다

■ 산촌을 은퇴자, 귀촌인이 살고 싶은 선진공간으로 육성

-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공간으로 30개의 산촌거점권역 육성
- 지역특화자원을 발굴하여 산촌과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 확산
- 산촌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맞춤형 귀산촌 정착 지원 확대

■ 산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핵심 자연자원으로 육성

- 수종갱신, 특화 조림, 임도밀도를 확대하여 산림을 경제림으로 개조
- 목재생산·가공을 연계한 목재산업단지 조성 및 목조건축 지원 실시
- 산림휴양, 교육, 치유 등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기반 구축

■ 산림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등 일자리 6만개 창출 지원

- 지역기반 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림일자리발전소 확대

■ 어디서나 10분 거리에 접근할 수 있는 그린 인프라를 조성

- 도심·아파트·공단에 완충녹지 조성 및 가로숲 확대, 숲속 놀이터 조성
- 원도심 재개발지, 군부대이전지 등을 지자체 상징정원으로 조성
- 반려동물 정원, 숲길 연계형 지역명소 조성 등 특성화 산림공간 창출
- 도시재생사업, 미집행도시공원 등 활용한 도시 숲·정원 확대

■ 도시 내 비오톱 역할을 하는 옥상정원 조성('22년까지 70개)

- 도시 건물옥상에 정원을 조성하여 도시민에 휴식공간 제공과 동식물의 녹색통로로 활용
- 콘크리트 건물의 복사열 발생을 줄여 에너지 사용 절감, 온도 저감으로 미세먼지 활성화도 및 발생량 감소

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지원 및 스마트 해상물류 체계를 구축하여 해양수산 신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ICT·IoT를 활용한 스마트 육상 양식단지 시범조성
- ICT·BT 등 기술을 접목한 친환경 첨단 양식시스템 현장보급 확대
- 참다랑어, 뱀장어 등 고부가 전략 양식품목 집중 육성
- 해상운송 전 과정의 기술혁신을 통한 스마트 해상물류 구현
 - 자율운항선박: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AI, 빅데이터 등)이 적용되어 최소한의 선원에 의해 운항가능한 자율운항선박 연구·개발 추진
 - 해상 내비게이션: IMO e-Navigation 도입(~'20년) 관련 '한국형 e-Nav 사업'을 추진하고, 전국 연안에 최대 100km 해역까지 통신이 가능하도록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aritime) 구축
 - 스마트 항만: 지능화된 항만 운영시스템 기술 개발과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도입 및 친환경 항만 인프라 확충

연안 및 항포구의 정주개선을 통해 쾌적한 도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연안침식·침수 등 연안재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연안을 만들기 위해 연안정비사업 확대 추진
 -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년~'29년) 수립 시 연안정비사업 범위 및 규모를 대폭 확대
 - 연안지역을 위협하는 침식 및 침수 등 연안재해로부터 안전한 연안보전사업 확대 추진
 - 연안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친수공간조성사업 확대 추진
- 낙후된 소규모 어항·포구 중 선도 투자 대상 300개를 선정, 단계적 정비
 - 소규모 어항·기항지 등의 지역별 환경, 이용객 수와 특성 등을 분석·유형화하고, 국가사업으로 연차별 개선계획 수립

해양환경 위해요소의 체계적 관리 및 갯벌 관리·복원 체계를 통해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를 만들겠습니다

■ 연안지역의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특별관리해역의 방류수기준 강화 등
환경정화사업 추진

■ 해양폐기물법 제정을 통해 해양폐기물의 전 주기적(발생-수거·처리-
유효활동-모니터링) 관리 체계 확립

- 해양쓰레기의 발생원부터 수거·처리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해양쓰레기
관리 종합대책' 마련
- 오염에 취약한 지역의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지속 추진('18년 울산 장생포항, 포항
동빈내항 등 실시 예정)

■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

- 훼손·오염된 갯벌 생태계 개선을 위해 복원사업 확대
- 기존 '보호' 중심의 갯벌 관리에서 나아가 체계적 관리, 복원과 현명한 이용의 조화를
위한 근거 법률 제정 추진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자율 휴어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기존 금어기 및 업종 자율 휴어기와 최대한 연계 실시하여 수산자원
보호효과 최대화

- 어린물고기와 산란기 어미 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조업을 중단하는 휴어제 도입
추진
- 수산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업종별 자율휴어기를 도입하여 수산자원 회복을 도모

■ 대형선망을 대상으로 법정 금어기 외 휴어기 도입을 유도 지원

- 자율휴어기를 도입하는 업종 종사자 고용안정을 위해 어선원 일자리 유지 목적
재정지원 실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군으로 거듭나겠습니다

■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지역에 대해 군사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적인 규제 완화 추진

■ 해·강안 철책 효용성 검토 및 감시장비 대체를 통한 철책 제거 범위 확대

- 군이 경계작전을 위해 설치한 철책에 대해 군 주도로 철거 시행
-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일대 140Km 철조망 철거로 지역관광지역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전국 미사용 군사시설 일제 정리 및 개선 추진

- 전국의 미사용 군사시설에 대한 실태 전수조사, 합동 현장검증을 통해 불필요한 시설을 정리·개선하여 국민편익 및 지역개발에 기여

* 전국 해안지역의 군사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부터 우선 실시

자연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국토 이용을 실현하겠습니다

■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국토관리

- 대체나 복원이 불가능한 지역은 보전하고, 훼손이 불가피한 지역의 경우 동일가치 이상으로 대체 복원시키고, 대체복원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을 불허하거나 복원비용을 부과하는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 평가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추진

■ 4대강 재자연화 추진

- 보 상시 개방 추진
- 민관합동 조사·평가단 구성·운행을 통한 4대강 재자연화 방안 마련

■ 통합물관리로 건강하고 안전한 물환경 조성

-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개편 추진
-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별 취수, 수요관리를 강화로 가뭄대응 실현
- 식수 및 농공용수 확보를 위한 소규모 거점 저수지 확충 사업 및 저수지 준설사업 추진
- 기상·농업·생공용수 공급과 연계된 통합적 가뭄 정보 제공
- 상습가뭄지역에 이동형정수장치 보급 및 도서지역 해수담수화 사업 추진
- 하천유역 홍수 정보 전달체계 개선 등 홍수대응력 강화
- 불법축사 관리강화로 수질오염 사전예방 추진
- '지하수총량관리제도' 도입으로 고갈되는 지하수자원 관리강화

지역 재생에너지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 지자체가 주도하여 재생에너지 보급·확산

- 지자체 주도로 재생에너지에 적합한 부지를 발굴·공급하고, 사업자의 개발이익을 지자체와 공유하여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지역 발전과 연계
- 지자체 재생에너지 보급계획 수립 지원을 통해 정부·지자체 간 일관된 정책 추진 및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 유도

▣ 지역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 지역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지역맞춤형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 추진

▣ 에너지신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 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지역별로 특화된 에너지 신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추진

▣ 지역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비즈니스 모델 발굴

- 국민들이 손쉽게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확대, 소규모(100kW 이하) 사업지원 및 협동조합을 통한 참여 활성화, 농촌 태양광 활성화 등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LPG 배관망 구축 지원

생활문화가 실현되는 참여형 지역문화를 실현하겠습니다

▣ 주민자율의 문화동아리 형성 지원

- '18년~'22년 매년 100개 동호회 신규결성

활동유형	문화동아리 지원내용
지역특화	설립 및 운영 컨설팅
문화예술·산업	공연·전시 등 공간 지원
사회공헌, 신규 장르	동아리 간 교류지원

- 마을자원 활용 생활문화 프로젝트 지원

* 마을현황 조사, 마을자원의 문화화(북카페, 공연장 등 기획·정비) 지원

▣ '작은 문화시설' 확충

- 작은도서관, 작은미술관, 작은영화관(실버극장) 등 확대
- 지역단위의 복합 문화 콘텐츠 누림터 조성

▣ 문화 소외지역의 문화 공간 확대

- 폐교·폐시설의 유휴 공간 리모델링의 관광진흥기금의 융자 지원
- 문화균형지수 개발과 낙후지역 우선 지원
- 문화재생(문화 공간+문화 프로그램+문화전문인력) 활성화 종합 지원: '22년까지 문화도시 30곳, 문화마을 50곳 신규 조성

지역 균형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중앙주도의 연구개발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마련과 예산 조정 추진

▣ 지방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역량 강화 제고

- 지역과학기술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지역과학기술 컨트롤타워로서의 정책 역량 제고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연구개발지원단 등을 활용한 정책담당자 교육훈련 확대
- 과학기술 전문가의 지방정부 채용을 확대하고 우수지역 지방정부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지역전략분야의 연구를 담당할 거점대학 선정 및 육성 지원

▣ 지역 연구개발지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계분석 시스템 구축과 이를 중앙의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NTIS)과 연결하여 정책 입안에 활용

지역주민의 미디어 접근권 강화와 지역방송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 지역 미디어 허브로 지역미디어센터 활성화

- 지역민의 지역미디어센터 참여 활동 지원 강화
- 지역별로 지역미디어센터 설립 확대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 지역 소통과 참여의 공간으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 공동체라디오의 출력 증강, 진입 · 소유 · 편성 규정 정비
- 공적 지원, 신규 허가 등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수립

▣ 지역방송의 지역 대표성 강화를 통한 자생력 강화

- 지역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지배주주의 전횡 방지 방안 마련
- 각종 법정기구에서 지역 대표자 필수 참여 추진
- 차별화된 지역 방송사의 재허가 심사 기준 개선

▣ 실효성 있는 지역방송 지원

- 지역방송 지원 예산의 현실화 및 지원 예산의 콘텐츠 개발 지정 의무화
- 자체제작 편성 비율, 콘텐츠 유통 실적, 경영실적 및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을 반영한 차등적 결합판매 비율 산정 기준 개선

21

신문시장의 건강화와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으로 신문언론의 발전을 이룩하겠습니다

■ 신문광고 및 구독자 확장의 불공정 거래 근절로 신문시장의 정상화

- 정부·공공기관의 정책 또는 사업 및 민간기업 홍보 등 광고주와 결탁된 홍보성 기사 거래 근절
- 무가지와 경품 규제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 및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신문고시 개정

■ 지역언론 육성을 위해 지역신문 지원 확대 추진

- 한시법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상 강화
- 지역신문발전기금 확충과 공정한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
- 정부 지원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신문의 경영과 편집의 엄격한 분리
- 지역신문에 대한 디지털 사업 및 재교육 지원 강화

22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중앙정부의 외교네트워크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외교활동 적극 지원

- 지자체 외교 네트워킹 및 자매결연·우호도시 체결 지원 강화
- 지자체 내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현지 시장 정보 등의 제공을 통해 지자체 투자 확대 및 해외진출 적극 지원
- 외교부-지자체간 공공외교 협업사업 추진, 재외공관을 통한 지자체 홍보활동을 통해 지자체의 공공외교 역량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외교부간의 인사교류를 확대

- 인구 10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와 외교부 간의 인사교류 도입 추진

IV 평화로운 국민의 나라



- 국민들의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폐단을 해소하고 정의의 기반 위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음. 사유화된 국가권력과 무능한 정부에 대한 불신을 해결하고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는 것이 촛불민주주의 완성임. 국민의 뜻과 참여를 우선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통해 새로운 평화의 시대의 개막을 국내외에 선언 하였음. 민주당은 남북관계의 전면적, 획기적 개선과 발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위험 해소,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국민과 함께 노력할 것임.

-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적 희망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무엇보다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강한 안보, 책임 국방은 국가의 책무임. '판문점 선언'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분단과 대결을 종식시키고 민족화해, 평화번영을 이루어 내야 할 것임.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반도 · 동북아 평화를 반드시 이룩할 것임.
- 북핵문제 진전에 따라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본격화할 것임. 평화가 경제임.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우리의 새로운 한반도 경제지도를 동북아, 유라시아로 확장할 것임.

평화로운 국민의 나라

- 13 촛불민주주의 실현
- 14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 15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실현

과제 13

촛불민주주의
실현



1 공수처 설치 ·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력형 비리 엄단 · 검찰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 ❑ 권력형 비리를 엄단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
- ❑ 국민이 이중으로 수사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이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검 · 경 수사권 조정
- ❑ 경찰에 지나친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자치경찰제 도입,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분리 등 경찰제도를 개혁

2 국민과 함께하는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겠습니다

- ❑ 5대 중대 부패 범죄 처벌강화와 경제범죄와 재난 · 환경 등 집단적 피해 발생 사건 등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 확대 추진
- ❑ 위법한 재정회계상의 행위에 대한 손해 예방이나 회복을 위한 국민소송 제도를 도입
- ❑ 범국가적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 현행의 국민권익위원회를 개편하여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로 '(가칭)국가청렴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보강
 - 범정부 차원의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수립 · 시행 추진
 - 반부패 활동에 대한 민간의 참여 확대
 - 공직자 직무와 관련한 이해충돌방지 제도 강화
- ❑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및 민관협력 강화
 - 공익신고자 보호범위 확대 및 신고자 보호 강화
 - 국민감사청구 대상 확대 추진
 - 민간부문 청렴도 개선을 위해 기업의 윤리경영 지원 활동 확대
- ❑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 '(가칭)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하여 'K스포츠포츠'나 '미르재단'과 같은 특혜성 공익법인 설립 근절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3

공공기관 임직원 윤리의식과 책임 강화

- 공공기관 임직원의 윤리의식과 책임을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적용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 체결 시 법인·단체·개인과의 정실관계를 통한 의사 결정 금지 및 배제

공공기관의 건전성 강화

-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해외사업 출자 시 자회사에 대한 관리 책임성 강화(자회사의 손자회사 출자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를 제외하는 등 자율성도 강화)
- 공기업 등의 신규 부채 추가 발생에 대한 관리 강화
-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인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 출자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겠습니다

4

정치적 독립성과 공적 책무 이행과 방송의 공정·공익성 실현을 위한 방송사 이사 및 사장 선임기준과 원칙에 대한 법·제도 개선

방송의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확보

- 보도·제작·편성권과 경영의 분리·독립
- 편성위원회는 방송사업자와 취재·제작·편성부문 종사자 대표가 동수로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
- 편성위원회의 권한(방송편성규약 제·개정, 방송편성책임자 임명제청,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 등)의 명문화
- 이사회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이 첨부된 회의록 작성·보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록 공개
- 공영방송의 시청자위원회 위상 및 권한 강화

자본권력 또는 외압으로부터 방송의 독립

- 지상파방송 및 보도전문·종합편성채널의 자본권력으로 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 지주회사 또는 지배 주주에 의한 방송 사유화 방지책 마련
- 공적지분 보유 방송사에 대한 정치적 독립성·중립성 강화 방안 마련

인터넷상 익명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 위헌 결정된 인터넷실명제 관련 제도 개선

- 공직선거법, 게임산업법 등 관련 법상의 인터넷실명제 개선

❑ 정보통신망법상의 삭제·임시조치 제도 개선

-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반영한 삭제·임시조치의 해제 등으로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과 방어권 보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의적 임시조치 제도 폐지

❑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언로(言路) 확보

- 인터넷상 '진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친고죄 전환 및 위법성 조각사유 대폭 확대
- e-클린(건전 인터넷) 환경 조성 과 인터넷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홍보·교육 및 기술 지원

진실규명과 보상을 통하여 과거사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겠습니다

❑ 5·18광주민중화운동, 제주4·3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과 실질적 배·보상 실시

❑ 과거사 통합 실천기구로서 '과거사 통합재단' 설치·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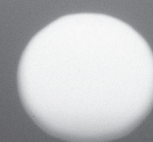
- 과거사별 피해자·유족단체 등이 참여하여 위령사업 추진 및 유족지원 방안 마련

❑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을 재개하여 과거사 미해결 사건 접수 및 진실규명 조사 착수



과제 14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강한 군대로 거듭나겠습니다

1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 대북 감시 및 조기경보태세 확립, 실질적인 통합방위 훈련을 통해 '평시 능동적 억제, 유사 시 전승 보장'의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 북한 핵·미사일 위협 수준에 대응하여 한국형 방어 체제 구축 및 억제능력 강화

■ 책임 국방을 구현할 수 있는 「국방개혁 2.0」의 강력한 추진

-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조건에 기초한 전략권 전환을 조속히 추진
- 병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 주요직위 문민화 및 제도적 정착을 통한 국방부 문민화 실질적 추진
- 피복, 방탄헬멧, 무기 등 전투장구류 품질 향상을 통한 장병전투력 확대
- 과학화 훈련장 개선·설치(24년까지 40개)를 통한 예비군 전투능력 제고, 예비군훈련 보상비 현실화

장병들의 복무여건 개선 및 인권을 강화하여 체감복지를 증대시키겠습니다

2

【군 복무여건 개선】

■ 병 봉급 연차적 인상 및 목돈마련을 위한 지원 확대

- '22년까지 병 봉급을 연차적 인상
* 병장기준 216,000원('17년)→ 676,115원('22년)
- 자율저축을 통해 전역 시 목돈 마련 가능토록 제도 개선

■ 구형 병영생활관 및 낙후된 병영식당의 현대화 추진

- 침상형으로 된 병영생활관을 침대형으로 개선
- 노후·협소한 취사식당 개선(2교대 기준)

■ 군대 급식의 질 향상

- '급식혁신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장병 만족도 향상

【장병 인권보호 강화】

■ 군대의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개선

- 병사들의 일과시간 외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제초·청소 등의 사역임무를 단계적으로 민간인력으로 대체
- 병사들을 지휘관의 사적인 목적으로 운용할 수 없도록 제도 마련

장병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 개선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특별법」(’18. 3월 공포)을 통해 군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실시하여 의혹 해소
-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인권보호관제도 도입
- 다양한 상담기법을 도입해 심리적 안정 및 자신감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린 캠프 운영 개편 추진

공명정대한 수사 및 재판을 위한 군 사법제도 개혁

- 군사재판에 대한 지휘관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할관 확인조치권과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고 장병의 재판과정에서의 참여를 보장
- 군 범죄 피해자 및 사망사고 유족에 대한 국선변호사제도 신설 추진
- 군 수사 독립성·공정성을 제고하고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군 검찰의 군 수사 기관에 대한 수사지도권 도입
- 1심 군사재판은 외부 민간 법조인이 법원장인 군사법원에서 담당하고 항소심은 민간법원으로 이관

【장병 체감 복지 증진】

여군 비중 확대에 따른 성평등 강화 및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무 여건 보장

- 여군 보직제한 직위 폐지 및 남녀 공통으로 적용가능한 지휘관 자격요건 마련
- ‘임신·출산·육아’지원 강화,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확산 노력: 군 어린이집 확대 설치, 공동육아나눔터 확충, 출산전후 여군 당직근무 면제기간 확대 등
- 군내 여군 관련 성범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철저히 적용 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

군 복무 중 관련 분야 학점 인정 확대 추진 및 자기계발을 위한 지원 확대

민고 신뢰할 수 있는 군 의료시스템 개편

- 전투임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군 의료역량 강화
- 국군수도병원에 외상센터를 설립, 민간병원과의 협업을 통해 진료역량 획기적 개선
- 특수의학 등 군 전문의료 분야 전문성 강화 및 국군병원 통·폐합 통한 군 의료체계 효율성 강화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방위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엄정한 처벌 및 예방시스템 강화

국방 R&D 지식재산권의 과감한 민간이양으로 민·군융합 촉진 및 방산 육성

- 국방 R&D 지식재산권을 개발업체와 국가가 공동소유하고, 민·군이 공동으로 R&D를 기획·개발하여 방산육성 지원
- 개방형 국방 R&D 체계 구축으로 산학연 우수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도전적 R&D 환경을 조성하여 첨단무기 국내개발 활성화

경쟁제도 활성화로 산업·국방·예산효율화의 선순환 구조 구축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

- 방산 인프라 및 경쟁력 강화로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확보, 수출형 산업으로 도약
- 일자리 창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위산업진흥추진체계 마련

국가를 위한 헌신, 대한민국이 책임집니다

보훈가족을 위한 의료·요양 시설 확충

- 인천보훈병원·보훈의학연구소의 차질없는 개원
- 강원권·전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 지방보훈병원 내 재활센터 연차적 확충
- 심리재활집중센터 및 심리재활상담사 배치 확대('18년~)
 - 금년 하반기에 6개 지방보훈관서에 사회심리재활상담사를 배치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

- 국립괴산호국원과 제주국립묘지의 조기 조성 추진
- 국립대전현충원과 국립이천호국원의 묘역 확충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국제보훈 사업 강화

- 의무복무자에 대한 유공자 심사기준 합리적 개선 추진
- 의무복무자중 경상이자에 대한 지원 확대 추진
- 제대군인의 취업지원 강화 및 강원권 제대군인지원센터 설치 추진
-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인상 추진
- 6·25전쟁 70주년(2020년) 계기 UN참전용사 감사행사 등 국제보훈 사업 강화

3.1운동 정신 계승과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사업,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17년~'20년)

정부 주도 독립유공자 발굴 및 공훈 선양 사업 강화

독립운동 시설 및 사적지 보존·관리 강화

서울시 소유 효창공원의 국립묘지화 등 성역화 추진



과제 15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실현



‘판문점 선언’이행으로 북핵문제 해결 ·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1

▣ 2018 남북 정상회담 합의사항인 판문점 선언 이행

▣ 남북관계의 전면적, 획기적 개선과 발전

- 고위급 회담 등 분야별 대화 실천
-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

▣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위험 해소

-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 서해 평화수역 조성, 안전어로 보장
- 군사문제 협의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장관회담,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
-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 · 북 · 미 3자 또는 남 · 북 · 미 · 중 4자회담 개최 추진

▣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추진

▣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 남북관계 발전,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국회 회담 추진

2

북핵문제 진전 상황에 따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이행으로 남북 공동 번영을 이룩하겠습니다

▣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 재개 추진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이행

- 환동해권 경제벨트 : 경원선 철도 연결, 두만강(나선) 지역 공동개발 등을 통해 우리 동해안과 러시아 · 중국을 연결
- 환서해권 경제벨트 : 한반도 · 동북아 고속 교통물류망 건설사업 등을 통한 서해안 경협벨트 건설
- DMZ환경관광벨트 : 설악산,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잇는 관광벨트 구축 및 DMZ를 생태 · 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

▣ 남북 접경지역 발전

- 통일경제특구 지정,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추진 등

▣ 남북 교역, 북한 개발지원 등 남북경제협력 사업 본격 추진

- 남북경협 보험 제도 개선

▣ 경제성을 바탕으로 상생의 남북경제협력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

- 남북경협 청년아카데미 추진 등을 통해 남북경협사업에 청년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

☞ 한반도평화(5대핵심약속) 15페이지 참조

한반도 평화구축을 기반으로 신남방, 신북방 정책을 연계하여 동북아를 넘어서는 평화, 번영 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 ▣ 한반도 신경제지도 추진을 통해 한반도를 동북아 평화경제협력의 허브로 발전시키고, 신남방, 신북방정책을 연계하여 대륙과 해양을 포괄하는 동아시아로 우리의 평화번영정책 외연을 확대
- ▣ 동북아 다자협력을 주도하여 공동번영을 향한 지속가능한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 추진
- ▣ 대아세안 외교를 주변 4강외교수준으로 격상하고, 인도와의 포괄적 협력관계를 확대하여 외교, 안보의 전략적 공조 강화
- ▣ 유라시아 대륙 국가들과 교통물류 및 에너지 인프라 연계를 통해 새로운 성장 공간을 확보하고 공동 번영 도모

남북 교류 다양화 · 활성화로 상생의 남북관계를 만들겠습니다

- ▣ 당국 간 협의, 민간교류와 협력 보장을 위해 개성에 남북공동연락 사무소 설치
- ▣ 역사 · 문화 · 종교 · 산림 · 환경 · 재해재난 등 다양한 분야의 남북 교류 협력 추진
 - 여성 · 청소년 · 청년 · 노동계 · 방송계 등 다양한 부문 · 계층의 남북 교류협력 추진
- ▣ 국제체육대회, 학술회의 등 국제행사 계기 접촉 확대
 - 2018년 아시안게임 남북 단일팀 추진 등 남북협력 강화
 -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 남북 공동 유치 등을 지원
- ▣ 6·15 등 의미있는 날을 계기로 민족공동행사 추진
- ▣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
 -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자율성 확대

■ 남북한 방송정보통신(ICT) 협력 활성화 추진

- 남북간 ICT 산업교류 확대
- 북한의 ICT 정보격차 해소 지원
- 북한 내 지상파방송 외에 케이블, 위성, IPTV 등 다양한 방송 플랫폼 설치 및 N스크린 등 방송통신 융합형 매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 남북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및 중계차량 등 장비 지원을 통한 교류 활성화
- 지속적이고 긴밀한 남북간 ICT, 방송 등 미디어 교류 활성화를 위한 상시 전담창구 마련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 이산가족 상봉 상시 정례화 추진

- 8.15 계기 이산가족, 친척 상봉을 성공적으로 진행
-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면회소, 제2, 제3 면회소 설립 등을 통한 대규모 상시 상봉 추진
- 화상 상봉, 서신 교환, 고향 방문 등을 추진

■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 추진

- 국군포로·납북자 생사 확인 및 상봉 성사를 위한 노력 지속

■ 북한주민의 삶의 질과 인권개선을 위한 종합적 접근

- 대북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등을 통한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 지원
- 국제공조를 통한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 유도
-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통한 정부-민간-국제기구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체계 구축

- 탈북민 특화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한 삶의 질 개선 추진
- 탈북민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 지속 추진
- 탈북민 지원 거버넌스 강화: 하나재단 역할 강화 및 지역적응센터를 지역통일센터로 전환 추진

통일공감대 확산으로 평화·통일의지를 높이겠습니다

▣ 대북정책·통일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인 '통일국민협약'(통일 약속) 체결 추진

▣ 지역통일센터 확대 설치를 통해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지역 거점 구축

— 평화·통일문제 공론화, 통일교육, 탈북민 정착지원 등 지역사회의 통일 관련 기관·단체간 협력 거버넌스 체계화

* 인천에서 설치된 지역통일센터를 조속히 광역 시·도에 확대 설치

▣ 균형 있는 평화·통일교육 확대·강화

—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공감대 확산

— 청소년 대상 평화·통일교육 확대·강화

— 통일 관련 전문인력 양성 추진 및 국제사회 한반도문제 신진 전문가 양성, 재외동포 2·3세 통일교육 강화 등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국민외교를 구현하겠습니다

▣ 국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국민여론을 외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국민외교의 정착

— 국민외교센터 설립을 통해 온·오프라인 쌍방향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개발협력외교, 공공외교 등 국민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 사업 개발

▣ 국가 간 조약체결 과정에서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자유롭고 공정한 글로벌 통상질서 확립에 적극 기여하고,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한·미 FTA 개정협상 후속조치를 통해 한·미 간 통상분쟁 확산을
방지하고, 한·미 경제협력 강화 지속 노력**
 - 한·중 FTA 후속협상의 조속한 체결을 통해 양국간 경제교역 활성화
- **세계적인 통상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FTA에 적극 대응, 한·중·
일 FTA 본격 추진**
 - 무역상대국의 부당한 보호무역조치에 대해서는 WTO 등 국제무역분쟁기구 제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

여행객 등 해외체류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영사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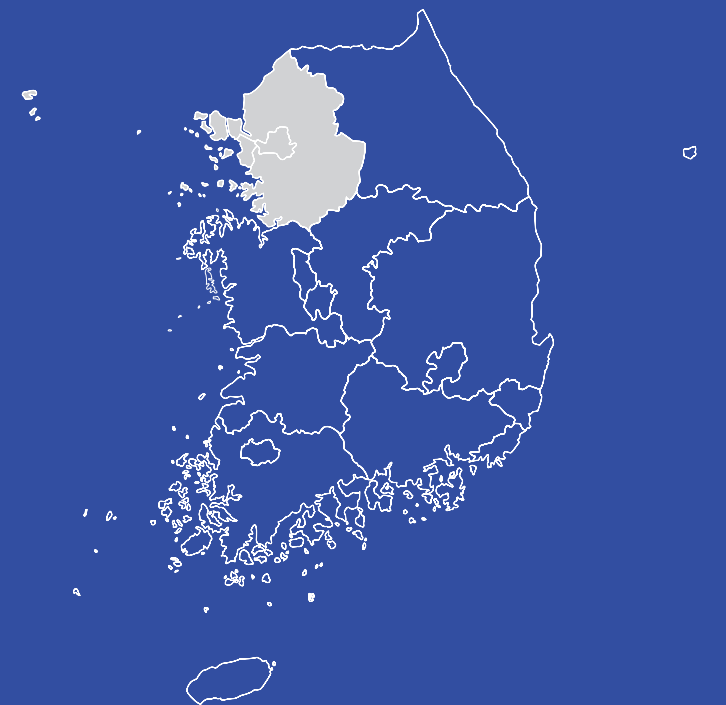
- **재외국민 보호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강화**
 -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해외안전지킴센터 운영을 통해 해외체류국민들의 상시적
보호체계 마련
 - 주요 공간에 사건사고 전담영사를 배치하고, 재외공관의 재외국민보호에 대한 책임성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특히 해외여행객 및 교민 사고가 많은 지역 공간에 실무자급 경찰 영사 파견 확대
- **재외동포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 및 역량 강화**
 -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실질적 역할 강화
 -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고 차세대 동포의 민족 정체성 함양 지원
 - 재외동포대상 한국어·역사·문화 교육기관의 운영비·교사·교재 지원 확대 및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 지원사업 추진
 - 한상네트워크와 모국 경제와의 연대강화를 통한 우리 중소기업 해외진출 및 한상
기업에 청년 취업 추진
 - 해외입양인들에 대한 모국체험기회 확대, 재외공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모국과의 연대 강화

더불어
민주당

6·13
지방선거
17개
광역시·도별
공약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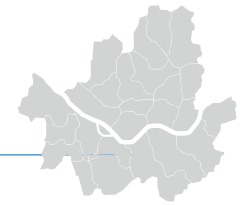
- 서울, 경기도 및 인천을 아우르는 수도권은 우리나라 인구의 50%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막대함. 한국 경제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수도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음. 또한 남북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와 인천의 접경지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 수도권에 대해서는 역내 지역간 발전의 불균형 해소를 적극 추진할 것임. 서울은 이런 지역 불균형 해결을 위해서 도심의 취약지구를 일자리 거점지구로 육성하고 전통산업 집적지구를 복합제조 및 유통단지로 재정비하도록 하겠음. 경기도는 동·서·북부에 친환경 에너지와 문화콘텐츠 클러스터, 테크노밸리를 조성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음.



- 미래성장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조성된 서울 마곡지역을 융복합 혁신거점으로 발전시키고 인천은 서운산단과 연계해서 게양테크노밸리를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겠음. 경기도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자율협력주행차 실증단지,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및 유통·활용 기반을 조성하겠음.
- 인천이나 경기도에서 서울로의 출퇴근 시간을 대폭 줄여서 직장 생활이 즐겁게 되도록 지하철 연장, 광역교통망 확충 등 교통 여건을 개선하겠음.

수도권

서울특별시



1. 시민 참여하는 도시재생 추진

-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서울형 도시재생' 모델 확산
-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저층주거지 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
- 걸어서 10분 마을 생활인프라 확보 및 열린 마을공동체 조성
 -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마을에 공용주차장 공급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 역세권, 산업단지, 국공유지, 노후 공공청사 등 서울시 내 저밀·저이용 부지 및 시설의 복합개발 추진

2. 고르게 발전하는 서울

- 도심·광역중심(영등포 여의도, 대림가산디지털, 수색·상암, 창동·상계 등 취약 지역 중심)을 일자리 혁신 거점으로 육성
- 도심 전통산업 집적지구(을지로 인쇄타운, 종로귀금속, 청계천의류단지 등)를 복합제조 및 유통단지로 정비
- 12개 지역을 광역연계형 거점도시와 생태도시로 조성 (1단계-사당, 도봉, 온수, 수색, 2단계-신내, 개화, 3단계-신정, 석수)
- 목동 등 서부지역에 혁신성장밸리(한국형 아마존 창업캠퍼스) 조성 추진
- 코엑스 잠실운동장 일대를 국제업무, 전시·컨벤션, 스포츠, 문화·엔터테인먼트가 융합된 도심형 MICE 복합단지로 조성

3. 동북권을 신경제 중심지구로 육성

- 창동 상계 지역 도시재생 시 지식형 R&D, 문화산업 중심으로 특화 추진
- 구의역 첨단업무복합단지(CT 등) 조성 및 광진구 통합청사 신축으로 동부지역 행정 지식산업 육성
- 성수 지역에 청년 소셜벤처 기업가 및 문화예술가를 위한 소셜밸리허브 조성하여 소셜벤처 메카로 육성

4. 상암·수색역세권 개발

- 은평구 '수색·종산뉴타운', 마포구 '상암 DMC', 서대문구 '가재울 뉴타운'과 연계개발을 통한 서울 서북부 중심의 부도심화 추진

5.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마곡 R&D 융복합 혁신 거점 구축

- 기업중심의 성장 지원체제로 역할전환하여 10만개 일자리, 1천 3백개 기업유치 추진
- 혁신아이디어만으로도 입주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자체 성장동력 마련(재정기반 + 기술거점 마련)
- 문화·산업·자연이 어우러진 혁신환경 조성(MICE 복합단지, 서울식물원, 문화시설)

수도권

인천광역시

1. 광역 및 내부교통망 확충을 통한 시민 교통편의 증진

-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 및 공항철도-9호선 직접 연결
- 인천도시철도 2호선 KTX 광명역 연장
- 수인선 청학역 신설
- GTX B노선 조속 추진 및 서울도시철도 5호선 검단 연장
- 인천남부순환선 도시철도망 구축 등 인천 대순환선 완성
-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남항~송도~시화 구간 조기 건설

2.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으로 남북교류 활성화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해주-개성-인천을 연결한 '남북한 삼각 공동경제자유 구역' 지정
- 영종~신도~강화 서해 남북평화고속도로(연도교) 건설
- 여객선 준공영제의 조속한 시행으로 관광객 유입 촉진
- '고려 역사문화 공동 복원' 등 남북한 문화교류사업 활성화

3.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및 원도심구간 지하화

- 공사 또는 민간자본을 통한 원도심 구간 지하고속도로 추진
-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4. 권역별 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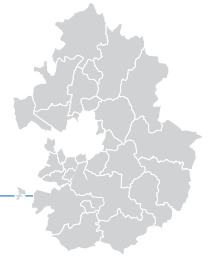
- 인천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 및 관련 산업 일자리 보호
- 계양 테크노밸리의 서운산단 연계 조성을 통한 일자리 2만개 창출
- 부평·남동·주안 국가산단의 첨단화 및 근로환경 개선 지원

5. 미군 반환부지 활용과 군사시설 외곽이전을 통한 도시재생

- 원도심 재생을 위한 미군기지 조속한 토양정화와 반환·활용
- 도심 내 군사시설 외곽이전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수도권

경기도



1.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위한 ‘경기광장’ 운영

- 경기도 행정·재정에 대한 상세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소통의 창’ 마련
- 도민과의 직접토론의 장, ‘경기광장’ 개최 상시화
-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을 시범 운영

2.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도민의 출퇴근 시간 획기적 단축

- 광역버스(M버스) 증차 및 노선 확대
- 광역교통SOC 확충 및 개선
 - 양평-서울 간, 시흥-서울 간, 성남-강남 간 고속도로 조기 개통 및 수도권 제2순환도로망 완성
 - 수서-광주 고속화철도 등 조기 착공 추진
 - 신수원선 연장 복선전철(인덕원~수원) 조기 건설 추진

3. 경기 북부 접경지역 남북교류 지원

- 파주와 개성·해주 연계한 통일경제특구 조성
- 파주의 미래형 첨단산업과 4차 산업혁명 기술 등이 조화롭게 결합하는 선진형 산업단지로 육성
-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평화공단 개념으로 조성하여 해외자본 유치 원활화

4.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시군에 한해서 사업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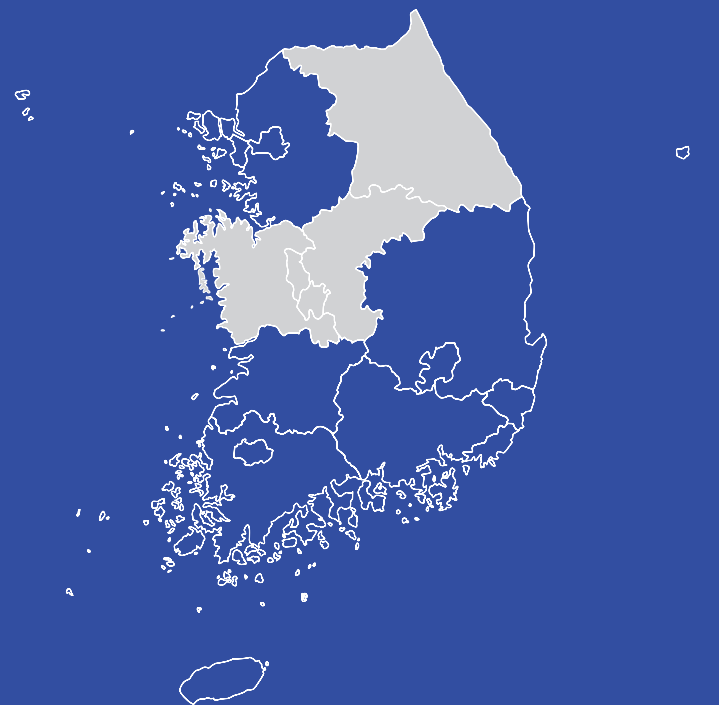
5.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 추진

- 파주, 연천, 포천 등을 포함한 북부지역에 친환경 에너지 산업체계 구축
- 고양 파주 문화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 일산 테크노밸리 중심의 3D/4D, 방송, 가상현실 콘텐츠, 첨단의료산업 등 미래 신산업 육성
-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 첨단R&D, 산업제조, 유통, 주거단지가 공존하는 첨단산업단지로 육성
-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이 IT, BT, CT, NT 등의 첨단산업 집적화 추진
- 판교 테크노밸리 육성
 -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 조성과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및 유통·활용 기반 조성

충청 · 강원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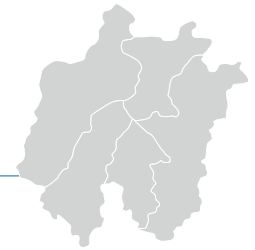
- 충청지역은 지방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거점지역으로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 중앙행정기관 이전으로 행정복합도시로서의 역할까지 부여되었음. 특히 대전은 교통의 요충지이자 R&D 중심도시로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해 나갈 지역임.
- 대전 충청지역이 4차 산업혁명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하겠음. 또한 행정복합도시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시에 스마트 기능을 부여한 시범도시로 조성하겠으며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 산업 육성에 주력할 것임.

- 강원 지역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진 지역이며 남북평화시대에 지역적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지역임. 부족한 교통여건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임. 또한 올림픽 성공개최에 기반한 관광산업과 지역 특화산업육성에 적극 나설 것이며 평화산업단지 조성 등 남북 경제협력의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겠음.



충청 · 강원권

대전광역시



1.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완성

- 유성 · 대덕-세종 접경 지역에 첨단지식산업단지 '대세밸리' 조성
- 미래 철도 ICT 산업 클러스터 조성
- 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동부권 제2 대덕밸리」 조성 방안 추진
- 도전과 혁신배움터 「실패박물관」 건립

2. 원도심을 신경제중심지로 조성

- 중앙로 「소셜벤처 특화거리」 조성
- 문재인 정부 뉴딜정책 연계 「활기찬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

3. 구 충남도청사 부지를 활용한 창의문화예술 도시재생

- 구 충남도청사 및 구 도경부지를 창의문화예술 지구 및 메이커스페이스로 조성
 - 도청사본관을 어린이전용도서관, 로봇공작과학실험실, 어린이극장으로 조성
 - 도청사 광장을 야외 공연 · 상설 전시장, 가족공원으로 조성
 - 도경찰서 부지를 문화예술인 창작공간, 공연장 전시장으로 활용
- 중앙로 일대를 '근대역사문화거리'로 도시재생
 - 음악, 영상, 공예, 맛, 사색의 5색5로 프로젝트 실행
 - 예술영화전용관, 음악창작소 설치

4. 대전형 센트럴파크 '둔산 그린로드'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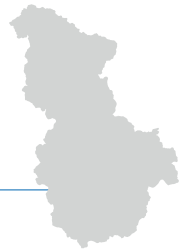
- 보라매공원-시청남문광장 녹지 연결(1차)
- 시청-샘머리공원 연결(1차)
- 정부청사-한밭수목원 연결(2차)

5. 보문산 일원 '가족 1박2일 관광단지' 조성

- 뿌리공원, 무수동 일대 예와 효문화 체험 교육시설 확충
- 워터파크(동계 스케이트장 활용) 및 숙박시설 건립
 - 한옥형 호텔, 소규모 자연친화 가족형 콘도, 피크닉 시설
- 오월드, 뿌리공원, 플라워랜드 등 기존시설과 인근지역 가족친화 공간 확충 연결

충청 · 강원권

세종특별자치시



1. 국회분원 설치와 행정기관 추가 이전으로 행정수도 완성

- 국회세종의사당(국회분원) 설치
- 감사원, 여성가족부 등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위원회 등의 추가 이전

2. 세종시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

- 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 완공 및 세종-안성구간 6차선으로 추진
- 세종시와 주변지역 간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 중부권 생활권 조성을 위한 충청권 광역 철도 2단계 구간 조기 건설

3.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스마트시티 및 국가산업단지 조성

- 국가 정책방향에 맞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및 스마트시티 산업 육성
-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혁신생태계형 국가산업단지 조성

4.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기능지구 활성화로 자족기능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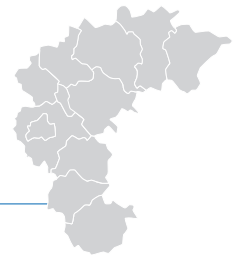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 확대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위한 차질없는 예산 확보

5. 국립행정대학원 설립

- 국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정책 수립 지원과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립행정 대학원 설립
- 2018년 설립 기본계획 수립 및 선정 절차 완료하여 2021년 개교 목표로 추진

충청·강원권

충청북도



1. 강호축을 남북평화의 축으로 발전

- 강호축 연결 고속교통망 구축 - 충북선 철도 고속화 등
- 강호축에 산업단지 조성 및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집적화
- 백두대간 문화 관광 쉼터 조성

2. 중부고속도로 확장 및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완공

-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구간의 단계적 조기 확장
-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완공

3. 충북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벨트 구축

-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
- 천연물산업 종합단지 조성
- 충주 당뇨바이오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4. 국립 스포츠테마타운 및 국립무예진흥원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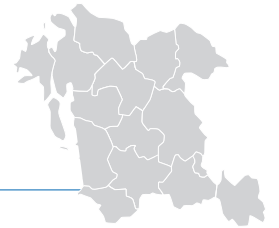
-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연계 스포츠테마타운 조성
- 충주 국립무예진흥원 설립

5. 금강수계 미호천, 국립묘목원 생태·휴양벨트 조성

- 미호천 1급수 유지
 - 생태숲·정원·습지·쉼터 조성
- 옥천 국립묘목원 조성(천연신소재 묘목연구·생산단지 조성)

충청 · 강원권

충청남도



1. 천안 · 아산 KTX 역세권을 연구개발 집적지구로 조성

- 국내외 대학교 및 대학원, 기술전문학교, 각종 연구소, 테스트베드, 각종 첨단 산업기업, 테크노경영(MOT)센터, 산업디자인센터, 외국어지원센터, 무역 · 마케팅센터 등 종합 유치
- 천안의 One-Stop 첨단산업단지, 아산당진의 국제항만 조성, 서산/청주의 공항 활성화를 통한 산업국제무역라인 조성

2.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

- 내포신도시를 신성장 산업의 혁신도시로 지정하고 환황해권 핵심거점으로 육성
- 전국의 공공기관 중 환황해권 혁신거점 육성 취지에 부합하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이전 추진

3. 충남 서해안 해양신산업 육성 및 지역 항만 경쟁력 강화

-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 태안 해양관광 테마파크 조성
- 평택 · 당진항 진입도로(신평~내항간) 개설

4. 논산 · 계룡에 국방산업단지 조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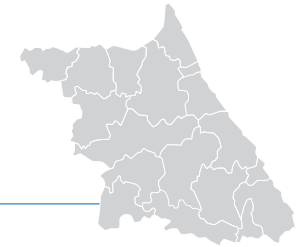
- 국방과 민간기술을 융합하는 민 · 군기술협력체계 활성화 적극 지원
- 민군겸용기술 창출 및 개발, 기술 실용화 및 이전을 통한 방산기업 맞춤형 지원
- 민군기술 정보교류를 위한 민군과학기술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5. 한국 어촌민속마을 조성사업

- 태안군의 전통 민속자원 보전을 국가적 선도모델로 육성
- 고남패총박물관 확장 및 패총 발굴지 · 독살 · 자염 · 김살 · 낭장방 등 복원 추진
- 근대 어촌가옥단지 보존, 전통어업 생활 및 귀농귀촌 타운 조성

충청·강원권

강원도



1. 동계올림픽 성공을 기반으로 세계 속의 평화관광 1번지 육성

- 2021 동계아시안게임 유치(남북 공동개최)
- 올림픽 유산(강릉~평창~정선) 관광벨트 조성 및 관광콘텐츠 개발
- 동해안 해양관광, 설악~오대산권 등을 연계한 국제관광 상품 개발

2. 남북한 경제협력 및 교류의 선도지역으로 육성

- 금강산~비무장지대~설악산 연결 국제관광단지 개발
 - 설악산 및 고성 통일경제관광지구 개발
 - 설악산관광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연계 개발
 - 설악~금강권 관광자유지대 조성
-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
- 통일 SOC 조성
 - 동해북부선(강릉~제진) 및 경원선 복원
 - 대구~원산간 고속도로의 춘천~철원 구간 건설사업 등

3. 강원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통여건 개선 추진

- 동서고속철 차질 없는 건설 추진
- 경춘고속도로 통행료 추가 인하
- 제천~삼척 고속도로 추진

4. 지역맞춤형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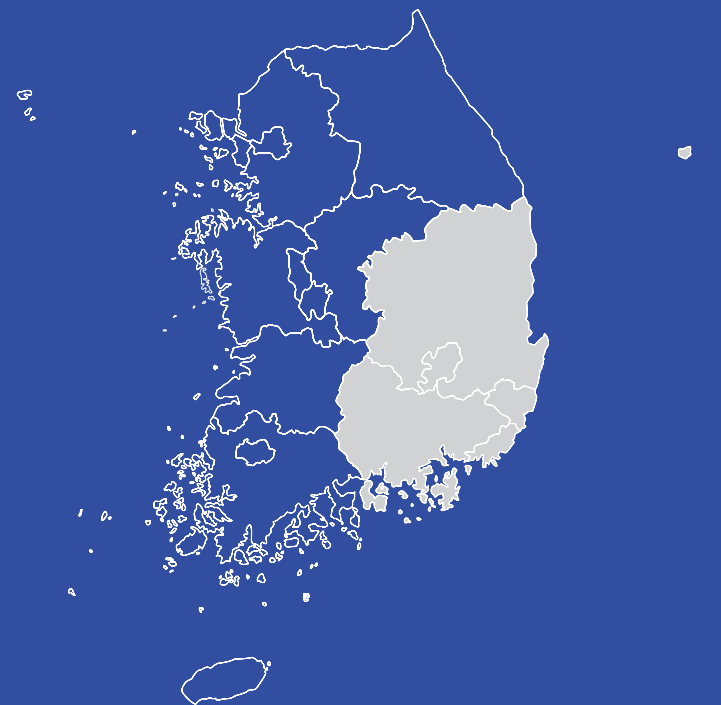
-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지원
 - 수열에너지 공급 및 수상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을 통한 국내 최초 탄소제로 산업단지 계획 추진
- 원주 디지털 헬스케어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원
- 강릉·평창·정선 등 올림픽 특구 활성화를 통한 강원도형 스마트관광산업 육성

5. 폐광지역 특화(대체)산업 육성

- 태백·영월·정선·삼척 등 폐광지역 주민참여형 특화산업 육성 지원
- 강원랜드의 폐광지역 개발기금 납부비율 상향 조정

영남권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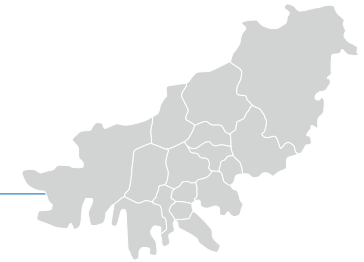
- 영남권은 철강, 조선, 기계 산업 등 중공업이 발달한 지역임. 하지만 최근 조선업 경기 침체와 이와 연계된 기계산업 불황으로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또한 역내 지역별 불균형 발전은 해결해야 할 과제임
- 조선업, 철강, 기계산업 위주인 산업구조를 바꾸기 위하여 김해 양산에 의생명 클러스터 조성 같은 혁신형 신산업 육성에 전력을 기울이겠음. 또한 기존 조선업을 관광상품화 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음. 영남권의 대표적 특화산업인 항공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것임



- 권역 내 교통망 확충을 위하여 김천에서 경남 주요지역을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를 조기에 착공하여 역내 균형 발전을 실현할 것임.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경남의 발전을 위하여 지능형 농산업과 스마트 기반의 향노화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음
- 부산의 북항 통합재개발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과 대구의 낙후지역 뉴딜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추진할 것임

영남권

부산광역시



1. 대륙과 바다를 잇는 동북아 해양수도로 위상 강화

- 해양수도 추진 거버넌스 구축
- '한동해권 경제벨트'의 거점과 유라시아 게이트웨이의 기·종점으로 육성
- 북방경제·물류협력사업 활성화 지원
- 물동량 급증, 선박 대형화 등 해운항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항 확장 추진
- 해운항만업 금융지원을 위한 '한국해양진흥공사' 기능 강화

2. 부산의 국가혁신클러스터 통합 및 육성

- 국가혁신클러스터 정책 및 혁신도시 시즌2와 연계하여 북항 일원을 중심으로 3개 혁신지구(동삼·센텀·문현혁신지구)와 연계한 혁신클러스터 구축
- 동삼혁신지구와 연계한 무인 자율운항선박 핵심 기술 개발 중심의 신해양산업 지원
- 센텀혁신지구 연계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 및 문현혁신지구 연계 금융클러스터 육성
- 국가혁신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한 부산형 청년 일자리 창출

3. 북항 일원 통합재개발

- 북항 재개발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입주 업체에 조세 및 각종 부담금 감면 혜택 부여

- 4차산업혁명 기반 북항 스마트 마린시티 건설

- 청년문화타운 조성 등 청년문화허브 구축

-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이전 및 재배치

4. 시민이 참여하는 부산시정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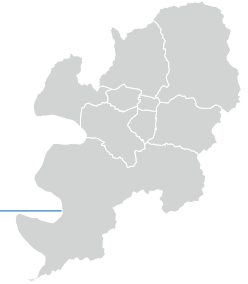
- 소통·투명 시정을 위한 시민청원제 도입과 개방형 감사관제 활성화
-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기존 부실병원 인수를 포함한 공공병원(보험자병원 포함) 확대 추진,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 등 부산 핵심 현안의 협치를 위한 '시민 협의회' 구성
- 글로벌 도시 기준 마련을 위한 외국인시민위원회 설치
- 부산형 분권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보충성 원칙 준수 및 시장-기초자치 단체장 자치회의 정례화

5. 부산형 도시재생 뉴딜 추진

- 도시재생 민·관 협치 시스템 구축
- 이웃과 함께 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향으로 사업추진
- 기존 사업예산과 결합하여 추진하는 주민 주도의 조립형 예산 시범사업 추진
- 북항통합개발 사업과 원도심 재생사업 연계

영남권

대구광역시



1. 대구공항을 지역거점공항으로 육성

- 지역사회공동체의 합의로 대구공항문제 조속한 해결

2. 2군사령부 등 군부대 및 군사시설의 이전

- 군부대 및 관련 시설 이전으로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계획 수립
- 동구 혁신도시, 율하 첨단산업단지, 동대구 역세권 등 동구와 수성구를 클러스터로 묶어 대구 동부권을 영남권 최대의 '혁신성장 전초기지'로 육성

3. 글로벌 물산업 허브도시 조성

- 낙동강수계 생태환경복원 프로젝트 조속한 추진
- Smart Water System 구축과 국립 물융합체험관 설립
- 취수원 이전 문제 조속한 해결

4. 낙후지역의 재생을 위한 리노베이션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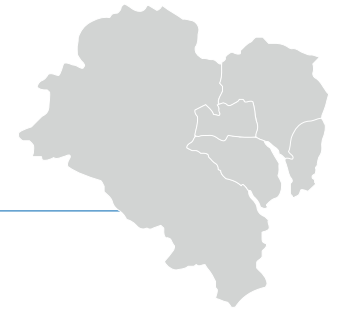
- (구) 경북도청 부지에 시민을 위한 문화·행정·경제 복합 공간 조성
- 도심 공동화 및 쇠락화 극복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New Deal)사업
- 경부선 도심 통과 구간 복개 개발 사업 추진

5. 철도물류 육성으로 동남권역경제 활성화

- 서대구역세권 개발
- 대구산업선철도 건설 추진
- 대구경북 광역철도 건설 지원

영남권

울산광역시



1. 도심 우회 동서축외곽순환도로 건설

- 울산 외곽순환도로 확충

2. 울산 산업단지 안전성 향상

- 산업단지 통합 파이프랙 구축
 - 노후화된 지하관로 대신 지상에 통합 파이프 설치·관리
- 지하배관 관리 전담기관 설립
 - 국가산단 안전진단 및 결과에 따른 개보수 사업비 지원으로 안전성 확보

3.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 추진

- 송정역~울산역~삼산로~문수로~울산대~굴화 구간 건설 추진

4. 원전 안정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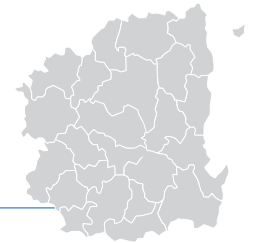
- 원자력시설 해체 종합연구센터 설립 추진
- 대형 복합재난에 대비한 예방연구와 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재해 재난관리 클러스터 조성

5.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 조선해양플랜트 연구원 설립 추진
-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조선해양산업분야 중소기업 기존 공정 개선 지원
- 스마트선박 핵심 운영체계인 플랫폼 기술 개발 지원

영남권

경상북도



1. 거점별 성장주도 산업클러스터 조성

- 경북의 지역전략산업인 자동차부품, 기계산업 등과 연계한 영주 거점의 첨단 베어링산업 육성
- 영일만 신항 내 산업단지, 전기자동차관련 업종들에게 무상분양
- 포항공대 내 전기자동차 산업 관련 인재 집중 육성 및 발전적 연구인력 보충 확대 지원

2. 백두대간 산림문화 클러스터 조성

- 국립 백두대간수목원을 중심으로 백두대간 종자증식을 위한 임업클러스터 조성
- 국가 산림문화자산지정을 확대하고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 추진

3. 동해안 친환경·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 수소연료전지 파워 밸리 육성 지원
- 울진 해양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지원

4. 낙후된 경북 북부 지역의 교통망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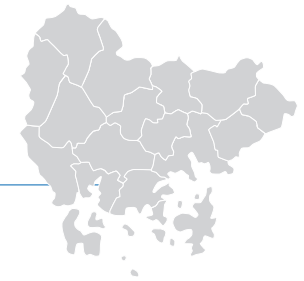
- 영양, 봉화를 관통하는 6축 고속도로(영천~태백) 착공 추진
- 낙후된 철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중앙선의 영주~안동~경주 구간의 고속화 사업 추진
- 중부내륙지역과 남해안지역을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수서~충주~김천~진주~거제) 추진

5. 지역 특색을 반영한 관광문화의 특화

- 경북 3대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밀착형 활용센터 조성
- 포항 등의 철강산업과 예술을 융합한 세계적 수준의 철강 아트 갤러리 조성
- 경주 보문관광단지를 중심으로 한 경북 MICE 관광특구 지정 추진

영남권

경상남도



1. 김천~거제 간 남부내륙철도(KTX) 조기 착공 추진

- 김천, 합천, 진주, 사천, 고성,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의 임기 내 착공

2. 지역 신성장동력으로 항공우주산업 적극 육성

- 사천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항공산업국가산단) 조기 조성 및 융·복합화 촉진
 - 특화단지 조성지원 및 고도화, 지원기반 구축 강화
 - 무인항공기특화단지(무인기 산업클러스터) 조성
 - 무인항공기 통합시험 및 훈련센터 구축
- 항공MRO(Maintenance, Repair, Overhaul)사업 지원으로 경쟁력 확보 및 항공 관련 인력(개발, 정비) 육성
- 항공CT융합 클러스터 조성 및 시험평가 기반구축
- 항공산업 인력양성 지원

3. 김해·양산의 의생명 클러스터 조성 및 창원 소재부품 산업 육성

- 김해는 메디컬디바이스 중심, 양산은 첨단 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바이오 헬스 산업지원으로 의생명 특화단지 조성 및 관련 산업 육성
- 소재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고효율 파워유닛산업 육성, 스마트부품 IoT 융합 특화단지, 스마트제조기반 생산혁신 클러스터, 첨단 센서산업 클러스터 조성 추진

4. 거제·통영·진해·사천을 동북아 해양관광 중심지로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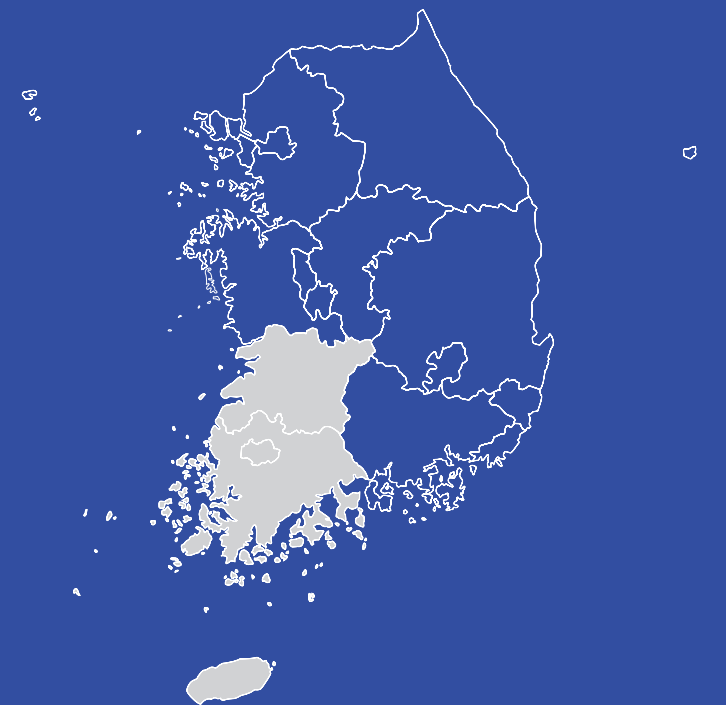
- 거제, 통영의 폐조선소, 특수선 건조 현장 등 조선산업을 활용한 산업관광의 고도화 지원
- 사천공항을 항공레저 산업 중심으로 육성하고 남해를 해양과 어촌체험관광위주 개발 지원

5. 경남 서부권의 재설계로 역내 경제 활성화

- 고기능 식품, 뷰티, 바이오 기업 및 헬스케어, 헬니스 등 항노화기업 육성
- 4차산업혁명과 연계한 지능형 농산업 테스트베드 기능 지원 및 스마트 팜 적용으로 청년 농업인 창업 활성화 지원

호남 · 제주권 광주, 전북, 전남, 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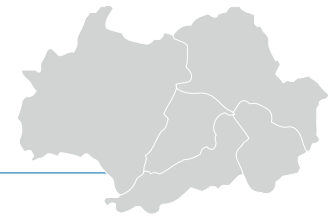
- 호남 · 제주권역은 민주화 운동과 인권을 상징하는 지역으로 민주화 정신의 완성을 위하여 5·18 진상규명을 완벽하게 할 것이며 4·3 관련 특별법 개정으로 화해와 상생의 제주로 만들것음.
- 광주를 중심으로 친환경 수소차 및 전기차 등 자동차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이며 한전과 연결된 에너지 신산업 및 탄소 소재부품 산업 등에 투자를 강화하여 호남 지역의 미래먹거리로 만들것음.



- 새만금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글로벌 물류허브로 조성하겠 으며 농업의 스마트화를 통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것임. 지역의 뛰어난 자연환경을 활용하는 관광산업 지원도 확대하겠으며 풍부한 해양자원을 이용한 해조류 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용 해조류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음.
-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및 하논분화구 복원추진으로 제주를 동북아 환경수도로 육성할 것임.

호남 · 제주권

광주광역시



1. 광주정신 계승사업 지속

- 국가차원의 5·18 진상규명 활동 실시 및 완벽한 5·18 진상규명
- 정부와 군 등이 보유한 5·18 관련 자료 폐기 금지법 제정 추진
- 5·18 광주민주화운동 국가보고서 발간 및 형법 개정(포괄적명예훼손법 도입)을 통한 5·18정신 훼손 및 명예훼손시도 엄벌
- 한국 민주주의전당 건립
- 국가폭력치유센터 건립
- 민주인권평화 교육 및 문화 활동 복합 공간 조성

2. 친환경자동차선도도시 및 생산단지 조성

- 빛그린 국가산업단지에 융합전장분야 핵심기술개발 및 공동활용 장비구축 등 전장부품산업 기반 구축
- 친환경 전기차, 수소차 기술개발을 위한 글로벌 산업생태계 및 실용화단지 구축
- 친환경 청정에너지 보급 및 전기차, 수소차 산업기반 조성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정상화

- 아시아문화전당을 창의콘텐츠 플랫폼으로 조성
- 5대문화권 사업 추진을 통한 도시재생 및 관광산업 활성화
-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 및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연장

4. 지역특화 산업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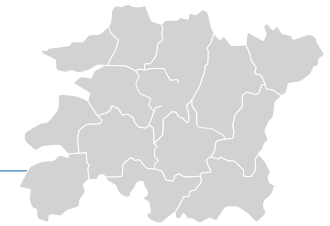
- 도첨산단에 에너지산업 산학연 혁신클러스터 조성, 광주형 스마트에너지시티 실증단지 구축 등을 통해 광주의 미래 성장동력 육성
- 광융합기술 기반형 원천기술 개발, 초연결 기반 광·의료통합 플랫폼 구축, 공기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광융합·전자산업의 새로운 경쟁기반 구축
- 의료산업 복합단지조성, 인력양성,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산업 기반을 확대하여 기업들의 성장역량 강화

5. 광주형 일자리 혁신 상생모델 전국 확산 지원

- 광주형 일자리 혁신 상생모델의 전국 확산 및 성공 모델 조기 창출 지원
- 노사상생형 산업생태계 실현을 통한 지역 주력산업의 활력 제고와 제조업 활성화 지원

호남 · 제주권

전라북도



1. 아시아 대표 스마트 농생명 밸리 조성

-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푸드랜드 건립
-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 청년이 찾아오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 미생물기반 바이오산업 거점 조성
- 바이오 동물의학품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사료전문생산시설 구축
- 서해 황금어장 복원 프로젝트 추진
- FAO 세계미래식량연구소 설립제안 및 유치활동
- 민간육종단지 확장 및 종자가공처리센터 구축
- 간척지 첨단 농업연구소 건립 추진

2.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로 육성

-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 :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조성
- 사회적경제 혁신파크 조성

3. 지역특화산업으로 탄소 소재부품 4.0 등 지원

-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 해상풍력과 상용차 산업 등 탄소복합재 수요산업(안전 용복합 제품산업 등)과 연계한 전후방산업 클러스터 조성

- 전기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구축
- 소형 무인 해양시스템 실증플랫폼 구축

4. 국가주도 새만금 사업 조기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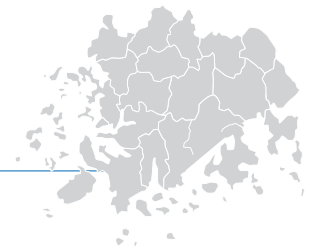
- 국가(공공기관)가 주도적으로 조기 매립해 새만금 기업투자여건 조성
- 용지조성과 함께 필요한 SOC 구축
- 적정 규모의 신항만 개발
- 신산업육성 국가 R&D 실증 테스트 베드 조성
- 국제공항 · 신항만과 배후단지 조성 및 물류교통망 구축

5. 대한민국 대표, 한국체험 1번지로 조성

- 전라천년문화권 광역관광 개발 추진
- 익산 · 공주 · 부여를 잇는 백제역사문화벨트 조성
- 노령산맥권 5개 시 · 군(정읍시, 순창군, 고창군, 담양군, 장성군) 휴양 치유벨트 조성
- 기술상용화 및 기업지원시설 등 인프라 구축(소리융합기술상용화지원센터)
- 국립치유농업원 조성
-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

호남 · 제주권

전라남도



1. 서남권 해조류산업 클러스터 및 해양치유단지 조성

- 국내 최초 김,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 중심의 해양헬스케어 기반 해양치유단지 조성 및 바이오 융합산업 육성
- 수출용 해조류 클러스터 구축

2. 조선산업 수리 · 개조형으로 특화 및 육성

- 해경 2정비창 유치 등을 통해 수리조선 특화산단 조성
- 요트, 호버크래프트 등 해양레저용 선박 제조 특화로 중소형 조선산업 육성
- 레저 선박 부품기자재 고급화기술 기반 구축 지원

3. 동력분산식 열차(Electric Multiple Unit) 철도차량 정비단 유치

- 남해안철도(목포~부산)와 전라선 고속화(익산~여수), 호남선 고속화(광주송정~목포)에 따른 EMU 철도차량정비단 유치

4. 친환경 전남 푸드플랜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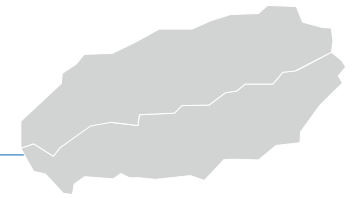
- 도민과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남푸드플랜을 수립하고, 국가푸드플랜에 반영
- 생산자, 소비자, 지자체가 참여 하는 '전남푸드플랜위원회'설치
 - － 친환경 농식품 자급률 및 분과별 계획 수립
 - － 바른먹거리 확산 캠페인, 교육 및 식생활개선사업 추진
-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호교류
 - － 공공급식에서 친환경 농식품 사용 비율 50%까지 확대
 - － 다품종 소량생산, 기획생산, 중소가족농 협동조합 배려
 - － 산지 안전성검사, 안전 식재료 지킴이 운영

5. '6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인프라 구축

- 전남관광공사 설립 통해 전남을 한류관광의 허브권역으로 도약
 - － 전남문화관광재단을 전남관광공사와 전남문화재단으로 분리
- 남도한식 전국망 지원 및 남도한식 외식사업 지원
 - － 전남 음식문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 － 전통음식체험관 조성
 - － 남도음식 체인 · 프랜차이즈를 위한 표준화 · 규격화 등 외식산업육성기반 마련
 - － 미각여행 관광상품 개발
- 관광 산업화 지원 및 관광벤처기업 육성
 - － 여행과 평생교육이 결합한 실버여행학교 도입 추진
 - － 전남 통합관광교통패스 도입 (대중교통 이용, 관광지 할인 등)
 - － 중소벤처기업 대상 인큐베이터 공간인 관광벤처보육센터 설치

호남 · 제주권

제주특별자치도



1. 화해와 상생의 제주

- 4·3 관련 특별법 개정(진상규명, 명예 회복, 피해 배·보상)
- 4·3 평화인권 연구 기능 활성화 및 전문가 육성
- 4·3 평화인권센터 조성 및 기록물 유네스코 유산 등재 추진

2.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

- 국방, 외교를 제외한 분야로 자치권 확대
- 제주지역 유권자의 1%이상 참여로 자치입법권인 조례 직접 제안 및 제출 가능토록 추진 (현재기준 적용 시 제주지역 유권자 수 527,210명 중 5,273명 이상)

3. 제주를 동북아 환경수도로 조성

- 10년 단위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총량제> 설정 등에 대한 법제화
-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추진 및 하논분화구 복원추진
- 환경중심도시에 대한 정의 및 추진 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컨트롤 타워로서 도산하기로 <세계환경중심도시지원센터> 설치

4. 해양 특화 산업 집중 육성

- 해양관광거점형 마리나항 조성 사업 추진
- 제주신항만 조기 건설 및 개항
- 해중생태관광공원 및 해양레포츠지원센터 설치
- 해양폐기물 수거 선박 건조 및 제주청정해역보존사업 확대

5. '제주의 문화'를 살린 문화창조산업화 지원

- '탐라문화권 정립사업'의 국가차원의 지원
- 지역특색이 발현된 건축문화경관 조성을 위한 지역토착건축문화표준화 모델링 사업 추진
- 제주어 세대전승을 위한 대대적인 제주어살리기 운동 전개
- '제주학센터'를 '제주학 육성지원 센터'로 확대 본격적인 지역학 육성·지원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 성장 · 변화 · 공정 · 평화의 나라 —

발행처 더불어민주당
발행인 추미애
편집인 김태년 홍익표
기획 김종수(담장) 김길돈 김우철 김재수 민연태 위성백 정길채 조원준 김계은
만든이 이한규 김영길 김영선 김영훈 김용식 김일환 김진영 김혜연 서승원
심언미 안정상 유재수 윤종석 이현진 이호경 진승호 채규영 홍성대
행정지원 김지영 김금일 조종운 황민수 이혜영
주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7 민주당사
전화 02-784-4582
발행일 2018년 5월 21일
편집 디자인 · 인쇄 KPBooks

나라다운 나라 튼튼한 지방정부

성장·변화·공정·평화의 나라



9 788993 721300

ISBN 978-89-93721-30-0

값 15,000원

KPBooks | 서울 중구 충무로 29 아시아미디어타워 705호

본 공약집은 공직선거법 제138조 2의 규정에 따라 제작되었습니다.